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16-01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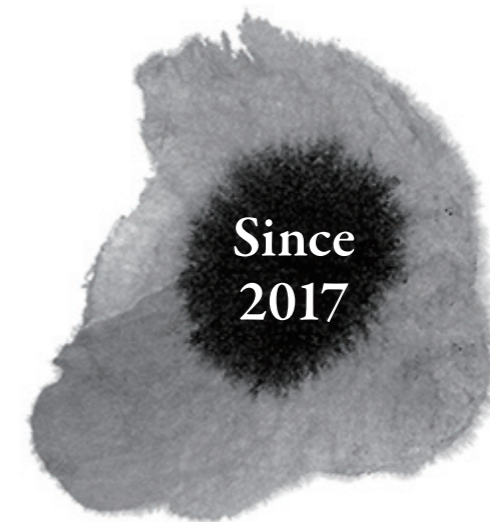


# 모두를 위한 씨앗입니다

2017년 7월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작은 밑알이 되었습니다.

5년간 씩씩이 달려온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의 칠흑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 도약, 상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함께 가꿔갈 희망의 싹입니다

##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벤처·중소기업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손실보상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등 긴급 금융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1,033만 명, 16.2조 원 지급

\* 소상공인 대상  
4차례 재난지원금 지원



방역지원금 지급(1·2차)

약 13.2조 원(2021~2022년) 지급 예정

\* 304.6만 개사 3.05조 원 지급  
(2022년 2월 21일 기준)



세계 유례없는 손실보상금 지급

약 8.4조 원(2021~2022년) 지급 예정

\* 66.2만 개사, 1.95조 원 지급  
(2022년 2월 2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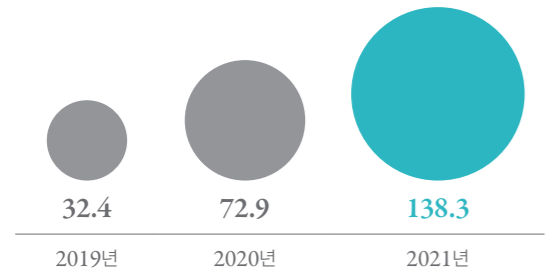
# 회복과 도약의 가지입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로의 전환과 제로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권르네상스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동행세일 등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단위: 만 개,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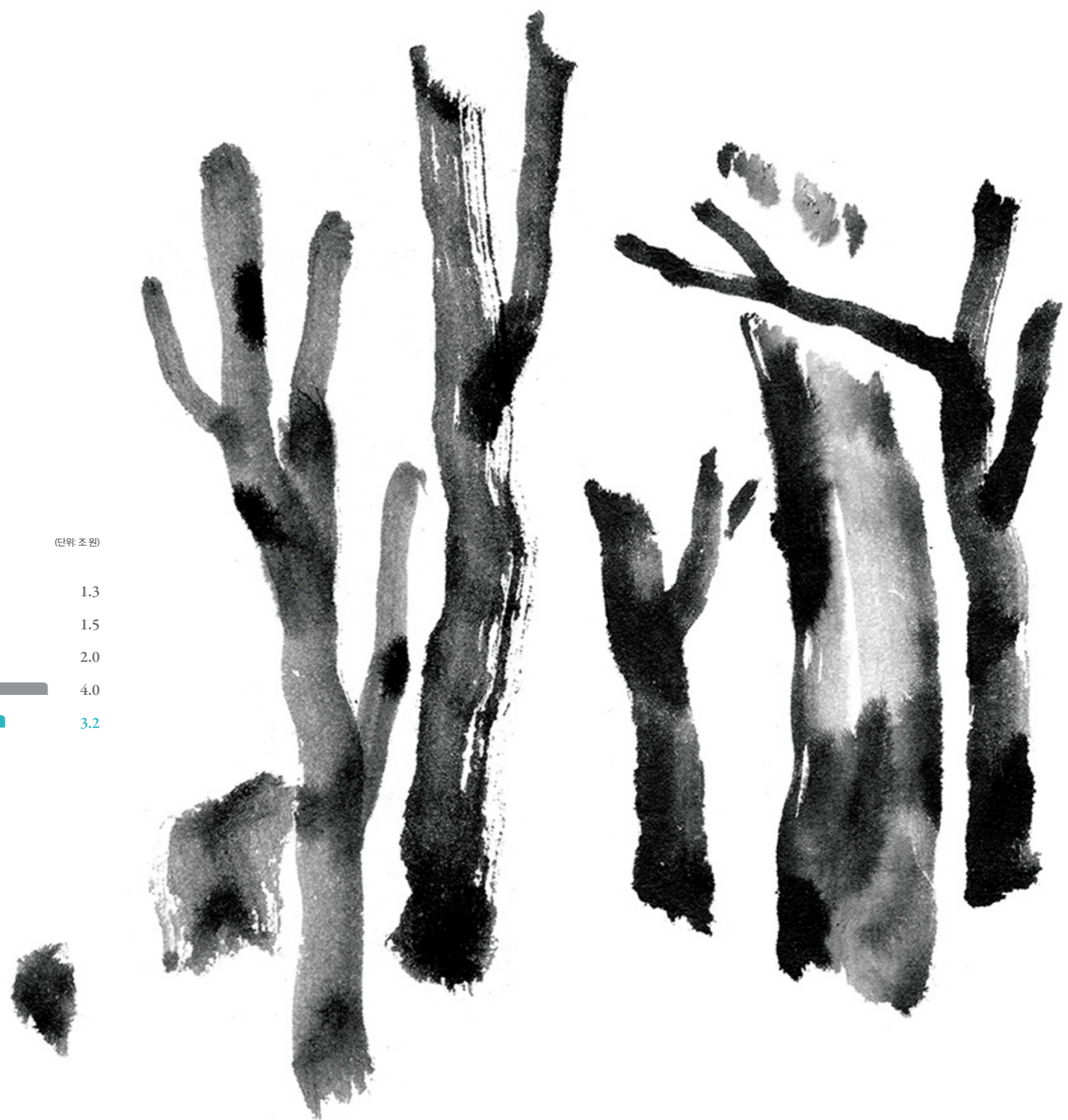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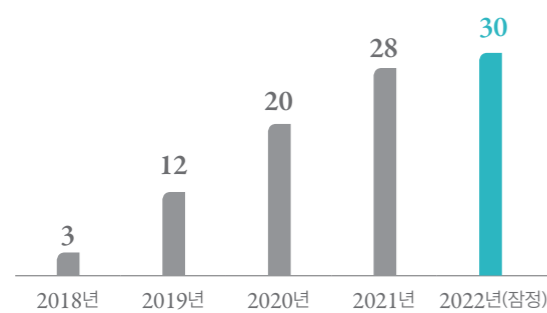
가맹점 증가 추이



온누리상품권 발행 추이 (단위: 조 원)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 수 (단위: 곳,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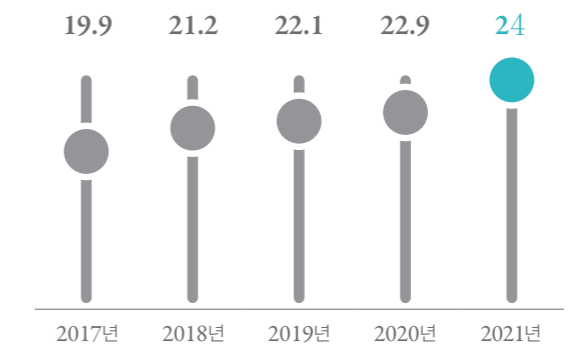


# 국민과 함께 피워낸 혁신의 꽃입니다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신설 법인, 기술창업, 청년창업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TIPS)을 대폭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2벤처붐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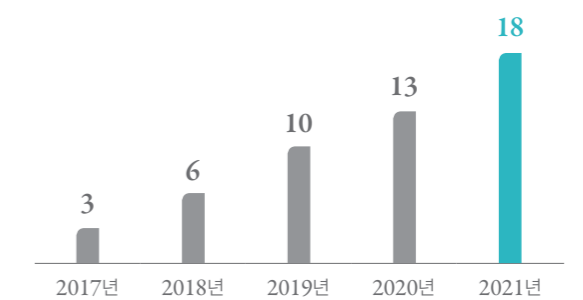
신규 기술창업 증가 추이 (단위: 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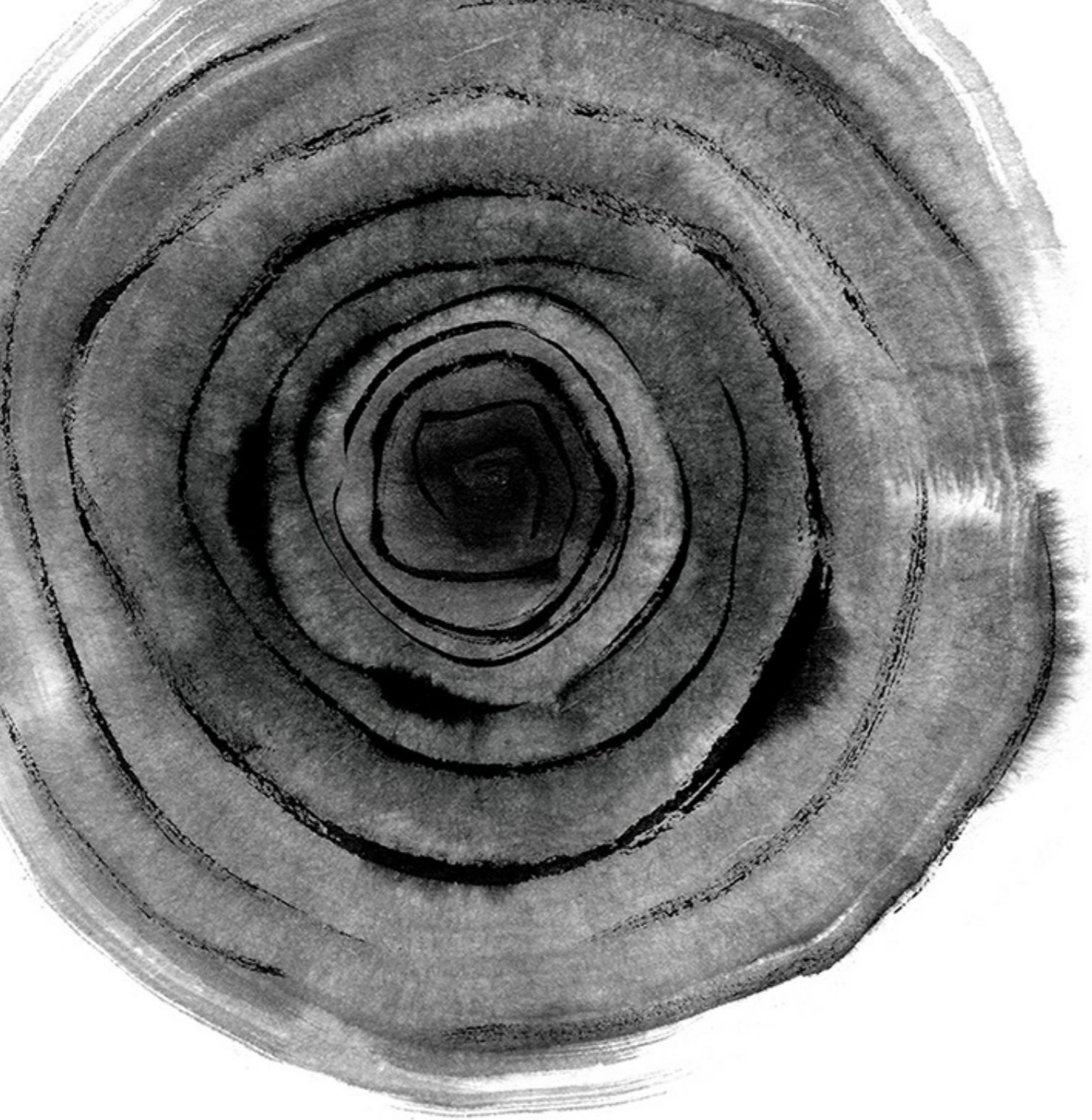
신규 벤처투자액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기업 증가 추이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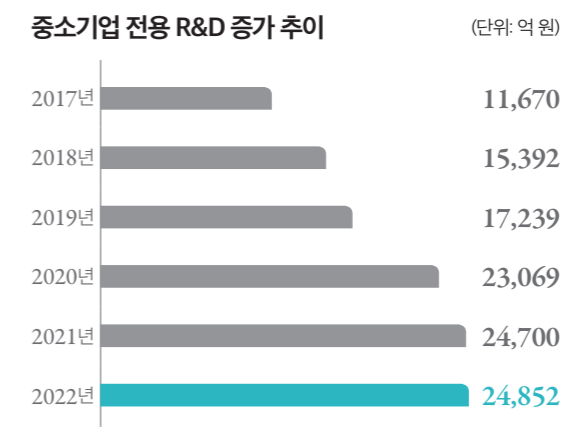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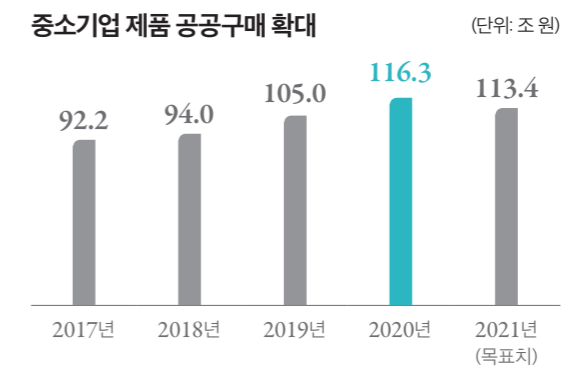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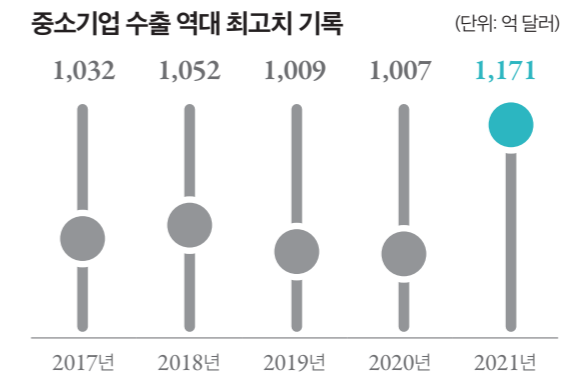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뿌리입니다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한류 열풍, K-뷰티, K-방역 등의 선전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버팀목으로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와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내일채움공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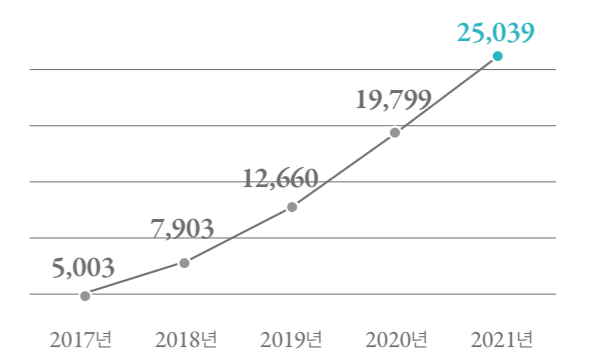
# 올곧게 뻗어갈 성장의 나무입니다

##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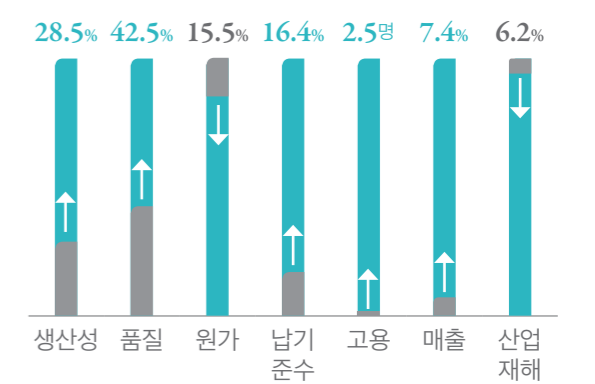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까지 약 2.5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고도화를 위해 AI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하는 등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 6차례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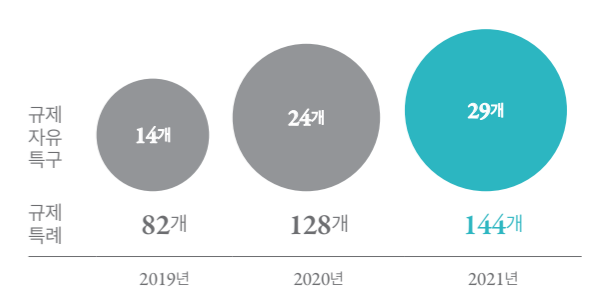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단위: 개, 누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주요 성과 (단위: %, 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확대 (단위: 개,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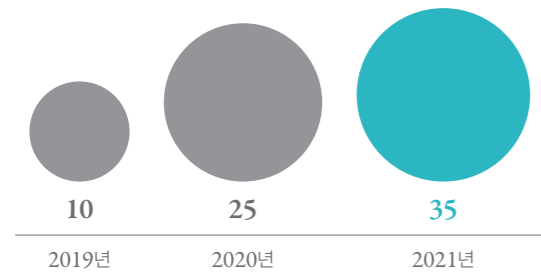
# 함께 이뤄갈 상생의 숲입니다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자상한기업을 발굴해 총 35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약 123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K-방역의 선봉에 선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부장 상생 모델 등 새로운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했고, 상생결재액도 4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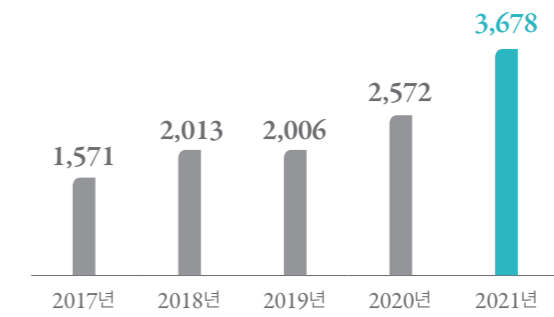
## 자상한기업 협약 체결

(단위: 개,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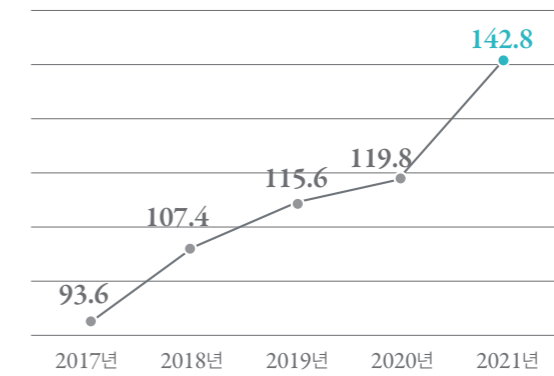
##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 상생결재액 연도별 실적

(단위: 조 원)



## 권철승 장관

2021.02.05.~  
현재

# 국민과 함께한 1,679일의 기록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저 또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서민 경제의 최접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창업·벤처·중소기업까지 180번 넘게 현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술 창업은 24만 개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 신규 벤처투자액도 77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전체 고용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2020년 동기 대비 약 6만 7천여 명이 증가한 7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는 2000년대 초반 제1벤처붐을 넘어, 새롭게 도래한 제2벤처붐이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은 수출 부문에서도 전 세계 물류대란, 코로나19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진단 키트를 포함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모두 고르게 호조세를 보이면서, 2021년 중소기업 수출 신기록인 1,171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2021년 한 해 동안 43,7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정부업무 평가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늘 그래왔듯이 도전 정신과 열정,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새롭게 도약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속해서 국민들과 함께 더 열심히 될 것입니다.



한편 2020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와 방역조치 장기화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9.4조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과 1·2차 방역지원금, 세계 유례없는 손실보상, 방역물품지원금 및 긴급금융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늘 그래왔듯이 도전 정신과 열정,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새롭게 도약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속해서 국민들과 함께 더 열심히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백서라는 기록이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중소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철승



김부겸 국무총리



## 대한민국 경제 '추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선봉장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과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7월 26일 신생 부처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대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많은 기술독립을 이뤄내는 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등 악재들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1,171억 달러를 기록했고,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인 7.7조 원을 이뤄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4조 원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그 결실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위해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5주년 백서 발간은 출범 후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돌아보고, 부처의 비전과 향후 정립해야 할 미래상(像)을 규정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추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초대  
홍종학 장관

2017.11.21.~  
2019.04.07.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경제 선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그간의 정책노력을 담은 백서 출간을 축하합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경제 패러다임의 실천을 위해 신설되었고,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따뜻한 대변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대기업은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세계화의 여파로 대기업의 성과가 다른 부문에 전달되는 효과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지원정책을 하나하나 재검토했습니다.

창업과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화를 촉진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으로서의 전환을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 혁신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해 창업·벤처 혁신 생태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등 생산성 향상과 수요 기반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노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만나 한국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낸 중소벤처기업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여세를 몰아 다시 한 번 혁신 경제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홍종학

## 제2대 박영선 장관

2019.04.08.~  
2021.01.20.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2대 장관 박영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저의 메시지를 백서에  
담아 인사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 9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작지만 연결하면 강한 힘이  
된다'라고 외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  
자분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수출, 벤처투자 등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모로 중소·벤처기업들의 활약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기 전에 늘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이 연결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았고,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 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스로 더 많이 변화하고, 작은 것이 연결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다시 한 번 중소기업부의 5주년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2대 장관 박영선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PART1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28

**출범 배경**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중소벤처기업부

30

**중소벤처기업부 연혁**  
국민과 함께 달려온 중소벤처기업부

32

**사진으로 보는 중소벤처기업부 5년**  
회복, 도약, 상생의 릴레이

42

**정책 목표 및 예산**  
업무 계획·예산으로 보는 중소벤처기업부 5년

4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현황**

45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현황**

PART2

중소벤처기업부  
5년의 기록

48

**제1절**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50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56 2.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64 3.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및 피해기업 집중 지원

72

**제2절**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74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82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경쟁력 확보  
90 3. 전통시장·상점가 소비활력 제고  
94 4.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100

**제3절**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102 1. 혁신기업 창업생태계 조성  
114 2.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122 3. 원활한 재도전 기반 확충

128

**제4절**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130 1.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138 2.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46 3. 내수·수출 등 판로 확대  
154 4. 고용친화적 인력유입 여건 조성

160

**제5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162 1. AI·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170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기술·신사업 창출 촉진  
180 3. 지역 중소기업 성장·혁신 기반 구축

196

**제6절**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198 1.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210 2.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220 3. 기업 친화적 규제 혁신

PART3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228

230 **중소벤처기업부가 열어갈 내일**  
236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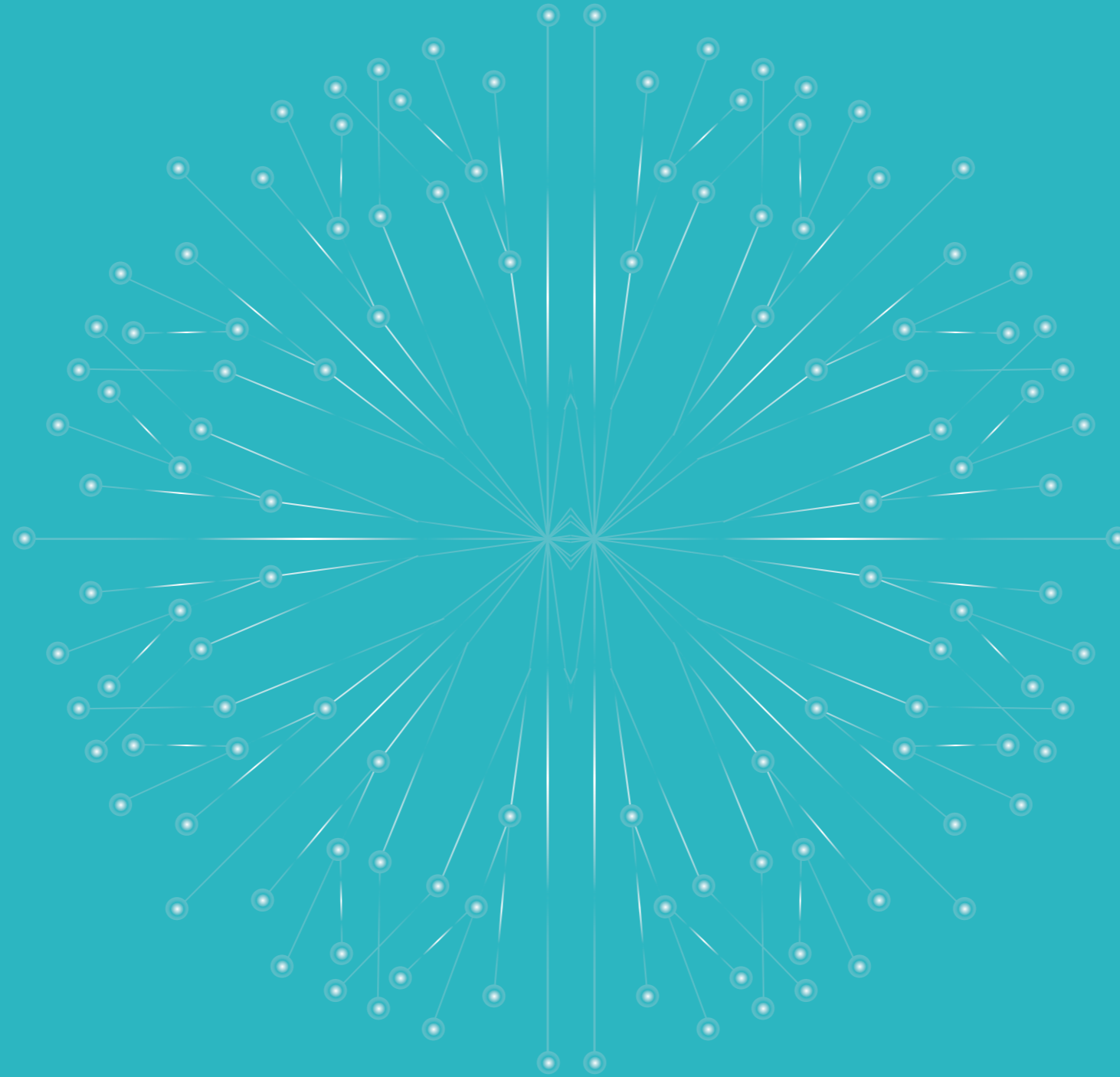
---

PART

1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



출범 배경

#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중소기업부!

## 출범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 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를 맞는 상황에서 새로운 흐름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중소기업의 성장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소기업부가 2017년 7월 26일 출범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각각 이관 받고 중소기업청이 추진했던 중견기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는 등 조직 기능을 개편했다.

또한 기능 이관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법(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술보증기금법(금융위원회)이 중소기업부 소관 법률로 조정됐고, 중견기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법률이 증가했다. 아울러 이관된 기능의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중소기업부로 이관됐다. 기존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신설과 타 부처의 기능 이관 등을 통해 7국 31과 규모의 중소기업청이 당시 4실 13국 41과의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돼 중소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게 됐다.

## 출범 의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시대 흐름과 맞물려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 창업 활성화,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규제자유특구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등 이원화된 기업협력 업무를 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및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분야 정책영역 확대로 창업·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 (2017년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규제특구, 스마트공장 등 주요 정책을 선도하는 주무 부처로서 역할이 강화되며, 100대 국정과제 중 5개 과제 주관 부처로서 국정 성과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세종시대 개막

중소벤처기업부는 1996년 개청 이후부터 청 단위 기관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서울, 세종 등에 소재한 관계 부처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부처 간 긴밀한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청사 이전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결정되면서 청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청사 이전은 물리적 공간 이동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무 공간 등을 벤처타운과 같은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청사 이전을 계기로 좀 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부가 정부 내 벤처조직으로 좀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부처로 자리매김해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청사 이전 후 중소기업부는 세종에 있는 관계 부처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역대 장관 및 차관

- 1대 장관**

**홍종학**(洪鍾學)  
(2017.11.21. ~ 2019.04.07.)
- 2대 장관**

**박영선**(朴映宣)  
(2019.04.08. ~ 2021.01.20.)
- 3대 장관**

**권칠승**(權七勝)  
(2021.02.05. ~ 현재)
- 1대 차관**

**최수규**(崔壽圭)  
(2017.07.26. ~ 2018.12.14.)
- 2대 차관**

**김학도**(金學道)  
(2018.12.15. ~ 2020.03.23.)
- 3대 차관**

**강성천**(姜聲千)  
(2020.03.24. ~ 현재)

연혁

# 국민과 함께 달려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는 1960년 7월 상공부 내 설치된 중소기업과이고, 가깝게는 1996년 2월 신설된 중소기업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7월 26일, 부로 승격된 중소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중소기업부의 열정의 순간들을 살펴봅니다.



2021년

주요 연혁

- 07. 26. 중소기업부 신설
- 11. 21. 초대 홍중학 장관 취임
- 11. 30. 중소기업부 출범식
- 12. 13. 포항 지진 피해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12. 2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 12. 26. 중소기업계와의 첫 간담회

본부 1차관 4실 15국단 49과  
지방청 13(사무소 4)  
국립공고 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01. 12. 소상공인 신년 간담회
- 01. 31. 벤처생태계 혁신 토크 콘서트
- 03. 2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8' 개최
- 04. 18. 민간 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 토론
- 05. 10.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대식
- 05. 23. 제2회 '비욘드 팁스(Beyond TIPS)' 개최
- 07. 25.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서울시)
- 09. 10. '도전 K-스타트업 2018' 출정식
- 09. 14. 2018 실패박람회 개최
- 10. 05. 대전 팁스타운 조성 업무 협약 체결 (대전시, 충남대, 창업진흥원)
- 11. 09. 2018 벤처창업 페스티벌 개최(부산시 공동 주최)
- 12. 20.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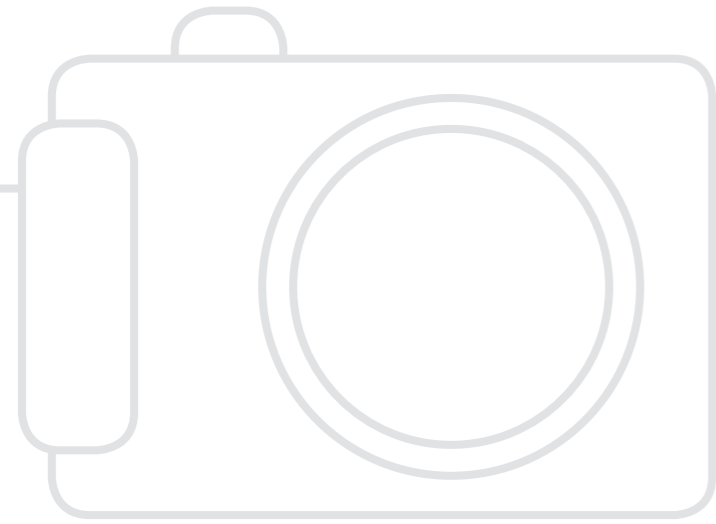
- 04. 08. 제2대 박영선 장관 취임
- 04. 09.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현장 방문
- 05. 08.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출범식
- 05. 31. 공정경제 업무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 06. 11. 한-핀란드 창업투자 분야 협력 MOU 체결
- 06. 25.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 07. 0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상생협약식
- 08. 06.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
- 08. 30.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협약식
- 09. 02. 한-태국 스타트업 서밋 MOU 체결
- 09. 16.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출범식
- 11. 25.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개막식

- 03. 19.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스타트업 간담회
- 05. 11.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 05. 19.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청식
- 06. 22. 로컬 크리에이터 출범식
- 07. 01. 포스코 팁스타운 개관식
- 07. 08. K-스타트업센터 개소식
- 07. 20.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
- 11. 11.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출범식
- 11. 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20' 개최
- 12. 01.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시상식 개최
- 12. 08. 3대 신사업(Big3) 성과공유회 개최
- 12. 14. AI 제조플랫폼 서비스 오픈식 및 KAMP. AI 출범식

- 02. 05. 권철승 장관 취임
- 02. 25. 인천 스타트업파크 개소식
- 04. 09.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식(충남 공주)
- 04. 12.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04. 14. 중소기업 총청연수원 개소식
- 05. 03.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개최
- 05. 13.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개소식
- 05. 24. 대전 팁스타운 개소식(비수도권 최초)
- 06. 07.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 06. 21. 대전정부청사 고별 행사
- 06. 22.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06. 24.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식
- 07. 26. 세종청사 현판 제막식 개최
- 08. 17. 희망회복자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대상)
- 09. 0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최
- 09. 27.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
- 10. 08.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10. 13. 세계제도전포럼 개최
- 10. 15.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첫 개장 (서울 인사동 씨지길)
- 11. 03. 2021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 11. 11.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 개소식
- 11. 23. ESG 민간 준비협의회 발족식
- 12. 15.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 12. 16. 자살한 기업인의 밤 행사 개최 (총 35개 자살한기업 탄생)
- 12. 24. '몰래 산타' 위문 활동







# 사진으로 보는 중소벤처기업부 5년

## 회복 · 도약 · 상생의 릴레이

2017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 잡힌 성장과 상생을 목표로 지난 5년간 험없이 달려온 중소벤처기업부. 회복, 도약, 상생의 릴레이를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 2017



## 회복 · 도약 · 상생



1 2017년 11월 30일

### 문재인 정부 유일 신생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게 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 2017년 12월 13일

### 포항 지진 피해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포스코 및 피해기업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3 2017년 12월 22일

###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정책간담회 진행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약속한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4 2017년 12월 26일

### 중소기업계와의 첫 간담회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들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 2018년 1월 31일

### 벤처생태계 혁신 토크 콘서트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 혁신을 다짐하였다.



2 2018년 3월 28일

###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8'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공장 전시회인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8'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3 2018년 4월 18일

### 민관 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 토론

홍준학 장관의 사회로 민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4 2018년 5월 10일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대식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을 발족하여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기술보호 자원조직을 보강했다.



5 2018년 7월 25일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서울시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등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 2018년 9월 10일

### 도전 K-스타트업 2018 개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와 함께 '도전! K-스타트업 2018' 출정식을 가졌다. 총 5,770팀이 참여해 135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뜨거운 창업열기를 확인했다.



7 2018년 9월 14일

### 2018 실패박람회 개최

개인 사업 삶의 좌절과 실패경험을 함께 나누고 재창업·재도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2018 실패박람회가 개최되었다.



8 2018년 12월 20일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자영업자가 성장·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수립하였다.





1 2019년 4월 9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현장 방문

취임 첫 행보로 박영선 장관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자금의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한도 7년으로 연장하였다.



2 2019년 5월 31일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3 2019년 6월 11일

한-핀란드 창업투자 분야 협력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핀란드를 순방한 박영선 장관은 '한-핀 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양국 간 창업투자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4 2019년 6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개최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가 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5 2019년 7월 2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상생협약식

민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스마트 공장 상생활동을 추진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6 2019년 8월 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있어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귀담아 들었다.



7 2019년 9월 16일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출범식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출범식을 가졌다.



8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개막식

한·아세안 스타트업, 유니콘, 투자자 및 정부 관계자들의 교류·협력의 장인 'COMEUP 2019' 행사를 개최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연대의 기반을 구축했다.



2019





# 2020



**1**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 극복 동참 착한 스타트업 간담회**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에 이어 사회에 착한 힘을 뿌리는 온라인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분야 등 '착한 스타트업'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2** 2020년 5월 11일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대표 행사로 개최하면서,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했다.



**3** 2020년 7월 20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  
 2020년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대한민국 펀드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등과 함께 출범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했다.



**4** 2020년 11월 11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출범식**  
 '제조 강국의 시작!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이란 주제로 출범식을 갖고, '24년까지 총 100개 제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 2020년 11월 19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20' 개최**  
 '코로나 이후의 창업기업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대주제로 전 세계인의 창업기업 축제인 'COMEUP 2020' 개막식이 개최됐고, K-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6** 2020년 12월 1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시상식 개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기업이 제시한 7개 과제를 해결한 스타트업 18개사에 대해 시상과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7** 2020년 12월 8일  
**3대 신사업(Big3)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한 성과를 보인 3대 신사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기업의 성장 과정을 공유·응원하기 위해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8** 2020년 12월 14일  
**AI 제조플랫폼 서비스 오픈식 및 KAMP.AI 출범식**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오픈식을 갖고, 제조 데이터 분석 서비스 포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 2021년 5월 24일  
대전 팁스타운 개소식

2021년 비수도권 최초의 팁스타운인 대전 팁스타운이 개소식을 갖고, 충청권의 창업 거점으로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2 2021년 2월 25일  
인천스타트업파크 개소식

인천 송도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식을 갖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3 2021년 7월 26일  
세종청사 현판 제막식 거행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동지를 든 세종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주무부처로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4 2021년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분쟁을 해결한 첫 사례(현대중공업-삼영기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5 2021년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 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6 2021년 10월 15일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민간과 손을 잡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첫 개장해 디지털화의 표본을 제시했다.



7 2021년 12월 15일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개최

환경부, 식약처와 함께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규제와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G-스타 소통 플랫폼'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8 2021년 12월 24일  
'몰래 산타' 위문 활동

홍대 축제 거리 인근에서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몰래 산타 위문활동을 펼치고 동시에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정책 목표 및 예산

## 업무 계획·예산으로 보는 중소벤처기업부 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람 중심 중소·벤처기업으로 경제구조 대전환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

### 최근 5년간 중소기업부 예산 추이(2018~2022년 추경 9회)

: 2022년 추경 포함 예산은 31조 원 수준(본예산 기준으로는 2018~2022년 연 평균 20.8% 증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본예산	추경 (1회)	본예산	추경 (1회)	본예산	추경 (4회)	본예산	추경 (2회)	본예산	추경 (1회)
정부재정(조 원, A)	428.8	432.6	469.6	475.4	512.3	554.7	558.0	604.9	607.7	624.3
중기부(억 원, B)	88,561	107,850	102,664	114,618	133,640	238,871	168,240	280,370	188,412	313,512
비중(B/A)	2.07%	2.49%	2.19%	2.41%	2.62%	4.30%	3.01%	4.63%	3.10%	5.02%
예산(억 원)	22,694	26,766	30,890	33,686	41,968	78,880	51,386	52,138	45,133	45,733
기금(억 원)	65,867	81,084	71,774	80,932	91,672	159,991	116,854	228,232	143,279	267,779

\* 총지출 기준(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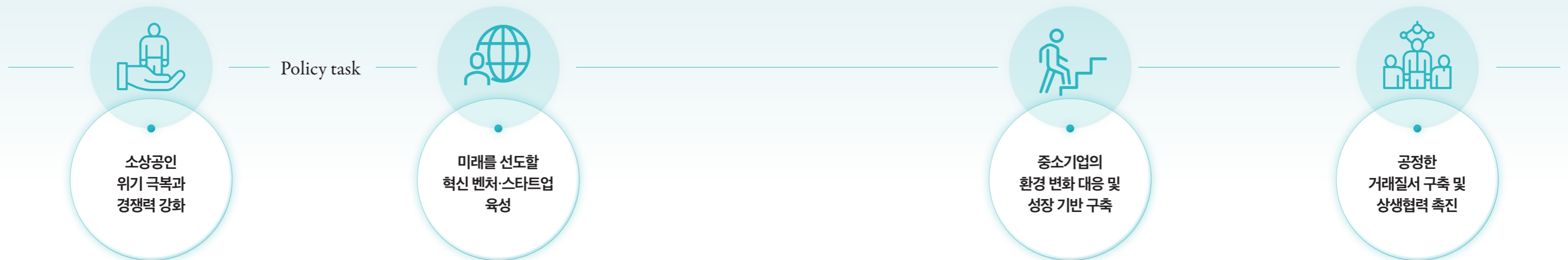
## 2022년

### Vision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 Strategy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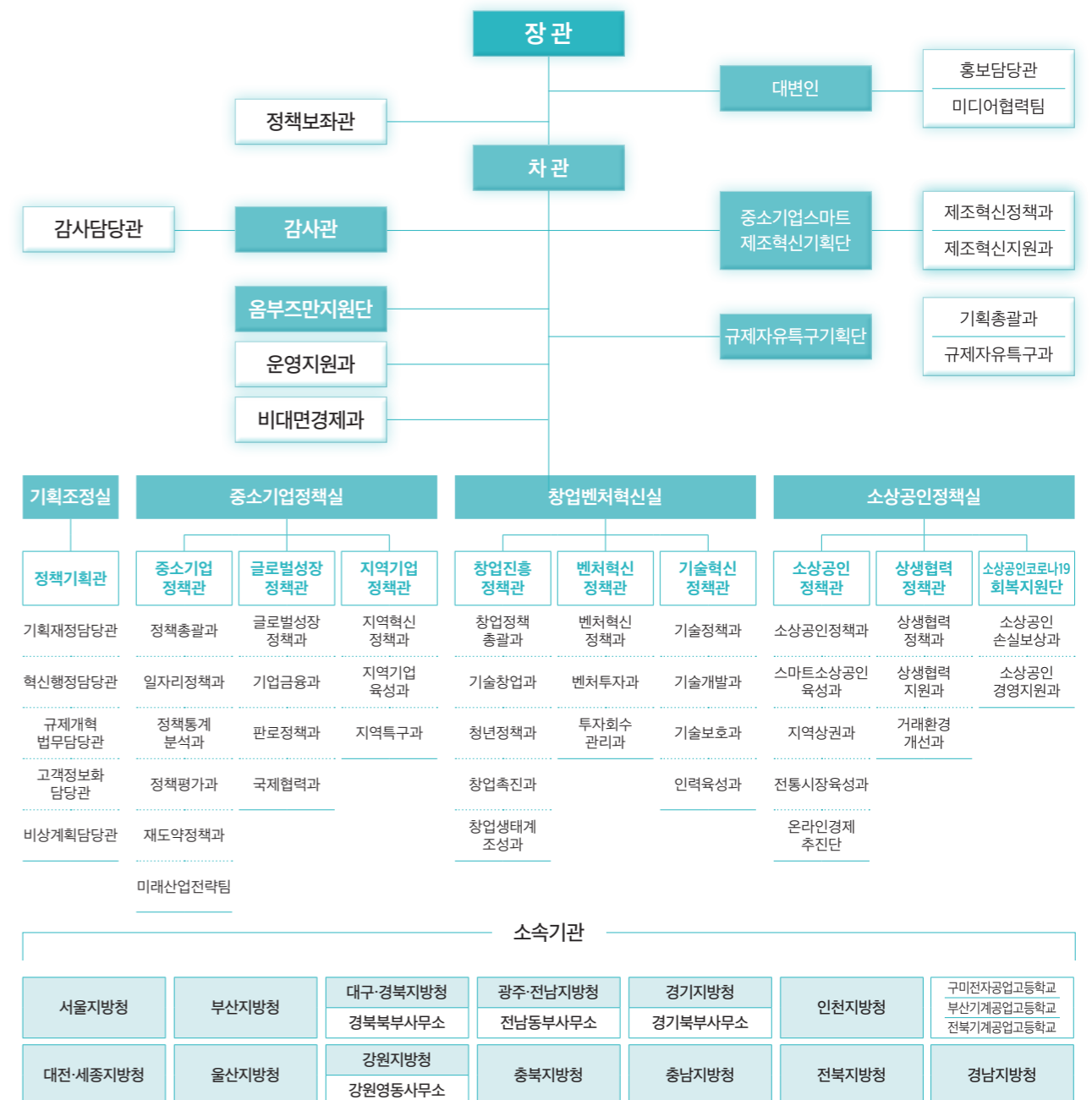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현황

구분	법률명	주요내용
중기 정책 (13)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구매촉진 및 경쟁제도 운영, 우선구매 지원,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 수립·시행, 인력실태조사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혁신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업전환 계획 승인, 사업전환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보호 지원계획,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분쟁조정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입자·자금·인력 공급 원활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업무범위, 조합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등록, 지도사의 양성·교육 등
창업·벤처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술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 투자 산업 체계적 육성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정의·요건, 벤처기업 확인, 특례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센터·전담기관 지정 등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기관 및 임직원, 업무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 규제특례 적용 등	
소상공인·상생 (8)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소진공 및 기금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생협약 기반의 쇠퇴 상권 재도약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추진 계획, 수·위탁 거래공정화, 사업영역 보호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단의 설립·운영·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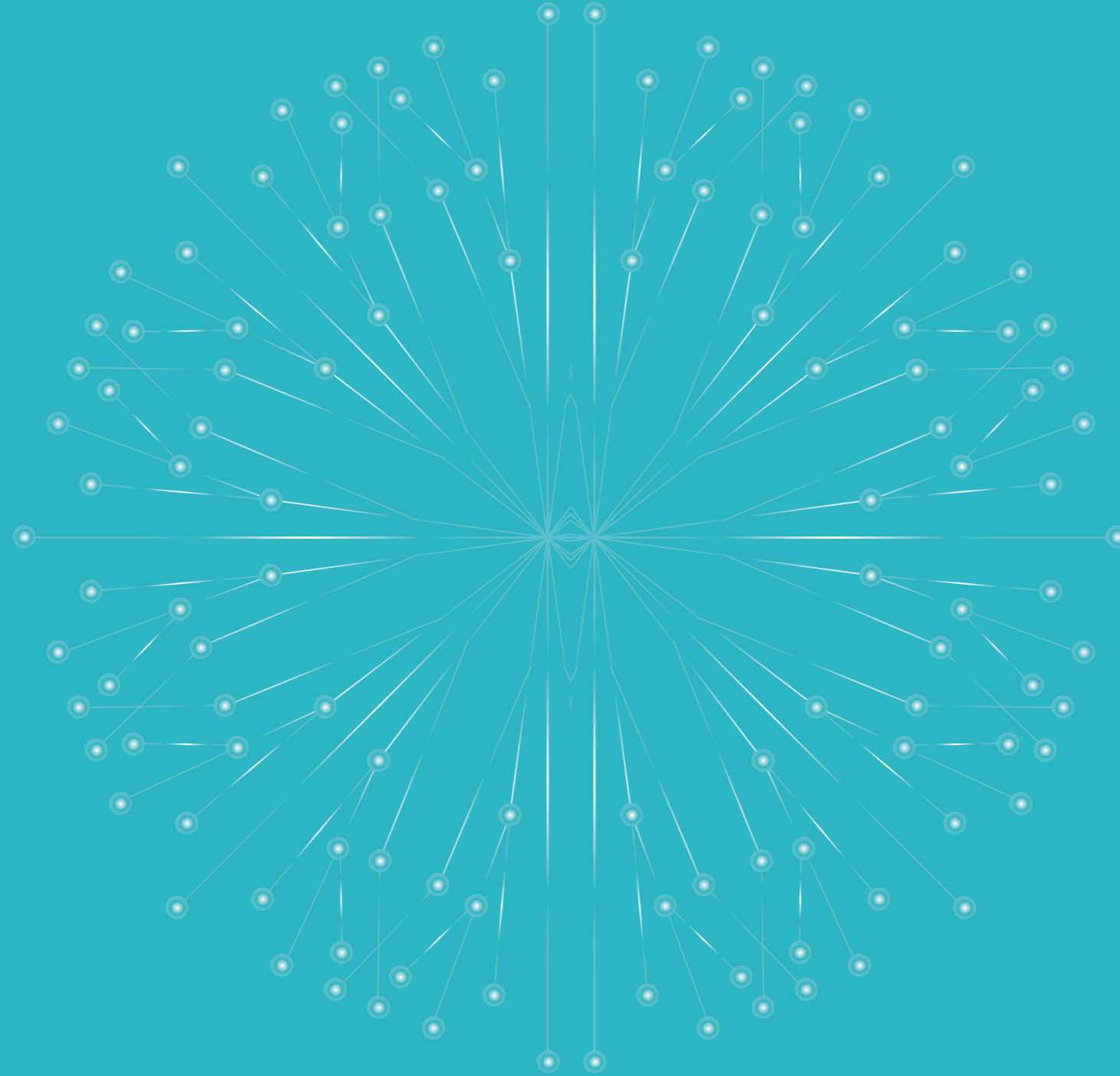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현황

기구: 1차관 4실 15국단 49과, 13지방청, 4사무소, 3국립공고



PART  
2

중소벤처기업부  
5년의 기록



<b>제1절</b>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b>제2절</b>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b>제3절</b>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b>제4절</b>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b>제5절</b>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b>제6절</b>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 제1절

##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2.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3.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및 피해기업 집중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1.07.20.

##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2020년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상륙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는 날로 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 3월), 희망회복자금(2021년 8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16.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했다.

권철승 장관은 2021년 2월 17일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와의 첫 만남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관건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보조금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와 협의를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선별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kr’, ‘희망회복자금.kr’ 등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급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펌뱅킹(금융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지급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 및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70곳을 활용해 방문 접수도 병행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구분	지원대상 (만 명)	예산 (조 원)	유형별 지원금액			
			집합금지 (만 원)	영업제한 (만 원)	경영위기업종 (만 원)	일반업종 (만 원)
새희망자금 (2020.9.~2021.3.)	251	2.8	200	150	100 * 경영위기업종 없음	
버팀목자금 (2021.1.~2021.7.)	301	4.3	300	200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3.~2021.8.)	291	4.9	500-400	300	300-250-200	100
희망회복자금 (2021.8.~2021.12.)	190	4.2	2,000~300 (8개 구간)	900~200 (8개 구간)	400~40 (16개 구간)	-
업체당 최대 지원금	-	-	3,000	1,550	900	300

4차 추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일반업종(2019년 매출 4억 원 이하, 전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특별 피해업종(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수도권 영업제한(식당, 카페 등) 150만 원, 집합금지(전국 12개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 등 5개 시설) 200만 원을 지원했다.

2021년 해가 바뀌면서 피해가 누적됐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가 지급됐다. 두 번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 지자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2021년 3월에 편성된 '버팀목자금플러스'는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5백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지원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해 여행업이나 관광업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컸던 업종은 일반업종보다 두텁게 지원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 연매출 4억 원 초과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다수사업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권철승 장관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2021년 3월 29일부터 개시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지급 상황을 점검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준비와 집행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준 직원들 덕분에 신청접수 약 열흘 만에 225만 개 이상 사업체에 4조 원 가까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진정한 버팀목'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매출 감소
	지속	완화		경영위기업종			
지원업종	6주 이상 집합금지	6주 미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 60% 이상 감소	매출 40% 이상 ~ 60% 미만 감소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매출 20% 미만 감소
기업규모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출기준	개별 사업체 매출 증감 여부 무관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필수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필수 (단, 사업체의 매출 감소율은 무관)			개별 사업체 매출 감소 필수
지원금액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네 번째로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에 편성됐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매출액 규모(4구간), 업종 등의 기준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피해 유형을 구분해 차등 지급했다. 또한 최대 지원금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권철승 장관은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금액(만 원)			
		2019/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	2019/2020년 매출 4억~2억 원	2019/2020년 매출 2억~8천만 원	2019/20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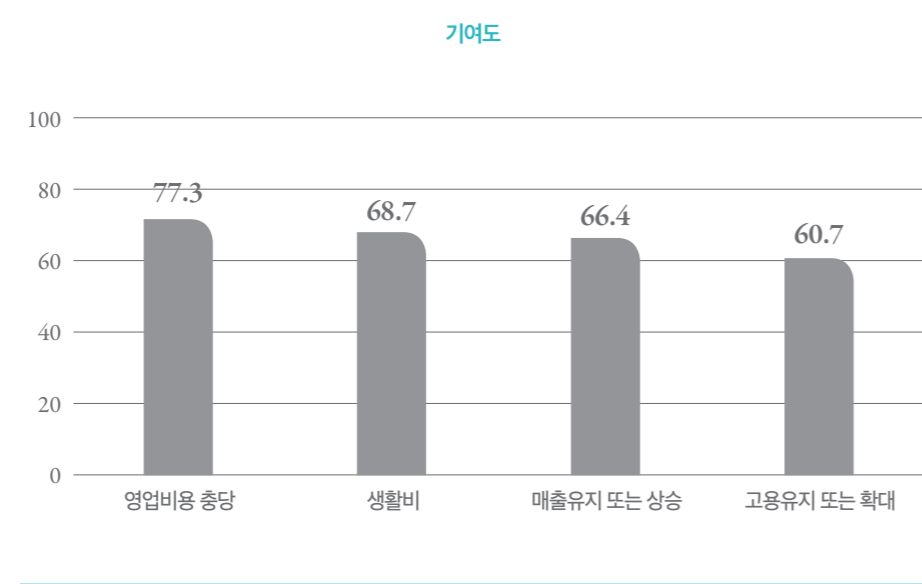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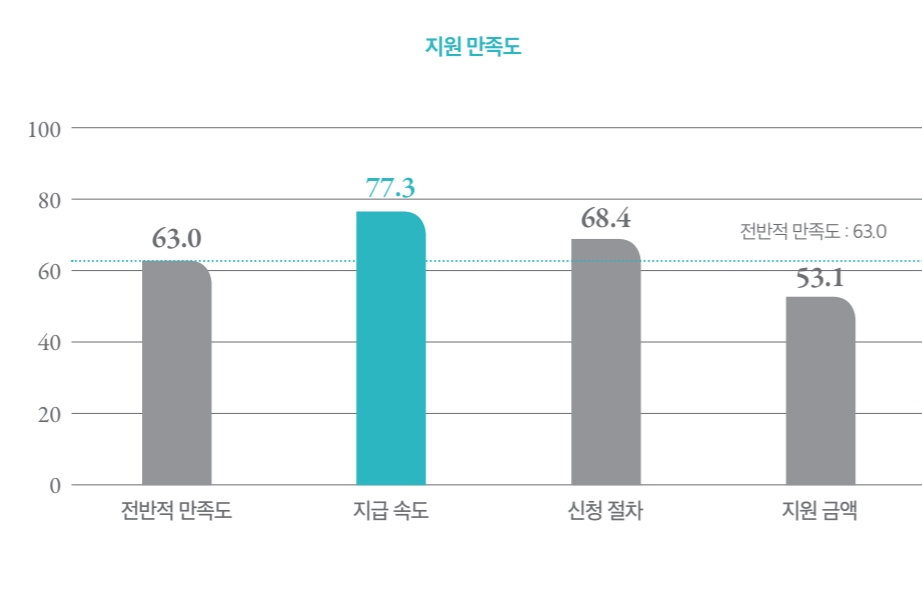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재난지원금 회차가 거듭될수록 지원책을 보완해 신청 및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완화했으며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또한 임차료, 인건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

-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 → (버팀목자금) 100~300만 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 감소 판단기준 3개 → (희망회복자금) 8개로 세분화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특히 지급 성과의 한 예로, 2020년 9월 24일 새희망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이전 4주 81.8%에서 이후 4주 86.4%로 개선됐다. 또한 2021년 1월 29일 새희망자금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급속도가 만족도 77.3%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소셜 빅데이터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에 대해 '희망', '해결', '도움', '감사' 등 긍정적인 인식이 88%에 달했다.



새희망자금(2차) 만족도 및 기여도



한편 비자발적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힘썼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로 인해 휴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버팀목자금플러스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연재해·화재 등 사유로 2019~2020년 중 1년 이상 정상 경영이 어려운 사실을 증빙할 경우 지급하도록 기준 특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걱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1.10.25.

### ‘세계 유례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화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을 맞아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폐업 → 재취업 → 재창업’에 이르는 폐업 전 주기별 패키지 지원책을 강화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상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보상할 때 피해액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 지원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1년 1월 5일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제기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문제가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2월 15일 권철승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2021.3.23. 중기부)

구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있다	매출이 감소했다
소상공인	95%	66.8%
전통시장	99.5%	65%

이에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국회에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28건 발의되었고, 7월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7일 공포됐다. 그 결과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포일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을 위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7-9월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 등을 개최해 민간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9월에만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 간담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률 시행일인 2021년 10월 8일과 이후 26일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안) 및 지급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권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9월 방역단계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1조 원에서 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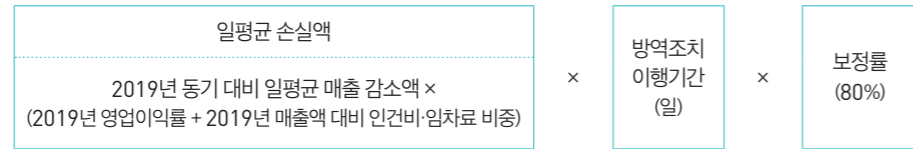


원으로 1.4조 원 증액했으며, 10월 27일부터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등 전국 300여 곳의 전담 안내창구 및 콜센터(1533-3300)를 운영하고,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을 실시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본격 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조 원)	-	-	24	6
	기업 수(만 개)	-	-	80	90(추정)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안)**



주: 인건비·임차료 비중 함께 고려

이를 통해 2022년 2월 21일 기준으로 66만 건, 1.95조 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정부가 사전에 산정한 신속보상금에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등 손실보상제도로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보상 제도화로 감염병 확산 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게 됐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손실보상제도로, 영·미·일 등 타 국가에서 구호·지원(Grant, Relief 등)으로 입법한 것과 달리 법적 청구권적 개념인 '보상' 개념으로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지자체·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 관련 행정자료(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의 관리·신청·지급 등이 윈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상적인 보상에는 서류 접수 → 검토 → 지급에 수십 일이 소요되나, 증빙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이틀 내에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 결과 신청 개시 6일 만에 1조 원을 지급할 정도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국 규모의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한 덕분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법령 시행(21.10.8)에 맞춰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을 신설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손실보상 선지급, 방역물품지원금·방역지원금 지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성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 확진자 급증 등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2021년 12월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했다. 아울러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하였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이 2021년 12월 22일에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히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2021년 4분기분 250만 원 + 2022년 1분기분 250만 원)으로 총 1.4조 원 규모로 추진하며,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신속하게 대출을 한 뒤 향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정산을 한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021년 1월 28일 이전에 신청한 대부분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편, 2021년 백신접종률 제고 등 방역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였으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출현으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로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시행되었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조치 준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설하였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5종, 2021년 11월 1일~)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골라택·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11종, 2021년 12월 6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에 방역패스 인식 단말기를 비롯하여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증빙할 경우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역지원금(1·2차 총 13.2조 원)'은 2021년 12월 27일 첫 1차 지급을 시작으로 총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즉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1차)**

구분	대상	매출 감소 판단 기준
①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0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li> <li>•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li> </ul>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급이력 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을 사전 선별하였고,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순서대로 지급 차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방역조치 시행 이후 9일 만에 첫 1차 지급을 개시했다.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추가(총 332만 개)하고 지원단가를 상향(300만 원)하여 2022년 2월 지급을 개시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안전망 강화**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 여건 마련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용,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신속·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비용을 지원하고, 폐업 이후 임금 근로자 전환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재창업을 지원했다. 또한 폐업·노령·사망 등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시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했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 하기도 하였다.

권철승 장관은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해 나가 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위기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폐업지원 분야 관련, 기존 사업정리 컨설팅(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 컨설팅)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신설·추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폐업지원 규모를 2017년 2,918건에서 2018년 4,768건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교육·멘토링 수료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사업전환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정책자금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에는 점포 철거비용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전직 장려수당을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폐업·재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폐업·재기지원 예산은 2018년 17,250명을 대상으로 135억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2019년 38,415명을 대상으로 419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재기지원 전담 창구(전국 30개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으로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3차례 추경을 편성해 점포 철거지원금 총 254억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19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국제청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재도전장려금(50만 원)을 지급(2020년 12월, 7.1만 명) 완료했다. 또한 스타벅스와 협업해 바리스타 전문과정인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2020년 서울지역 100명).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돼 5가지 세부 지원책을 추가했다. 첫째, 폴리텍대학과 협업을 통해 산업체 구인 수요를 반영한 ‘기업특화 교육과정(3개 과정, 100명)’을 운영했다. 둘째, 폐업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채무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등)’을 신설했다. 셋째, 재창업사업화를 신설(2021년 120억 원)하여 기존 재창업 교육·멘토링에서 재창업자금(최대 1천만 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했다. 넷째, 추경을 통해 컨설팅,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채무 조정으로 나뉘어 있던 폐업지원체계를 원스톱 패키지 지원으로 개편했다. 다섯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예산을 추가 편성(406억 원, 8만 명 추가 지원)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30만 7,771명을 지원했다.

**폐업·재기지원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예산(억 원)	419	1,693	1,170	1,159
	실적(명)	38,415	121,381	230,368	-

한편,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7년 6월 노란우산공제는 출범한 지 10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7년 1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2019년에는 지자체별 공제가입 장려금 제도(공제부금 매칭 지원)를 서울시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1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을 3.7%에서 3.4%로 인하하는 등 가입자 부담을 완화했다.

2020년에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재해 대출 및 심리상담 서비스, 분쟁·소송대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1년에는 납부유예(6개월), 납부중지 조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가입장려금을 확대했다(2019년 16개 광역시·도 → 2021년 제2차 추경 124억 원, 17개 광역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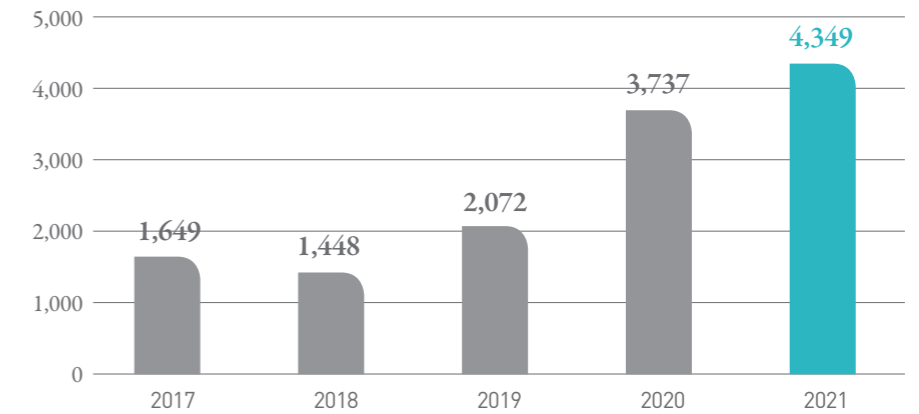
**노란우산공제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란우산공제	예산(억 원)	-	-	124	-
	지원실적(만 명)	164	192	220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억 원)	2,895	2,206	2,561	3,629
	지원실적(명)	5,547	10,145	14,679	-

아울러 2018년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했는데, 2021년에는 기존 1~2등급에서 1~7등급으로,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상과 같이 소상공인 재기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기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만 3,885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됐다. 또한 소득공제 확대, 해약환급률 상향·가입 서류 간소화 등 수요자 중심 제도로 개선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1년 12월 기준 220만 명으로 확대됐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1월 기준 2만 7,059명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취업성공 규모 (총 1만 3,885명)



주: 2021년 통계는 12월 말 기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가입규모(누계)	12,380	15,379	21,900	27,059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및 피해기업 집중 지원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중략)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1.10.25.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해왔다. 업체당 7,000만 원(일부 자금 10억 원)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총 25조 7,758억 원을 지원하였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개, 억 원)

구분	1999~2009년	2010~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합계
업체	181,766	96,918	44,233	48,341	64,497	57,625	58,462	186,215	220,948	959,005
금액	46,029	32,150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45,500	36,520	257,758
예산	47,242	33,305	18,095	17,550	22,450	20,680	22,125	45,500	56,000	282,947

## 2017~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지원규모: 억 원)

성장단계별 구분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b>창업기</b>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창업초기자금	3,060	1,423	981	609	76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48	35	37	31	37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사업연계자금	(2018년 신설)	379	547	184	153
	청년고용연계자금	1,177	4,067	4,416	2,299	1,750
<b>성장기</b> • 성장단계 진입 • 운전-시설자금 병행	소공인특화자금	4,100	4,365	4,716	2,474	2,624
	성장촉진자금	5,728	2,608	2,511	3,546	1,832
	혁신형소상공인지금	(2020년 신설)			78	293
	일반경영안정자금	7,802	7,328	7,989	35,610	11,297
<b>재도약기</b>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재창업 선순환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2018년 신설)	29	63	60	95
	사업전환자금	23	12	11	13	9
	특별경영안정자금	(2021년 내역사업 분리)			17,342	
	긴급경영안정자금	512	329	476	371	43
재도전특별자금		(2019년 신설)		298	225	284
합계		22,450	20,575	22,045	45,500	36,520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신용, 취약계층 등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전용자금을 신설(2019년 추경 200억 원, 2020년 500억 원, 2021년 1조 2,000억 원)하고, 2019년 537개 업체에 298억 원, 2020년 504개 업체에 225억 원, 2021년 12월 65,543개 업체에 9,191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가장기업, 청년기업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사회안전망 속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자금구분	방식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 자금	직접	소공인	기준금리 +0.4~0.6%p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5~8년 (자율)
	성장촉진자금	대리 직접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기준금리 +0.2~0.4%p	대리 1억 원 직접 2억 원	5년 (거치2년)
스마트 소상공인 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직접	백년가계, 백년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기준금리 +0.2%p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5~8년 (자율)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직접	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스마트 기술 장비·온라인 활용 영업활동 소상공인	기준금리 +0.2%p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5~8년 (자율)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7천만 원	5년 (거치2년)
	창업자금	대리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7천만 원	5년 (거치2년)
	여성가장지원 자금	대리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7천만 원	5년 (거치2년)
	사업전환자금	대리	재창업패키지 수료(1년 이내) 소상공인	기준금리 +0.2%p	1억 원	5년 (거치2년)
	신사업창업 사관학교연계 자금	직접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기준금리 +0.6%p	1억 원	5년 (자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임차료용자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9% 고정	2천만 원	5년 (거치2년)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 자금	대리	소상공인 중 장애인 기업	2.0% 고정	1억 원	7년 (거치2년)
	위기지역지원 자금	대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 원	5년 (거치2년)
	긴급경영안정 자금	대리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 원	5년 (거치2년)
	경영애로자금	대리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0% 고정	7천만 원	5년 (거치2년)
	재도전특별 자금	직접	성장성이 있으나 저신용등급으로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 고정	1억 원	8년 (거치3년)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자금	직접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 고정	1억 원	5년 (거치2년)
	사회적경제 기업전용자금	직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기준금리 +0.4%p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5~8년 (자율)
	생활혁신형창업연계자금 (성공불용자)	직접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4개월 이내 창업 소상공인	2.5% 고정	2천만 원	5년 (거치3년)
	소상공인고용 연계용자	직접	고용유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1%p 금리감면 * (1년차) 2.0% → (2~5년차) 1.0%	2.0% 고정	2천만 원	5년 (거치2년)
	청년고용연계 자금	대리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0.4%p 금리감면	기준금리 +0.0~0.4%p	3천만 원	5년 (거치2년)
저신용소상공인용자	직접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6개월간 이자상환유예	1.5%	2천만 원	5년 (거치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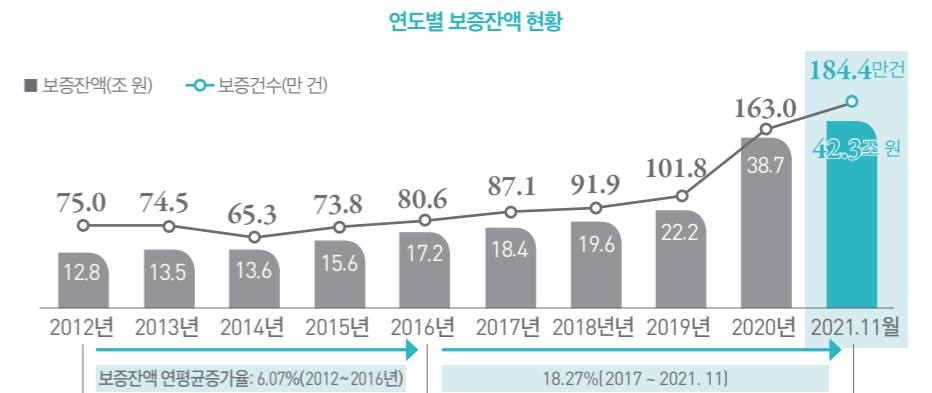
\* 2021년 분기별 기준금리: (1분기) 1.55%, (2분기) 1.73%, (3분기) 1.91%

창업 기업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없는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연체 발생 폭증 등 지원 사각지대 포용을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하였다. 2020년에는 예·적금 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연체 또는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정리되었을 시 신청을 허용하였으며, 경영애로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증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시 신용등급제한(NCB 7등급 이하) 요건을 폐지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체납처분 유예 시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력 5년 이하에 적용하던 예외 기준(한계기업, 부채비율, 매출액 초과차입금)을 업력 7년 이하까지 확대·적용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대출 시 한도가 축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2019년과 2020년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도록 대출한도 산정기준을 합리화하였다.

지역신보 보증 지원

지역신보는 경영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지속 확대했다.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상공인 등에게 총 88.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동기간 연평균 보증규모 증가율은 18.27%로, 이전 5개년(2012~2016년) 증가율인 6.07%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도 신규 보증은 23조 원으로, 2019년(8.7조 원) 대비 164% 증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업비용 증가에 의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증가로 지역신보 보증잔액 규모\*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237%) 및 음식·숙박업(166%), 도소매(144%), 제조(109%) 순으로 많았다.

\* 지역신보 보증잔액(조 원)  
2019년: 23.0 → 2020년: 39.4 → 2021년 8월: 42.3 → 2021년 11월: 42.5

### 경영애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신규 용자·보증 대폭 공급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위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만기연장을 시행하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신규 용자·보증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1조 원 규모의 신규 용자·보증을 공급했다.

#### 2021년 말 기준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전체		406,365	107,359	513,724	
중소기업		122,855	40,543	163,398	
용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3,000	8,000	21,000
		코로나19 특례보증	25,092	10,543	35,635
	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	4,606	-	4,606
		코로나19 특례보증	25,848	22,000	47,848
소상공인		283,510	66,816	350,326	
용자	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sup>1)</sup>	21,815	-	21,815
		코로나19 직접대출 <sup>1)</sup>	7,723	-	7,723
		1천만 원 긴급대출	601	-	601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용자	-	8,638	8,638
		소상공인 고용연계 용자	-	5,751	5,751
		저신용 소상공인 용자	-	9,104	9,104
보증	지신보	코로나19 특례보증	93,581	-	93,581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sup>1)</sup>	68,428	-	68,428
	기보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sup>1)</sup>	3,576	-	3,576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3,000	-	3,000
	신보	시중은행 위탁보증 <sup>2)</sup>	29,032	-	29,032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이관물량 이차보전 <sup>1)</sup>	11,508	-	11,508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sup>1)</sup>	5,306	33,573	5,306
		시중은행 위탁보증 <sup>2)</sup>	32,927	9,750	66,500
		집합제한 특례보증 <sup>2)</sup>	-	-	9,750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6,013	9,500	6,013

1)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기은 초저금리대출지신보, 기보, 신보, 경영애로자금소진공, 시중은행 이차보전신보  
 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위탁보증신보, 집합제한 특례보증신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례보증 등을 신속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2월 1조 3천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자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신속히 지원했다(2021년까지 2조 1,000억 원). 또한 신·기보는 2021년까지 총 8조 3,483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우대 보증을 공급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 중·저신용 용자, 집합금지 임차료 용자 등

신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21년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자금 2조 1,815억 원, 소진공 직접대출 7,723억 원 및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용자 8,638억 원 등 2021년까지 총 5조 3,63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보증은 지역신보 코로나19 특례보증 9조 3,581억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7조 7,310억 원, 신·기보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신속·전액보증 9,013억 원 등 2021년까지 총 29조 8,694억 원을 공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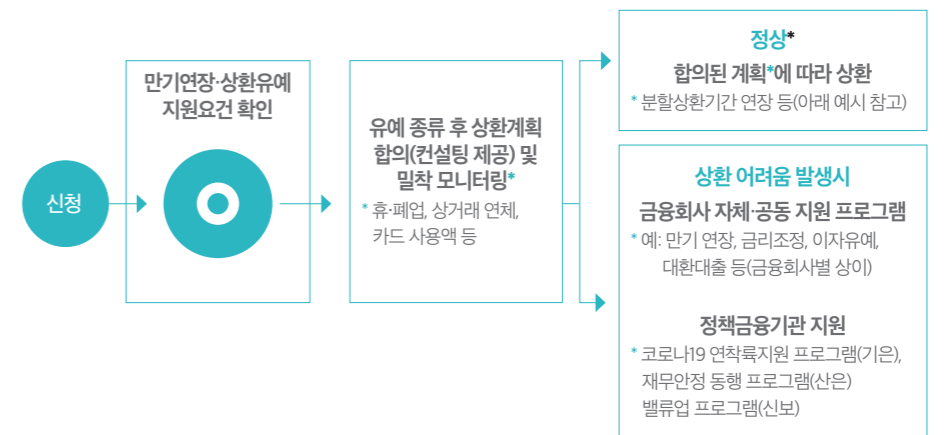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 중 휴·폐업한 업체는 극소수이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약 99%에 달했다. 민간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기업(신용 7등급 이하)에게 긴급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공급했다(지원 비율 60%). 또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저리 용자를 긴급 투입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

###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용자·보증에 대해 적극 만기연장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만기연장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했다.

지원내용을 2020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했다(1차 2020.4.1.~9.30., 2차 2020.10.1.~2021.3.3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선제적으로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만기연장보다 우대하여 지원(2020.2.13.)했고,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해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도 만기연장을 시행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특별만기연장을 유지했다. 그간 만기연장을 시행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21년 10월부터 만기연장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에 해소에 일조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안내

신청대상	접수방식	지원내용
<p><b>'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 까지</b>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p> <p><small>* 세금채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small></p> <p><small>*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자료 참조</small></p>	<p><b>현장신청</b> [21.9.27(월) ~ 21.10.22(금)]</p> <p>대상: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접수: 현장신청(사업장관할지역센터 방문)</p> <p><b>온라인신청</b> [21.10.1(금) ~ 22.3.31(목)]</p> <p>대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접수: 온라인신청(원금상환예정일 이전 신청)</p> <p><small>* 반드시 신청일 이전의 상환금액 완납, 원금상환예정일 전일까지 만기연장 신청 완료해야만 만기연장 적용 가능합니다.</small></p>	<p>-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p> <p>- 유예기간 동안 대출잔액의 이자만 납부</p> <p><b>*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b></p>
<p><small>※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small></p> <p><small>※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정책자금 만기연장 전담콜센터(1811-7500)   자세한 내용 보기 →</small></p>		

이렇게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은 총 115조 원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권 모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의 적자가구(총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이 필수지출(식비, 의료, 원리금상환액 등)보다 적은 가구) 비중은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1년 말 22.4%에 달하나, 연장으로 16.6~19.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실적(2021.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합계
		(2020. 4. 1. ~ 9. 30.)	(2020. 10. 1. ~ 2021. 3. 31.)	(2021. 4. 1. ~ 2021. 9. 30.)	(2021. 10. 1. ~ 2022. 3. 31.)	
용자	중진공	2,085	-	4,881	1,779	8,745
	소진공	-	-	-	529.4	529.4
보증	신보	215,042	134,474	206,933	80,688	637,137
	기보	95,043	78,899	109,874	52,870	336,686
	지신보	29,785	71,198	55,493	11,051	167,527
합계		341,955	284,571	377,181	146,917	1,150,624

## 3시간 만에 입금 속도에 감동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 10월 들어 매출이 50%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었다. 하지만 매달 110만 원씩 임차료는 내야 해서 이를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B원장은 정부가 피해 유형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B원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청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전에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었다.

B원장은 “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감동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3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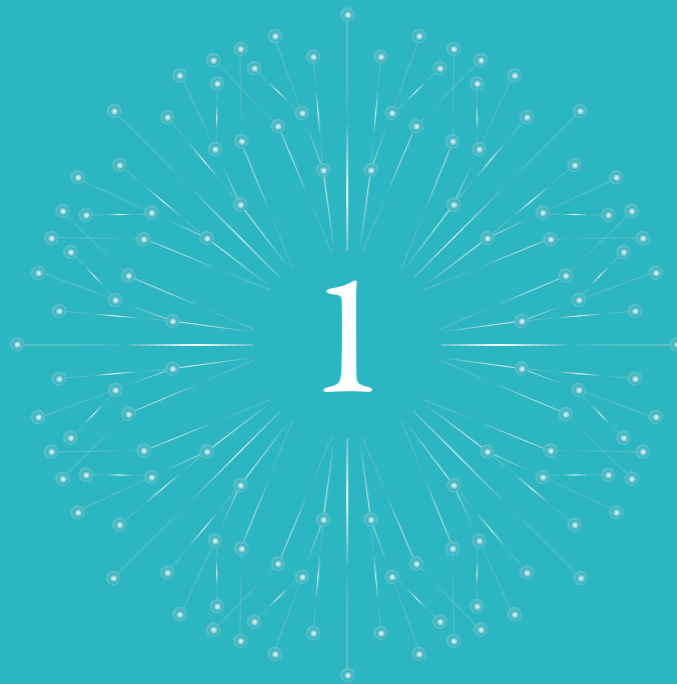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경쟁력 확보
3. 전통시장·상점가 소비활력 제고
4.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다음 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1.07.20.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을 통한 디지털화

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이 생산,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며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기술이 자본과 정보력을 갖춘 대기업·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추진했다.

### 스마트상점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스마트상점	예산(억 원)	100.5	220	280
	지원점포 수(개)	4,000	13,000	5,600(목표)

우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을 위해 2019년 9월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신설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 100.5억 원을 편성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시행했다. 당초 예산은 16.5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84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에는 22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지원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 스마트상점 보급 기술(예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예약·간편결제	주문·결제 가능한 무인 주문기기	가상으로 스타일링·피팅 등을 체험	자율주행로봇을 이용한 음식 서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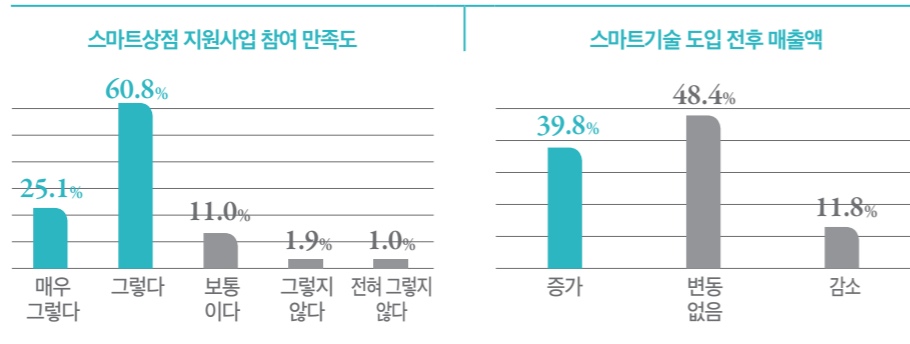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스마트 시범상가 55곳을 선정하여 약 4천 개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2021년에는 스마트 시범상가 113곳과 업종별 협·단체 5곳을 선정하여 약 1.3만 개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급 가능한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 181곳을 선정하고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2020년 11월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전시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상점 모델숍'을 구축했다. 스마트상점 모델숍 개막식에 참석한 박영선 전 장관은 "스마트상점은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스마트 드림 스토어 구성도	모델샵 설치 기기		
	①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② 스마트 사이니지	③ 스마트 쇼케이스
	④ AI 무인 카메라	⑤ 3D 스캐너	⑥ 3D 프린터
	⑦ 바리스타 로봇	⑧ 서빙로봇	⑨ 스마트미러
	⑩ 스마트 키오스크	⑪ AI 스캐너	⑫ 스마트 메뉴보드
	⑬ POS세트, 모바일 폰	⑭ QR코드 키오스크	⑮ 블록체인 플랫폼

2020년 지원점포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85.9%가 만족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출액도 39.8%의 점포에서 증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설문조사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 정부 들어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QR코드 간편결제를 병행해서 사용할 것”과 같은 해 11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예산(억 원)	60	102	135.6	102
	누적 가맹점 수(만 개)	32.4	72.9	138.3	160(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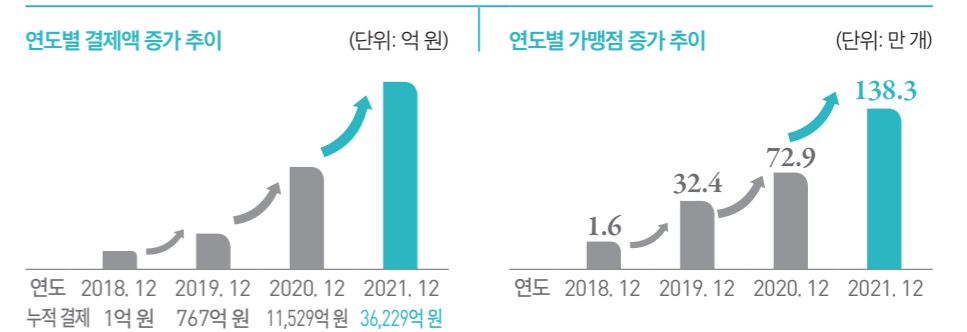
2018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혁신적으로 0%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공동 QR코드)·서비스(수수료율) 표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 후 소비자가 가맹점의 QR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QR을 제시하는 방식을 추가·병행하여 사용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의 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민간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해 민간주도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에는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가맹점 및 서비스를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행비용도 절감됐다. 2020년 기준 누적 1조 1,529억 원이 결제돼 2019년 대비 결제액이 15배 증가했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의 결제수단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국내 골목상권에서 자국 앱으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 결제사와 시스템을 연동시켰다. 그 결과 위챗-제로페이 결제액(누적)은 2020년 12월 26.7백만 원에서 2021년 12월 66.6백만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또한 공영쇼핑 및 위메프, 가치삼시다 등 온라인으로도 진출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에는 일반물·배달앱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년여 만에 138.3만 개(신용카드 290만 개) 가맹점을 확보했다. 이 중 93.4%가 소상공인이다. 결제액은 3조 6,229억 원을 달성했는데 72.6%인 2조 6,302억 원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발생해 소상공인의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로페이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약 1.1%p 낮아 2021년 기준으로 약 39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결제액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핀테크 산업 등 온·오프라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제로페이 결제금액 및 가맹점 증가 추이(누적)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온라인 소비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준별 맞춤형으로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해 자생력을 높이고자 2019년 8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온라인몰·홈쇼핑 등 민간 채널 입점을 지원했다. 2025년까지 전체 소상공인의 10% 이상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이후 매년 5만 명 이상을 지원했다.

### 주요 내용

- **역량강화** : 온라인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상품성 개선 컨설팅 등
- **진출 기반 조성**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지원 플랫폼 및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 인프라 구축·운영, 구독경제 지원 등
- **채널 진출 지원** : 홈쇼핑·인터넷몰, T-커머스, V-커머스, 배달앱 입점 등 진출 지원
- **라이브커머스 운영** :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및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먼저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핵심 역량(정보, 상품, 홍보 콘텐츠)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 교육 및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온라인 진출 교육은 2019년에는 1,114명, 2020년에는 18,144명, 2021년에는 13,9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상품성은 있으나 온라인 진출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 전문가와 1:1로 매칭하여 판매전략 기획부터 상품관리, 홍보 및 민간 채널 입점까지 일괄적으로 온라인 진출을 도왔다. 지원실적은 2020년 전문가 100명이 소상공인 2,182명을 매칭 지원했고, 2021년에는 전문가 77명이 소상공인 2,051명을 매칭 지원했다. 또한 전문가 리뷰, 유명 방송인을 활용한 웹 예능 형식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가치샵시다 TV(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인프라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수수료(3%) 기반의 공적 플랫폼인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험을 높이고 민간 온라인몰 진출까지 연계 지원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전문 인력이 상주(3~12명)하고, 촬영장비 및 스튜디오 등을 갖춘 오프라인 인프라 확대(2020년 3개소 → 2021년 9개소)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했다. 특히 2021년에는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 민간업체 백패커(아이디어스)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처음 도입했다.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프라인 인사동 쌈지길 판매장과 확대 연계 지원 시설 '아이디어스' 온라인몰 전용관으로 구성됐다. 권철승 장관은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해 "디지털 전환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스토어 개장이 그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하고 활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개설하여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지원, 홈쇼핑 입점비 지원 등으로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59,089개사가 민간 온라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0년에는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O2O 플랫폼 활용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공적 플랫폼인 '가치샵시다'뿐 아니라 민간 채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전용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2020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송출(1,462개사)했다.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예능형 라이브커머스('KBS 랜선장터' 30회), 현지 관광·문화 소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할인 판매하는 팔도 라이브커머스(총 17회)에도 참여했다. 2020년 6~7월에는 동행세일 중 국무위원 릴레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소상공인 상품 118개를 판매했다. 이 중 39개 상품이 완판됐으며, 누적 시청자 수는 43만 명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통해 매출은 2021년(1~12월) 8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는 전년 매출 실적 25억 원 대비 240% 증가한 것이다.

2021년 4월 서울 목동 소재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한 권철승 장관은 "목동 스튜디오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하루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스타상품 탄생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국무위원 릴레이 라이브커머스 영상



2021년에는 소상공인의 정기 판로 제공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구독경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지자체 및 민간 온라인몰 내 '구독경제 카테고리'를 개설하고 소상공인 상품 꾸러미화, 밀키트 상품화 등 구독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했다.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예산 (억 원)	신설	89	529	762	905
	지원실적 (개)	-	2,795	52,942	55,407	60,000 (목표)

한편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과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행된 대규모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촉진 행사로 1차(2019년)는 신촌에서, 2차(2020년)는 삼청로에서, 3차(2021년)는 마포에서 개최했다. 인터넷몰 및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이 참여하는 할인판매전도 대대적으로 열렸다. 2019년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전개된 1차 크리스마스 마켓은 온·오프라인 합해 매출 54.6억 원을 기록했고, 신촌상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가치샵시다 TV’는 142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하며 특판전 매출 546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 30개, 전통시장 300개, 동네슈퍼 2,500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2,000개 내외로 참여 규모가 대폭 확대된 2차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73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홈쇼핑은 522억 원, 온라인 쇼핑몰은 185억 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는 21억 원, 라이브커머스는 11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3차 크리스마스마켓은 민간 온라인 플랫폼 40개사, 전통시장 400개소, 중소·소상공인 4만 개사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특판전 매출이 1천억 원을 돌파(1,031억 원) 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남겼다.

2019년 크리스마스 마켓	2020년 K-MAS 라이브 마켓	2021년 K-MAS 라이브 마켓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경쟁력 확보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딥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 2020.12.17.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산(백만 원)	10,340	11,001	18,710	16,655	18,950	19,750
	교육생(명)	352	300	385	416	451	500

신사업 분야 등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교육, 점포경영 실습(기획),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보육공간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혁신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6개 지역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舊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 이래, 2019년 경남, 인천, 전북, 2020년 울산, 전남, 충북, 2021년 강원, 경북, 안동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21년 기준 총 15개 지역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거점을 확대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는 체험점포 위주의 사관학교에 라이브커머스가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 코워킹 스페이스를 추가로 구축하고, 지역행사 참여, 무료 대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창업 외에도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지역의 명실상부한 소상공인의 창업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간 구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교육 및 보육공간, 체험점포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체험점포, 자금지원을 통해 유망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생을 선발하여 1개월간 창업 교육을 실시한 이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의 체험점포(‘꿈이룸’)에서 상품 구입,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을 직접 체험하며 창업 아이템의 검증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창업경영 체험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 이래 2015~2021년 12월까지 총 2,257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고 창업 교육, 점포경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21년 12월말 기준 1,76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창업교육과 점포 체험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을 별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최대 1억 원의 정책자금(융자)을 연계 지원하는 등 성장과 도약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확산 등 생태계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오프라인 체험점포 운영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e-커머스를 활용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창업을 희망하는 제품·서비스의 브랜딩, 상품성 제고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창업 및 온라인 판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총 416명의 교육생이 이수하였다.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사례**

개 로스터리 옥희(2021년 사업 참여)	메디 프랜(2017년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이 운영하던 전통 방앗간에 로스터리 체험 등을 접목하여 체험형 방앗간 창업</li> <li>• 4가지 종류의 참·들기름, 들깨라떼, 빼빼로, 젤라토 등의 푸드·굿즈 개발</li> <li>※ 2021년 창업 이후 월평균 1,500만 원의 매출, 인론·SNS 등을 통해 원주의 핫플레이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이 없는 천연 미백치약을 개발하여 조성물 특허 등록</li> <li>• 2021년 10월 기준 20개국 수출, 베트남에서 한국 방문 필수 소핑품으로 선정 등 성과</li> <li>※ 2017년 창업 이후 2018년 매출 0.8억 원, 2019년 1억 원, 2020년 1.3억 원으로 지속 성장</li> </ul>

2021년부터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일의 투자유치 피칭데이인 ‘소상공인 쇼케이스 데이’를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투자 유치를 지원했으며, 크라우드 펀딩, 친환경 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후속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쇼케이스 데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이후 사업화지원 대상자 총 989명 중 845명(85.4%)이 영업 중으로 신생 기업 생존률(2018년 기준 3년차 생존률 44.7%) 대비 높은 수준의 생존률을 유지하고 있고, 연평균 매출액은 1.16억 원(2015~2018년도 평균)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체험점포 현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전북	경남	울산	전남	충북	강원	제주	경북	계
4	1	2	2	2	1	1	1	1	1	1	1	1	1	1	21

**생활혁신형 창업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산(백만 원)	3,188	1,907	636	518	315
	교육생(명)	4,188	1,646	889	775	-

한편 2018년부터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경영실패 시 상환부담이 없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도 진행했다. 예비창업자의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공모·평가 후 최대 2천만 원의 성불공 용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용자지원 제도로 실패 시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를 지원했다. 2018년 사업 신설 이후 2021년까지 총 7,498건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발굴됐으며, 총 6,385건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생활혁신형창업 아이디어 선정 및 사업화 현황(2021년 12월 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신청	6,420	3,557	2,536	1,948	14,461
선정	4,188	1,646	889	775	7,498
사업화	3,657	1,362	737	629	6,385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등 전통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

그 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체·종사자 수 등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었다. 일본의 노포(老鋪)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를 이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그 성공사례를 전파하여 소상공인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숙련기술, 경영·기술혁신 및 노하우 등을 확산하여 소상공인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육성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2021년 8월에 지정된 백년가게(보배집)를 방문한 권칠승 장관은 “오랜 기간 지역 골목상권에서 곳곳이 버텨온 백년가게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국민추천은 업력 20년)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가운데 선정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매장환경 개선,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기획전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2021년 기준으로 백년가게는 총 1,158개사, 백년소공인은 총 732개사가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더불어 백년가게의 전통 맛을 담은 제품을 밀키트로 상품화하여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식당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백년가게의 디지털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백년가게 밀키트 제품은 2021년 25종에서 2022년 총 6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홈쇼핑, 대형마트, 해외 수출 등 판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천공항 내 내·외국인이 밀키트를 구매하여 바로 식사할 수 있는 밀키트 체험존을 마련할 예정인데,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쇼케이스, AI 자동판매기를 도입해 스마트스토어 형태로 구축할 계획이다.



### 백년가게·소공인 직접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단계	2020년		2021년	
구분	지원내용	한도금액	지원내용	한도금액
시설개선	-	-	작업환경, 작업공정, 매장환경 개선	5백만 원
판로지원	-	-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프로모션, 광고 등	11백만 원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연계	2백만 원	전문컨설팅 지원 등	2백만 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발굴·선정 (백년가게/소공인)	72 / -	252 / 99	389 / 244	445 / 389	1,158 / 732
시설개선 (지원 수/지원액)	2021년부터 직접지원사업 신설			500 / 25	500 / 25
판로지원 (지원 수/지원액)				100 / 13	100 / 13
컨설팅 등 (건수)	56	76	132	27	291
자금우대 (건수)	-	-	94	96	190

### 소공인 혁신거점 기반 강화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개별 지원을 넘어서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거점이 필요하다. 이에 특화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 등 집적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과 제품 개선 및 판로 개척 등 개별 지원을 확대했다.

집적지별 소공인 특화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3년 설치한 특화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 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지원 등을 위해 공동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했다. 2021년 12월 34곳으로 확대된 특화지원센터는 특화교육, 컨설팅, 맞춤형 자율사업 등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부터 소공인 집적지에 스마트장비를 구축하고 기획·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판매까지 일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2021년 12월 기준 8곳 구축).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수준의 스마트화 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은 2020년부터 시작했고, 2025년까지 1만 개의 소공인 사업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개별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써 2017년부터 판로 확대, 클린 제조환경, 제품 기술가치 향상,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이라는 개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소공인은 6,385곳이며, 그 결과 매출·수출·고용 등 모든 지표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 개별소공인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기업(개사)	554	417	330	2,606	2,478
성과지표(%)					
매출	15.8	15.5	16.6	26.6	-
수출	4.1	35.6	26.2	14.8	-
고용	13.4	14.7	26.6	24.7	-

###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협업 촉진

2017년에는 소상공인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한 3단계(일반형, 선도형, 프랜차이즈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2018년에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아카데미 전문기관(6곳)을 위탁 운영했다.

### 연도별 공동사업·판로사업 지원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공동사업	433	361	377	311	283	291	256	210	209	2,731
판로사업	-	17	116	117	124	300	408	475	424	1,981
지원예산	347	246	240	188	193	250	252	199	166	

2019년에는 협동조합 제품의 상품성 개선,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 온라인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통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2020년에는 중복 참여 사례, 정부사업 의존도를 고려해 졸업제를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협업 성과가 우수한 고성장 조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매출과 고용률을 반영한 성장성을 추가했다. 이러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결과 공동사업은 2021년 209개 조합을 대상으로 69억 원을 지원했고, 협업 아카데미를 2018년 6곳에서 2021년 11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판로사업의 결과로 2017~2021년 총 1,731개 조합에 대해 254억 원의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 2017~2021년 판로지원 실적

(단위: 개,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원조합(개, 부스)	124	300	408	475	424	1,731
지원성과	4.2	25.2	36.1	74.8	113.7	254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상점가 소비활력 제고



코로나로 인해 다른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미덕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어촌을 도우면서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2.01.

###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를 통한 소비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이 관련 전통시장법을 개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근거해 발행됐고,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저변 확대를 위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및 복지수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2019년에는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출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회복을 위해 2차례의 추경을 반영해 총 4조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다. 2021년 9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서울 서대문구의 영천시장을 찾은 권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에서 10% 특별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누적 발행은 15.6조 원에 달하며, 14.9조 원이 판매돼 14.3조 원의 상품권이 회수됐다. 전체 영업점포의 81%인 19.6만 개 점포가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해 2019년 66억 원에서 2021년 12월 3,572억 원으로 판매액이 대폭 증가했다. 2022년에는 충전식 카드상품권도 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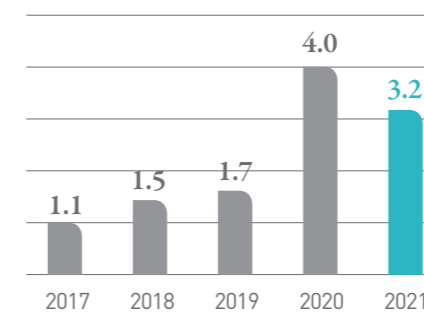
####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행	12,850.0	15,016.3	20,074.1	40,486.7	31,573.1	35,000.0
예산	791.8	1,080.2	1,768.1	4,381.7	2,956.0	2,9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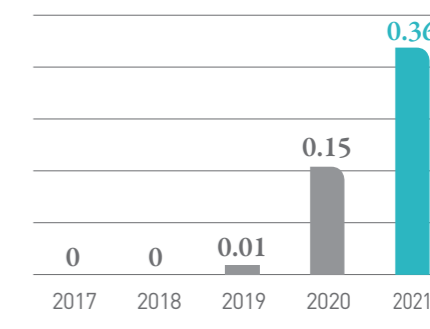
####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단위: 조 원)



#### 연도별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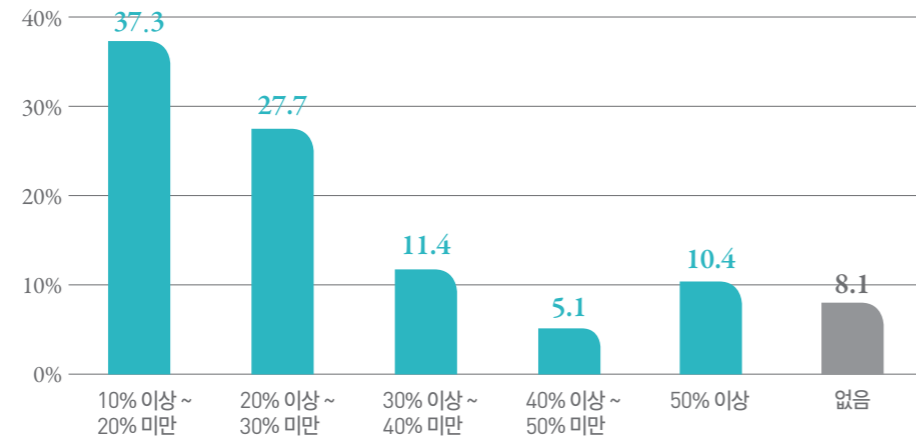


주: 2019년 9월 모바일 상품권 신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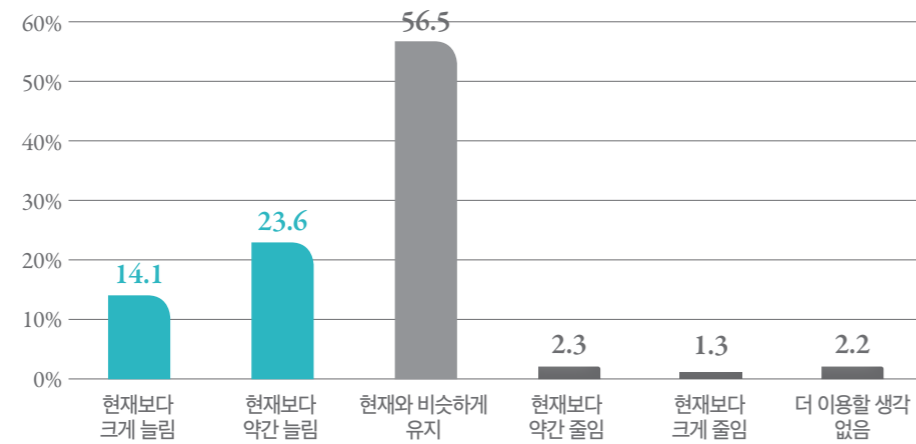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1년 7월)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9%가 부가적 소비가 있었고, 37.7%가 상품권 이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증대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응답자의 91.9%는 부가적인 소비가 있었다고 응답



응답자의 37.7%는 향후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증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44,861명 대상 조사(2021년 7월 21일~22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 제고**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밀집구역(떡자골목)을 비롯하여 가구거리, 커피전문점 밀집구역, 자동차 튜닝거리 등 각종 특화업종 구역이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설 현대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차장 조성, 시장경영 바우처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2020년 2월) 및 시행령(2020년 8월)을 개정했다. 법 개정 후 전국 28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총 57곳(2021년 10월 말 기준)을 신규 지정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 총 지정 수	연도별		골목형 상점가 보유 지자체 수	
	2020년 지정	2021년 지정	광역지자체 수	기초지자체 수
57곳	5곳	52곳	12곳	28곳



#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오늘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지역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 2021.07.20.

##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마련

코로나19로 지역상권 침체가 심화됐다. 특히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 및 상권 쇠퇴의 이중고를 겪으며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은 용자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도심 쇠퇴, 임대료 급상승 등으로 인해 직접 지원이 필요한 쇠퇴상권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권 보호 및 낙후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2017년 여·야에서 상권지원 2개 법안을 통합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설득하고 상임위 및 법사위의 의결·심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21년 7월 27일 지역상권법 제정안이 공포됐다. 이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면, 임차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부 및 지자체가 해당 상권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임차료 인상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용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용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성화 사업으로서 환경·시설 정비와 교육·경영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처럼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의 경제 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 발전 가능한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 상승 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하여 상권내몰림을 방지하고 상권활성화 도모

- (구역지정)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 (특례내용)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상가임대차법 범위 내),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특례(자율상권구역) 등
- (업종제한) 지역상생구역에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 제한 가능
  - 다만,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 (지원내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 및 시설비 용자, 자율상권구역 대상 상권활성화 지원(환경 정비, 상권 특성화 사업 등)

### 쇠퇴상권 부흥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 추진

2018년에는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1차로 대구 칠성종합시장 일원 상권, 수원 역세권 상권, 강진읍 상권의 3곳이 선정됐다. 그 후 2019년 9곳, 2020년 8곳, 2021년 8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은 상권 특색에 맞는 디자인 개발, 상권의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등을 통해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의 상생문화를 확산시켰다. 더불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도 2022년까지 3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권철승 장관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어려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며 "동 사업의 확산과 성장을 통해 상인, 주민, 지자체와 기업 간의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억 원)	60	29	113	179	258
선정(곳, 누계)	3	12	20	28	30(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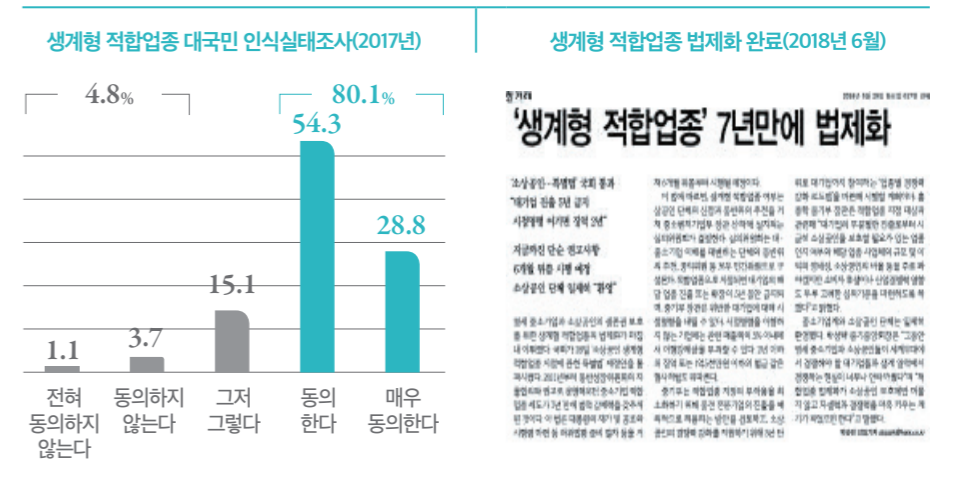
#### 상권르네상스 사업 사례 - 강진읍 상권의 특화거리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사업영역 보호

그동안 민간자율 방식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권고기간 및 법적 강제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적합업종 해제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업종·품목은 지속적·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했다. 2018년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했다. 이에 따라 서점, 두부, 장류, 면류 등 11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고 대·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12개)을 통해 사업영역 갈등을 해소했다. 이로써 약 8만 8천 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제도도 운영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로 관련 업계 약 51만 5천 개의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했다.





## 스마트슈퍼로 바꾼 후 매일 보너스 받는 기분이에요



아내와 둘이서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최 씨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다. 심야시간대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가게에 들어와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에서 직접 결제를 하므로 최 씨가 퇴근한 후에도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슈퍼는 이렇게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및 장비를 도입하여 주간에는 유인,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를 일컫는다. 이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행된 중소기업부의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의 일환이다.

최 씨의 가게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이 32.6% 증가했다. 게다가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30대 손님들이 많아져 이용고객층이 확대되는 효과도 얻었다. 중소기업부는 20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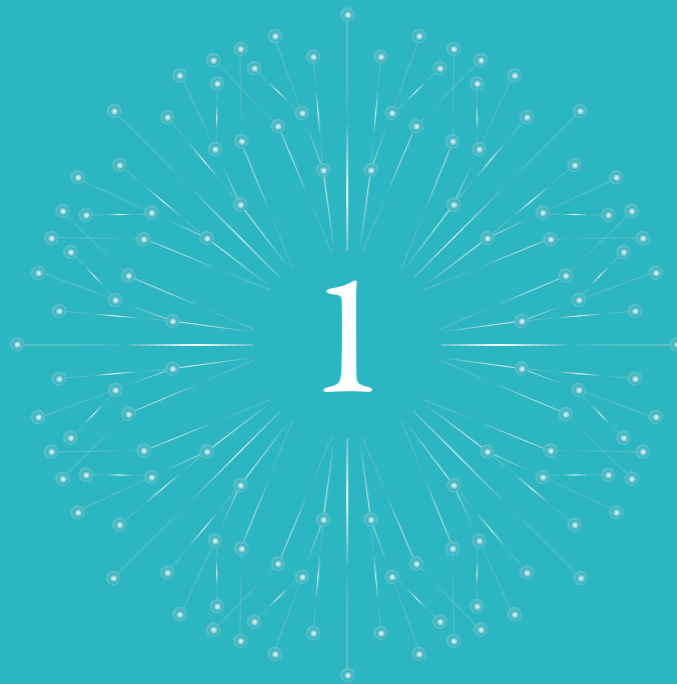
# 제3절

##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1. 혁신기업 창업생태계 조성
2.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3. 원활한 재도전 기반 확충



# 혁신기업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2벤처붐 성과 보고서 모두발언, 2021.08.26.

## 창업벤처혁신실 신설 및 창업의 청사진 마련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에 ‘벤처’가 들어간 것은 정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창업·벤처 전담 조직도 강화되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기존의 ‘창업벤처국’은 ‘창업벤처혁신실’로 승격되었고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혁신실에는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기술인력정책관’ 등 3개 하부조직을 두게 되었다.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였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표명하였고, 2018년 2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을 통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인재의 적극적 창업 도전을 유도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대책은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년 10월에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을 통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협력 정책을 제시하였다. 2021년 5월에는 청년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2021년 8월에는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에 대한 계획을 담은 ‘청년창업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창업, 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모델, 지역 생태계, 청년창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술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을 신설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 대학을 선정했다. 2019년에는 복잡한 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성장단계별 지원(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체계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D.N.A.(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그린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업력 3년 이상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창업도약 패키지 예산을 2018년 800억 원에서 2020년 1,275억 원으로 확대했다.

각 창업 패키지의 성과도 훌륭하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2020년 2,300명을 지원하여 창업 2,242개사(창업률 97.5%), 고용 5,007명, 매출 561억 원, 투자유치 218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

했다. 초기 창업 패키지의 경우 2020년 1,111개사를 지원해 고용 4,691명, 매출 8,301억 원, 투자유치 1,506억 원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2020년 750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해 6,244명의 고용 및 12,84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5,88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연도별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운영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비창업 패키지	예산(억 원)	-	1,013	1,328*	1,491*	1,002	982
	지원기업(개)	-	-	2,207	2,300	1,530	1,500
초기창업 패키지	예산(억 원)	-	-	1,180	1,145*	1,003	925
	지원기업(개)	-	-	1,078	1,111	936	910
창업도약 패키지	예산(억 원)	600*	800*	960*	1,275	1,020	900
	지원기업(개)	813	441	435	750	600	600
합계	예산(억 원)	600	1,813	3,468	3,911	3,025	2,807
	지원기업(개)	813	441	3,720	4,161	3,066	3,010

주: \*는 추경 포함

한편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팁스)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 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최대 5억 원), 사업화(최대 1억 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 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에 따라, TIPS 졸업기업 대상의 후속 지원 프로그램(Post-TIPS)을 신설했다. 이는 TIPS(R&D) 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5억 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3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TIPS 지원체계를 ‘Pre-TIPS → TIPS → Post-TIPS’로 고도화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서비스 플랫폼·인공지능 분야 등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이 가능한 TIPS 운영사 9곳을 신규 선정했다. 2021년에는 최초의 비수도권 팁스타운인, ‘대전 팁스타운’을 개관하여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창업 허브를 설립했다.

2021년 5월 대전 팁스타운 개관식에 참석한 권철승 장관은 “대전 팁스타운이 지역 창업 거점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IPS 프로그램의 성과는 놀랍다. TIPS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로 선행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 중 58%가 후속 투자를 유치하였다. 투자 규모는 선행 투자의 약 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TIPS 프로그램에 참가한 창업기업 중 8개사가 IPO, 40개사가 M&A에 성공했다. 아울러 미국 포브스(Forbes)가 선정하는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청년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TIPS 프로그램 출신이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TIPS 기업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에서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와 ‘CES 2021 혁신상’을 수상한 청년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권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라며 “혁신적인 청년 스타트업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그간의 청년 스타트업 성과를 격려했다.

**TIPS 프로그램 연도별 지원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R&D	597억 원 205개사	806억 원 256개사	1,227억 원 255개사	1,456억 원 300개사	1,468억 원 400개사	2,157억 원 500개사
비R&D*	250억 원 247개사	536억 원 365개사	519억 원 329개사	544억 원 411개사	644억 원 500개사	777억 원 605개사

주: \*는 TIPS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Pre-TIPS, Post-TIPS, 팁스타운

**TIPS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과**

(단위: 개, 억 원)

선행 투자		TIPS 참여 이후 후속 투자							
		전체		M&A		해외투자		국내투자(M&A 제외)	
창업 기업 수	금액	창업 기업 수	금액	창업 기업 수	금액	창업 기업 수	금액	창업 기업 수	금액
1,634	3,694	847	62,933	40	5,563	106	5,523	824	51,847

주: 2021년 12월 기준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국내 창업생태계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창업생태계와의 교류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창업생태계와의 교류를 위해 2019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도 뉴델리,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전용 해외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를 신설하였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그 후 2020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싱가포르 등에 센터를 개소하는 등 K-스타트업 센터를 총 6개국으로 확대하였다.

2020년 K-스타트업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영선 전 장관은 “최근 스타트업 성장세를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가 간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K-스타트업 센터의 국내·외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거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는 KSC 파리 개소를 진행하여 현재 총 7개 국가에서 7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생태계를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칠승 장관은 2021년 11월 10일 방한한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겸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양국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실시하며, 스타트업 교류 및 공동 벤처펀드 조성 협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권 장관은 양자면담에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들이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한국의 K-스타트업센터 등을 통해 양국 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이후 양국 간 공동으로 조성·운영 중인 7,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에 이어 벤처투자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K-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결과, 2019년 23개사의 지원기업 중 10개사, 2020년 92개사의 지원기업 중 35개사, 2021년 61개사의 지원기업 중 46개사가 현지법인 설립, 해외투자 유치, 현지 파트너사 발굴 등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국가별 매출, 수출, 고용, 투자 성과(2020년)**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	핀란드	이스라엘	계
지원기업	10개사	22개사	12개사	10개사	18개사	20개사	92개사
매출	11,568	22,911	42,675	4,353	2,713	11,306	95,526
수출	1,349	3	350	66	150	269	2,187
고용	96	206	91	7	68	161	629
투자	1,994	100	16,270	847	8,300	3,374	30,885

또한 해외 우수 창업기업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269개 외국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법인 설립 114개, 창업이민 비자 발급 194건 등 국내 창업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해 대표적인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연도별 운영 성과**

(단위: 팀, 건, 억 원)

사업 연도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경쟁률	국내 법인설립	창업이민비자	
		국가 수	신청팀	국가 수	지원팀			창업준비 (D-10-2)	창업비자 (D-8-4)
2017	45.8	118	1,515	21	49	30.9 : 1	23	18	8
2018	73.8	108	1,771	31	73	24.3 : 1	34	39	18
2019	44	95	1,677	20	38	44.1 : 1	14	17	13
2020	60	118	2,648	24	55	48.1 : 1	26	59	19
2021	60	129	2,568	33	54	47.6 : 1	17	61	-
합계	283.6	568	10,179	129	269	37.8 : 1	114	194	58

주: 2021년 12월 기준

2019년에는 기존 국내 위주로 운영하던 ‘벤처창업대전’을 전 세계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19’로 개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컴업 2020을 이어나가기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했다. 2021년 미트 더 퓨처(Meet the Future-Transformation(대전환))라는 주제로 개최된 ‘컴업 2021’에서 권칠승 장관은 “본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에 과감히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들이 늘어나고, 창업생태계로 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컴업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CES 등 해외 유명 전시회에 K-스타트업관을 구성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을 신설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개방형 혁신 모델 확산**

스타트업이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같은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구성 주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확산시켰다. 2018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사내벤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사내벤처 육성 지원 대상을 사내벤처팀 구성 후 분사한 3년 이내 스타트업까지 확대하고, 개방형 트랙 신설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렇게 개방형 혁신 모델을 확산시킨 결과 지원사업이 도입된 2018년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62개 운영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사내벤처팀(기업) 595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18-2020년간 선정·지원한 395개팀(사)에 대한 2021년말 기준 주요 성과로는 매출 926억 원, 고용 635명, 투자액 263억 원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사내벤처 육성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내벤처	100	100	200	200	150
지원규모	94개팀(사)	100개팀(사)	201개팀(사)	200개팀(사)	150개팀(사)

\* 2021년도 사내벤처육성 예산 중 70억 원을 활용하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65개사) 시행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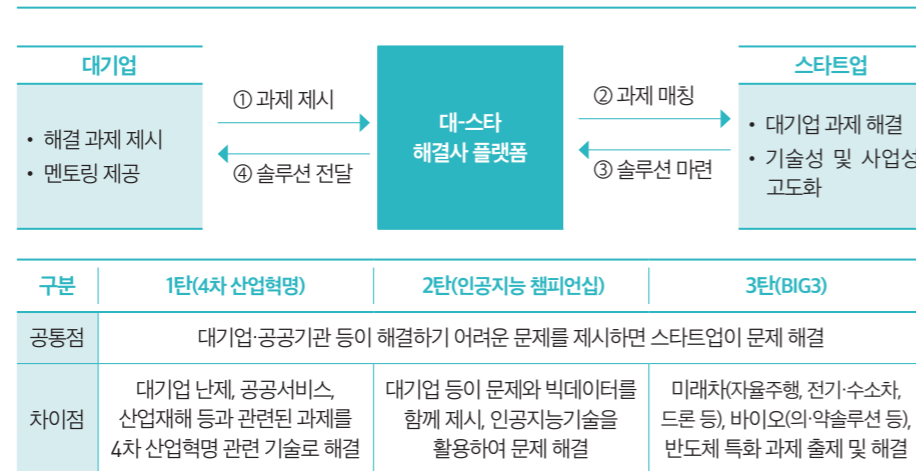
(단위: 개사)

연도	운영기업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2018	6	1	1	9	17
2019	2	3	3	1	9
2020	3	2	9	2	16
2021	4	3	13	-	20
합계	15	9	26	12	62

2020년에는 ‘대-스타 플랫폼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대기업-스타트업의 관계가 수직·폐쇄적이었지만, 해당 플랫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수평·개방적 협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플랫폼은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공고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한 뒤 우수팀을 선발하는 1탄 ‘디지털 드림9’과 2탄 ‘인공지능 챔피언십’의 투트랙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2021년에 실시한 제3탄에서는 BIG3(미래차, 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를 신규로 추진해 수요기업을 공공기관 및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2020년 대기업 관계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팀 26개사를 선정한 후 최대 25억 원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2021년 수요기업과 지원 스타트업을 확대하여 우수팀 53개사를 선정한 후 최대 52억 원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구조 및 추진체계



한편 2021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력하여 국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창업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글로벌 기업은 보유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컨설팅·마케팅·홍보·투자유치·판로개척·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 서비스 및 다쏘시스템, 사업이 정규 편성된 2021년에는 엔시스와 지멘스로 협업 대상 글로벌 기업을 확대해 나갔다. 최근 창구 프로그램(구글 협업)에 참여한 게임 분야 창업기업 5개사가 대형 게임사에 인수·합병(M&A)되었으며, 엔업 프로그램(엔비디아 협업)에 참가한 창업기업(원티드랩)이 코스닥 상장(기업공개, IPO)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세부 현황

협업 기업	Google Play	nvidia	Microsoft	DASSAULT SYSTEMES	Ansys	SIEMENS
분야	모바일 서비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조 (반도체 등)	제조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제조 (동력장치, 맞춤형 의료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지원 세미나</li> <li>구글플레이 1:1 심층컨설팅</li> <li>창구 데모데이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술 교육 및 세미나</li> <li>GTC 참가 기회 및 홍보</li> <li>클라우드 크레딧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교육·컨설팅</li> <li>마켓플레이스 제품 등록</li> <li>데모데이, VC 및업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전문가 1:1 컨설팅</li> <li>주요 행사 홍보 기회 제공</li> <li>다쏘시스템 SW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기술교육</li> <li>글로벌 행사 데모 시연지원</li> <li>엔시스 SW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교육</li> <li>Solid Edge 1:1 컨설팅</li> <li>국내·외 행사 홍보 기회 제공</li> <li>Solid Edge 라이선스 지원(150개팀(사))</li> </ul>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최근 신설법인(2020년 12.3만 개), 신규 청년 창업기업(2020년 49.0만 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치도 각각 11.5만 개 및 46.8만 개로 전년의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창업지원 인프라·시설과 자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에서의 창업 붐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인재들이 혁신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창업 관련 인프라를 지속 강화하여 나갔다.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구축 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창조경제혁신센터	437	377	380	398	364	364
메이커 활성화 지원	-	349	357	376	345	437
청년창업사관학교	500	1,022	922	1,041	1,077	845
로컬 크리에이터	-	-	-	88	100	69



2018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 혁신 허브로 개편하였고, 고용, 투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창업생태계 확산을 이끌었다. 2018년 2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이후, 집중적으로 육성한 창업기업은 연평균 2,525개사로, 2015~2017년 3년 평균 대비 234% 증가했다. 또한 신규 채용 평균 인원은 6,558명(2015~2017년 3년 평균 1,945명)이었으며, 창업기업 투자유치는 5,848억 원(2015~2017년 3년 평균 2,180억 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모두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6월 기준 11,19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계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메이커와 스타트업에 격려하고 혁신창업 지원 및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2021년에는 ‘청년 활성화 방안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조창업 촉진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제품 제작 및 본격 양산이 가능한 전문랩 및 특화랩 중심으로 개편했다. 2021년 6월 고려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를 방문해 제조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권철승 장관은 “2022년까지 30개의 전문랩을 대폭 확충하고, 제조 스타트업이 최적의 생산업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조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213개로 확충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창업 문화 확산 및 특화 분야 제조창업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2017년에는 창업 전 단계 유기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창업성공 패키지’로 개편하고, 선발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했다. 2018년에는 신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7개소로 늘리고, 선발 규모를 1,000명으로 2배 확대했다. 2021년에는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완화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현황**

기존(5개)	개선(18개)
안산, 충남, 광주, 경북, 경남	기존 5개 + 신규 13개 (서울, 인천, 파주, 원주, 대전, 세종, 청주, 전주, 나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

2016~2020년 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CEO 3,583명을 양성하고, 1조 7,077억 원의 매출액과 9,6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철승 장관은 2021년 10월 경기북부(파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창업 사관학교 입교 기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군 장병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진 후 “탄생 10주년을 맞는 올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짚어보고 청년 감수성에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발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도별 성과**

구분	1~5기 (2011~2015년)	6기 (2016년)	7기 (2017년)	8기 (2018년)	9기 (2019년)	10기 (2020년)	최근 5년 (2016~2020년)	총합 (2011~2020년)
졸업자(명)	1,215	300	473	890	937	983	3,583	4,798
매출액(억 원)	31,476	2,542	3,461	4,352	3,728	2,994	17,077	48,553
고용인원(명)	4,147	862	1,143	1,948	2,362	3,297	9,612	13,759
지재권(건)	7,889	1,463	1,944	1,875	2,152	1,666	9,100	16,989

주: 11기(2021년) 실적은 집계 중

2020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 문화·자연적 특성, 자원 기반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 선정된 로컬 크리에이터 280개팀은 매출액 535억 원, 신규 고용 502명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르게 선발한 결과 비수도권(77.9%), 청년(63.2%), 여성(36.8%) 선정 비율이 타 창업지원사업(청년 49.2%, 여성 21.7%)보다 높아 청년과 여성의 창업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1년 4월 충남 공주 소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인 ‘(주)마을호텔’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권철승 장관은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지역가치 창업가를 적극 발굴·육성해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청년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청년창업이 2017년 42만 6천 명에서 202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49만 1천 명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이며, 2021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 46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청년들은 여전히 비수도권 지역 내 창업거점 부족 및 창업과 학업 병행 어려움 등의 이유로 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 창업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5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학의 연구·주거·인재 양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창업지원 의지와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이 각 지역 청년창업을 책임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6개 내외의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성장단계별 사업화 프로그램(예비·초기·도약 창업 패키지)을 동시 운영 가능한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하고 최대 5년간 운영기간을 보장하여 지역의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들의 기술창업 촉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2021년 12월에 시범 개최했고, 수상팀 및 결선 탈락팀에게는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중기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합동으로 후속 연계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스타트업의 현장 개발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에 대한 청년 실무인재를 양성해 스타트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스타트업 청년인재 이어드림' 사업을 2021년 8월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학력·전공 무관)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청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만 39세 이하의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BIG3 혁신 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가 출현하고 있다. 그중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의 3대 분야는 벤처·스타트업이 역동적으로 진출하는 분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BIG3 분야(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9년 12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중소·벤처기업 신규 지원대상 25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창업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6억 원) 및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했다. 또한 전문인력과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보유한 분야별 주관기관 및 기업혁신 멘토단을 선정하여 BIG3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BIG3 선정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R&D, 자금, 보증 등 연계 지원을 지속하고, 분야별 주관기관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BIG3 분야 집중지원을 통해 기업은 평균 매출과 고용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벤처코리아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등 민간 프로그램과의 협업으로 BIG3형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사례를 다수 창출하였다. 2022년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 시장과 업계수요를 반영하여 유망기업 100개사를 추가 선정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BIG3분야 지원기업 평균 매출 및 고용 증가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기업당 평균 매출	25.6억 원	31.6억 원	6.0억 원 (+23.4%)
기업당 평균 고용	22.6명	29.0명	6.4명 (+28.3%)

### 창업 친화적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

2018년 프롭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이 출현함에 따라 유흥주점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을 창업지원법 적용 범위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장 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일몰연장(-2022년 8월), 면제기간(5 → 7년) 및 부담금 종류 확대(12 → 16개)를 추진했다.

2020년에는 연쇄 및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 모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간은 제조업 중심의 물적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게 하였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때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창업지원법을 3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경제활동 등 급격한 창업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입법목적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한 '창업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법 조문 체계도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함으로 창업생태계의 성장구조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을 구성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산업 및 기술 창업기업 집중육성,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등 창업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강화,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한 창업정책 효율화 추진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산업 분야 혁신 창업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주력으로 우뚝서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지난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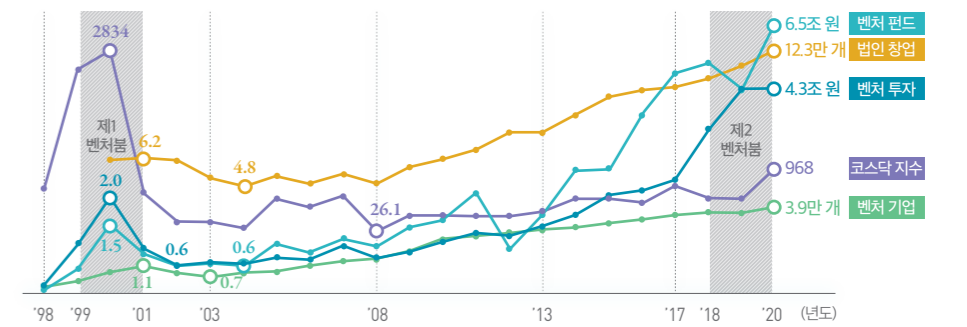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1.10.25.

## 우리 곁에 돌아온 제2벤처붐

우리나라 벤처생태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던 제1벤처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조치와 정보화, IT혁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힘입어 형성되었다. 중소기업청과 코스닥 시장을 신설(1996년)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1997년)하였고, 벤처투자,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신설(1998년)하는 등의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벤처기업이 1만 개, 벤처투자자 2조 원, 코스닥지수는 2,834p에 이르렀으나, 이후 벤처붐이 잦아들면서 장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2020년 전후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하였고, 그 결과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의 요람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 벤처투자 4.3조 원, 벤처펀드조성 6.6조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법인창업이 12.3만 개에 이르는 등 벤처창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이 매우 활발하다. 2021년에도 벤처투자 7.7조 원, 벤처펀드조성 9.2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코스닥지수 또한 20년 7개월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등 바야흐로 벤처 전성시대다.

창업·벤처 생태계 지표 변화 추이



제2벤처붐이 도래한 배경에는 그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노력이 있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주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다. 8월에는 8,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모태펀드를 통해 대규모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11월 최초의 창업벤처 대책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이어 벤처분야 활성화를 위한 20여 차례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가장 먼저 창업을 활성화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을 지닌 유능한 인재가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실패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했다. 사업에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또한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임시험가를 부여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했다.

창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출이나 용자가 아닌 투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투자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편성해 선도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총 예산 7.3조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7조 원을 2017년 추경 이후 집중 출자했다. 혁신창업과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6조 원,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펀드 5천억 원 등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투자 분야를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분리됐던 법령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선진화했다. 벤처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투자비용 산정방식을 변경해 민간의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고, 하나의 기업에 여러 번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밝혔다.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성장(Scale-up)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해준 경우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었기에, ‘무늬만 벤처’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유치, 후보기업 육성, 투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 당 5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는 기업 당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제공했다.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이 함께 아기유니콘 200개사를 선발해 시장개척 자금,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 영국 등 유니콘기업 상위 국가를 벤치마킹해 창업주가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투자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되어, 재투자를 통해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과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2018년 1월)’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확대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의 벤처스타트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 편입 유예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 허용 등 기업법 제도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같은 노력은 제2벤처붐으로 결실을 맺었다. 2021년 1~9월 기술창업이 전년보다 3.8% 늘어 18만 607개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초로 18만 개를 돌파했고, 벤처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또한 최근 수년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가치는 코스닥 시가총액의 45% 수준에 이르렀다. 벤처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든든한 고용 버팀목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야놀자, 무신사, 켈리 등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기업이 2017년 3개에서 2021년 18개로 급증했고, 쿠팡, 우아한형제들, 하이퍼커넥트 등이 글로벌 수준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돈이 벤처·스타트업에 모이다

벤처투자 실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종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2017년에 2조 원대를 유지하던 연간 벤처투자는, 2018년 3조 원 중반, 2019년 4조 원을 돌파한 뒤, 2021년 역대 최대수준인 7.7조 원을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제2벤처붐이 도래했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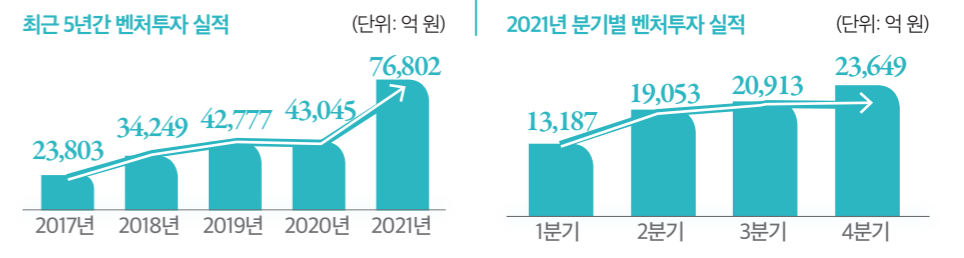
2017년 ~ 2021년 1~12월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건,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2월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증감률	-	+43.9	+24.9	+0.6	+78.4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벤처투자실적이 78.4%, 3조 3,757억 원 증가하였다. 종전에 비해 벤처투자가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전년대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최초로 1조 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 원(+116.0%, +1조 23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3조 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3조 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4조 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021년 전체 벤처투자는 2020년 실적을 3조 원 넘게 경신했다.

2019년 ~ 2021년 1~4분기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대비	
				증감	구성비
1분기	7,789	7,732	13,187	+5,455	+70.6
2분기	12,154	8,821	19,053	+10,232	+116.0
3분기	11,246	12,371	20,913	+8,542	+69.0
4분기	11,588	14,121	23,649	+9,528	+67.5
합계	42,777	43,045	76,802	+33,757	+78.4





2021년도 벤처펀드 결성실적은 역대 최초로 9조 원을 돌파하였다. 2020년에도 종전 최대 결성실적을 경신한 6조 8,808억 원을 기록했는데, 불과 1년만에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2021년 벤처펀드 결성실적은 2020년과 비교해서도 약 34.0%(+2조 3,363억 원) 늘어난 9조 2,171억 원, 신규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404개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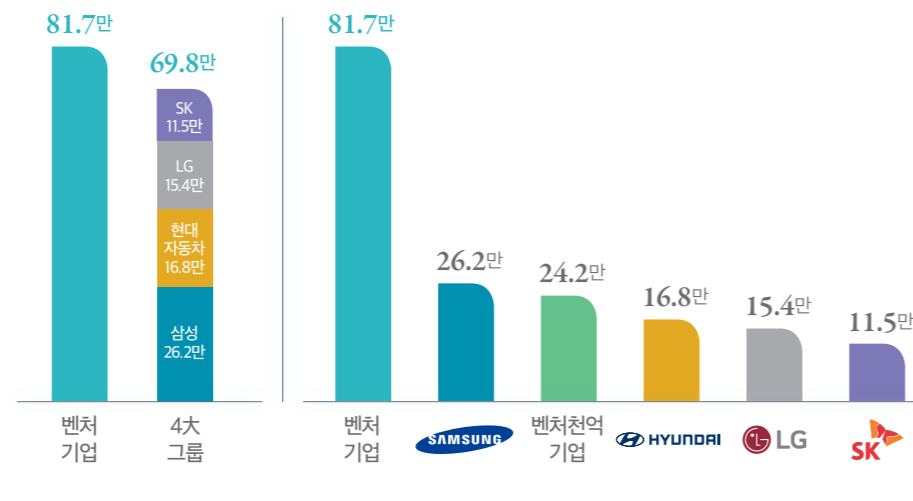
2017년~2021년 1~12월 신규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2월	결성금액	45,856	48,427	42,411	68,808	92,171	
	전년 대비	증감	-	+2,571	△6,016	+26,397	+23,363
		증감률	-	+5.6	△12.4	+62.2	+34.0
	결성조합 수	164	146	170	206	404	
	조합당 평균 결성액	279.6	331.7	249.5	334.0	228.1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 4대 그룹을 능가하는 일자리 창출

202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2020년 말 벤처기업의 고용은 81만 7,29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그룹 고용 69만 8천여 명보다 11만 9천여 명 더 많은 수치로, 벤처기업이 4대 그룹을 능가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벤처기업과 4대그룹 간 고용규모 비교 (단위: 명)



1)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20년말 기준), 2021.12

정밀 실태조사와 별도로 2021년 6월 말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황<sup>2)</sup>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또한, 벤처기업의 2020년도 말 고용은 70만 201명으로, 우리나라 4대 그룹 고용 69.83만 명보다 약 2,000여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2021년 2월)에 따라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취지에서 벤처기업 수가 줄었음에도(2020년 말 39,511개사 → 2021년 6월 38,193개사), 여전히 벤처기업 고용은 4대 그룹 고용을 넘어섰다. 종합적으로 보면 벤처기업은 4대 대기업 그룹보다 고용이 많고,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처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조사대상 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벤처천역기업이라고 한다. 벤처기업 가운데서도 성장하여 매출, 고용 등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벤처천역기업은 평균 업력이 25.6년으로, 기업의 업력별 분포를 볼 때 상위 10%를 넘는 수준에 해당한다. 벤처천역기업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업력별 기업생멸 현황 (단위: 천개, %)

업력	활동기업				
	2019	2020	증감	전년비	구성비
전체	6,527	6,821	294	4.5	100.0
3년 이하	2,734	2,833	99	3.6	41.5
4~6년	1,111	1,204	93	8.3	17.7
7~9년	689	713	24	3.5	10.5
10~19년	1,393	1,416	23	1.7	20.8
20년 이상	599	654	54	9.1	9.6

\* 통계청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2021년 12월

2020년 말 벤처천역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8,668명(3.7%) 증가한 24.2만 명으로 재계 2위 수준이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387.9명으로 나타났다.

구분	2021년 조사 (2020년 벤처천역기업수)	2019년 말(명)	2020년 말(명)	증감(률)
전체 고용인원	624개사	233,362	242,030	8,668명(3.7%)
평균 고용인원		374.0	387.9	13.9명(3.7%)

2)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상반기 혁신벤처스타트업 고용동향, 2021.8

3)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벤처천역기업조사 결과(2021.11)

벤처·스타트업의 일자리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채용 정보업체 잡코리아가 2020년 구직자 504명, 직장인 5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스타트업 취직 의사가 있으며, 직장인 4명 중 3명이 스타트업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자와 직장인 2~3년차(80%), 4~5년차(78.8%)에서 이직의사가 높아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2030밀레니얼 구직자들에게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나 워라벨 보장 등 조건이 장점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또한 아주경제<sup>4)</sup>가 국민 1,5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개발자 연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벤처스타트업 일자리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4) 스타트업, 대한민국 미래경제 이끈다(아주경제, 2022.1.11.)



# 원활한 재도전 기반 확충



지난 3월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8.03.13.

##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성장 정체 → 경영 악화 → 재창업'의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재도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성장 정체 기업에 대하여는 신사업 진출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사업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73개사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1,378개사에 6,220억 원의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업전환 제도를 기존 업종전환·추가에서 신제품·서비스 도입 및 사업 모델 혁신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개편(사업전환법 개정 중)한다.

###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자금지원 규모

(단위: 억 원, 개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사업전환 계획 승인	126	107	100	226	114	673	
사업전환 자금	기업 수	272	262	260	371	213	1,378
	지원규모	1,250	1,300	1,100	1,570	1,000	6,220

주: 사업전환 자금 지원 기업 수 합계는 연도별 지원 기업 수를 단순 합산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자금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회생·파산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 5년간 1,100개사에 1,700억 원의 구조개선 자금을, 448개사에 회생 컨설팅을 제공했다.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교육·사업화자금 등 패키지 지원(2017~2021년 1,579명) 및 재창업 자금(2017~2021년 3,469개사, 5,600억 원)을 지원했다. 파산 시 압류면제재산을 900만 원에서 1,1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강제징수 유예 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도전 안전망도 확충했다.

### 주요 사업별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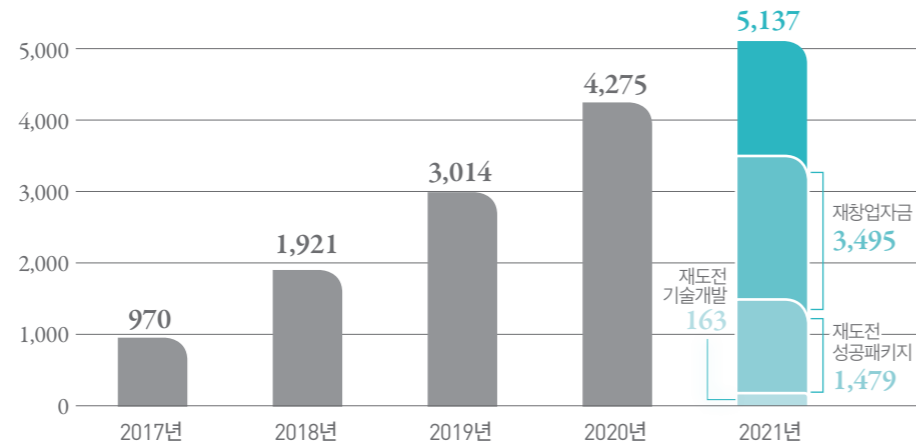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개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도약 지원자금	지원규모	2,550	2,790	2,600	3,100	2,500	4,200
	기업 수	1,166	1,181	1,227	1,319	1,082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규모	150	150	178	260	140	168
	기업 수	298	284	297	493	207	267

주: 재도약지원자금은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성

건강한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용도가 낮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예비)재창업자에게 자금 및 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해 재창업자 5천 명을 육성했다.

**재창업자 증가 추이** (단위: 명)



이 중 패키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1,273명은 2017~2020년간 매출 1,135억 원, 투자 유치 557억 원, 고용 3,147명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3년차 생존율은 77.5%로, 일반 창업기업(창업기업 전체 4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고무적이다.

**재창업기업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비교**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재창업 지원기업	94.8%	77.5%	53.6%
전체 창업기업	64.8%	44.5%	32.1%

출처: 2015~2020년 재창업기업의 휴·폐업 여부 자체 분석(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

또한 최초의 국민참여 박람회인 2018년 실패박람회를 비롯해 재도전 사례 공모전, 재도전의 날(매년 11월), 실패박물관 조성(2022년 말) 등을 통해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2021년 10월 13일 '세계재도전 포럼'에서 권칠승 장관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실패와 재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다"라며 "실패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재도전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실패의 경험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 2년 연속(2019~2020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받았다(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및 부실채권 정리**

2018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도전 및 창업환경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 지신보)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17년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창업 5년 미만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2018년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또한 기존 연대보증 임보분에 대해 5개년 폐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 실적** (단위: 조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면제 실적	2.9	12.0	15.3	24.3	18.6	73.1

**연대보증 폐지 실적** (단위: 조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폐지 실적	5.4	10.7	12.1	10.6	38.8

한편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소각도 확대했다. 2018년 9월 '7전 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부실채권 소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불가능한 특수채권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종결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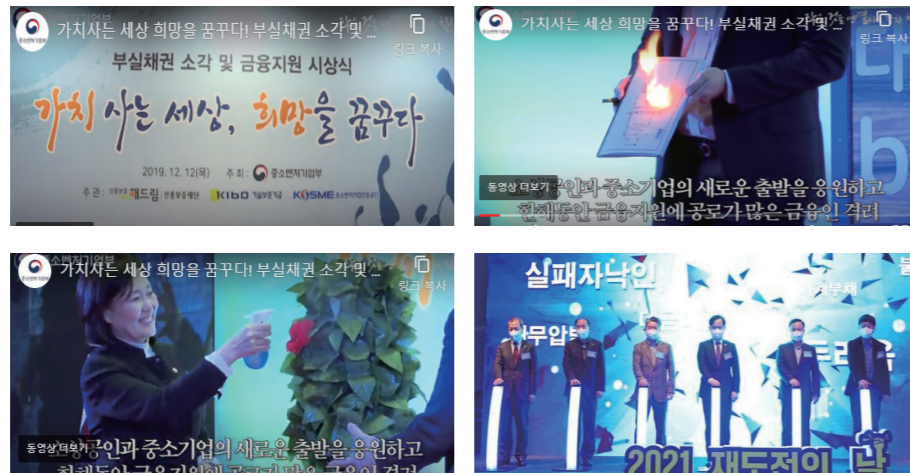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매각에 따른 효과	소각에 따른 효과
<b>상환능력에 따라 30~90% 채무 감면</b> • 중소기업인 70%, 중증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70~90%	<b>채무 부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b> • 일부라도 상환할 경우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 부활' • 재보증(대출)을 조건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관행이 사라짐

2021년에는 부실채권 소각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각금지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조 원, 2021년 말까지 5.2조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소각 및 매각)해 당초 2021년까지 3.3조 원 정리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주도의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개최해 제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확산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가치 사는 세상, 희망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개최했으며, 2021년 '제도전의 날' 행사 시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부실채권 소각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에도 2천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 소각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9년, 2021년 부실채권 소각행사 개최



제주 특산물과 아이디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B사는 제주의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으로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 껍질과 천연 화산암반수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자연과 방언(方言)을 모티브로 맥주를 제조하는 등 지역성을 담은 상품개발과 브랜딩도 지속하고 있다.

B사는 2020년 중소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의 문화·자연적 특성 및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B사는 사업에 참여한 후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과 결합한 '제주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힘입어 B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 약 320억 원, 신규고용 65명, 투자유치 130억 원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수제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2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국내 수제 맥주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양조장 모습



맥주 제품



양조장 투어



한 달 살기 프로젝트



#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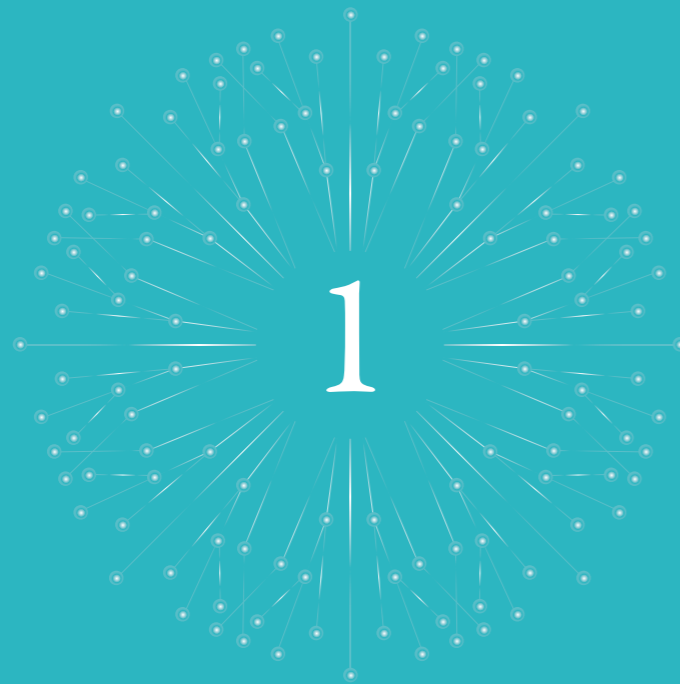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1.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2.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3. 내수·수출 등 판로 확대
4. 고용친화적 인력유입 여건 조성



#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 1천억 원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2019.01.07.

##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구조로는 혁신의 저변 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예산도 2017년 1.12조 원에서 2021년 1.7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2019년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지원단계 (혁신역량)	1단계 (역량 초기)	2단계 (역량 도약)	3단계 (역량 성숙)
R&D 수요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Test	시장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지원대상	R&D 첫걸음 기업, Start-up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	R&D 사업화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지원규모	1년, 1억 원 내외	2~3년, 2~10억 원 내외	3년 이상, 최대 20억 원 내외

2020년에는 경직되게 집행된 출연방식 R&D 지원에서 탈피해 시장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 투자형 R&D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투자형 R&D는 민간 투자시장의 기업 선별 및 육성 역량과 자본력을 활용해 벤처캐피탈이 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투자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1년에는 투자형 R&D의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제조,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형 R&D 전용 트랙(스케일업 팁스)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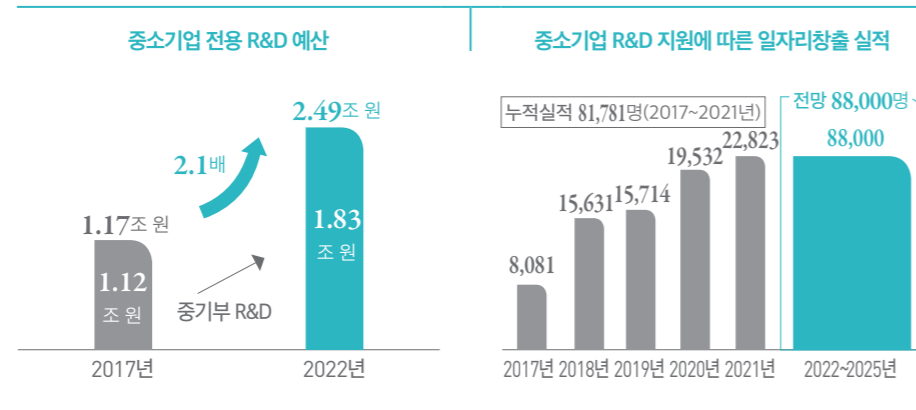
최근 기술융합 가속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중장기 전략에 맞춰 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장기 사업연계형 R&D(최대 7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의 장기 R&D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1월 10개 기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470개 기업이 신청해 중장기 기술 개발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 중소기업 전용 R&D 목표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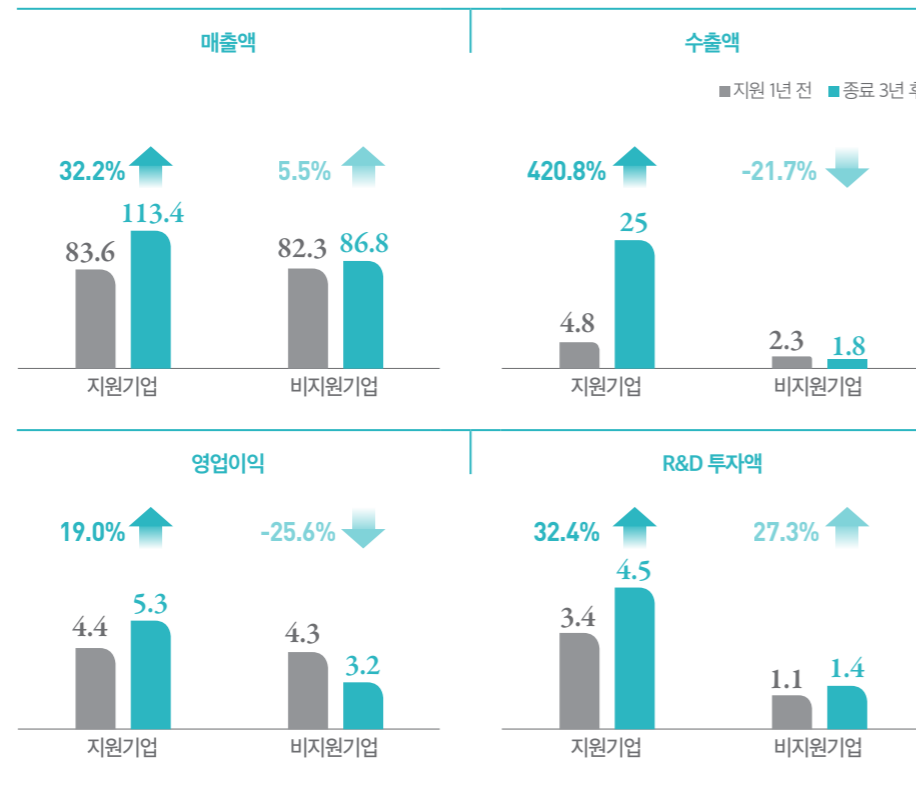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11,670	14,170	16,170	17,170	19,170	21,670
실적	11,670	15,392	17,239	23,069	24,700	24,852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의 확대 지원을 통해 8만 1,781명(2017~2021년 누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에는 2.3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R&D 수혜기업은 제품 품질·성능 향상 등에 힘입어 매출액 증가(32.2%), 수출액 증가(420.8%) 등 경제적 성과도 이뤘다.



2020년 중소기업 R&D 성과 조사분석 및 기술통계 조사결과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재·부품·장비 육성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패키지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2019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해 예산을 1,186억 원으로 확대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시행해 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중소기업부 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부장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
- 제1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발전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인력양성기반조성 지원, 분야별 전문가 파견, 특허 등 정보 제공, 해외 진출 전략 지도자문 등

2021년에는 강소기업100 전용 R&D를 신설하고,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100+'로 변경했다. 선정 분야도 기존 전기전자, 기계금속,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기초화학의 6대 분야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 SW통신을 추가한 9대 분야로 확대했다. 2021년 8월 충남 당진에 소재한 2020년 소부장 강소기업100에 선정된 (주)삼우코리아를 방문한 권철승 장관은 "소부장 분야의 혁신은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탄소중립,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밑거름이며, 그간 우리 기업인들이 소부장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고 이제는 그 기회를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보다 탄탄한 소부장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스타트업100 → 강소기업100 → 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2020년 최초 선정된 20개사를 대상으로 R&D, 사업화 자금 등 157억 원을 지원하고, 주요 부품 등의 국산화를 실현했다. 다음 단계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R&D·용자·보증 등 6,024억 원을 지원하여 핵심소재 등 수입을 대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강소기업으로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47개사 기업은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168억 원의 용자·보증을 공급받았다.

한편 중소기업부 소부장특별회계 R&D 사업은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2020년 1,186억 원에서 2021년 1,952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기업당 최대 4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전용 R&D를 신설(50개 과제)하고,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기술 개발하는 소부장 전략협력 사업의 과제 기획부터 강소기업 등이 참여했다.

강소기업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은 만큼, 성과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소부장 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2020년 6월 15일 ‘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을 통해 후배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선정 강소기업 54개사 중 33개사가 사회환원 선언에 참여했다. 2020년 11월 소부장 ‘강소기업100협의회’는 한국 엔젤투자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소부장 전용 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함으로써 소부장 기술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을 다짐했다.

### 그린 분야 선도기업 육성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그린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린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2020년 7월 ‘뉴딜 종합계획’ 이후 종합계획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기존 수단을 연계·활용하여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그린스타트업2000’,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프로젝트, 그린기업 전용 펀드 등으로 전 주기적 성장을 지원했다. 또한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2개소, 천안·광주)하고,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확대(2021년까지 15개 특구)하는 등 클러스터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했다.

### 그린스타트업타운 개념도

#### 기업지원 인프라

- 복합허브센터 (R&D 및 성장지원) + 스타트업파크 + 지식산업센터

#### 생활형 SOC

- 청년창업주택 등 주거시설, 도서관 및 공연장 등 복지·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그린뉴딜 유망기업100’은 탈플라스틱,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골자는 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소요 자금(3년간 최대 3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양산 등에 필요한 펀드·보증·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에 선정서를 수여한 권철승 장관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그린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세계 녹색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규모

(단위: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기업 수	40	30	30

###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프로젝트 세부현황

사업명	주관	지원대상·분야	2020년 선정	2021년 선정	지원내용(3년, 30억 원)
그린벤처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 분야: 10대 녹색기술	20개사	15개사	R & D : 12.5억 원 이내 사업화: 17.5억 원 이내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분야: 5대 선도 녹색산업	20개사	15개사	R & D : 7.5억 원 이내 사업화: 22.5억 원 이내

‘그린스타트업 2000’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그린 분야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그린스타트업 2,000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발굴된 스타트업에게는 교육·멘토링, 사업화, 시장성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최대 1억 원)하고 투자 유치 등을 연계 지원한다. 2021년 5월 예비·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 100명, 초기 기업 100개사를 선발했고, 환경부가 에코 스타트업을 통해 녹색창업을 발굴·지원했다.

또한 신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탄소저감 자원화 분야 등에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2019년 7월 2개 특구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4개 특구, 2020년 7월 3개 특구, 2020년 11월 2개 특구, 2021년 7월 3개 특구, 2021년 11월 1개 특구를 지정해 총 15개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특구 내 기업들의 신기술 실증·상용화를 위해 전용 R&D·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 등에 투자했다. 더불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그린스타트업 입주공간과 주거·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창업 거점인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천안, 광주 2개소에 조성하고 있다.

그린스타트업과 혁신기업, 선배 벤처기업 등을 함께 집적·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및 전력의 상시 분석·최적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공정혁신·금융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기업을 육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2021년 100억 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2021년 30억 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2021년 200억 원), 녹색보증(2021년 1,000억 원), 그린뉴딜 펀드(2021년 2,197억 원) 조성 등이다.

###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제품 총 189개를 지정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에서 적극적인 구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도 운영 2년 만에 757억 원의 공공매출이 발생했다. 게다가 28개 제품은 국내 공공분야의 판매실적을 토대로 미국, 영국, 일본 등 46개국에 진출해 약 1,063만 달러(한화 약 126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2021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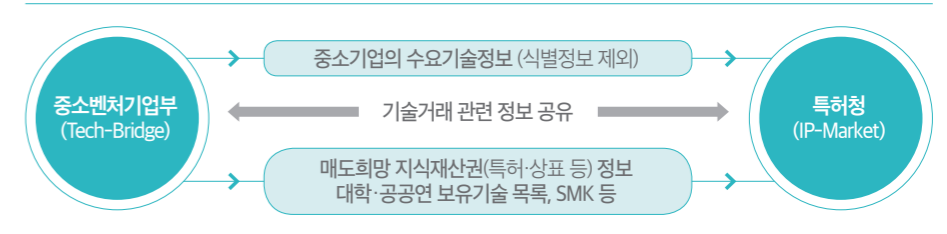
특히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으나 조달실적이 없어 공공조달 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음압캐리어’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국립의료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료진 등의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면 예전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초기 구매를 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발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공공연 등의 우수기술 5,673건을 수요 중소기업에게 이전했고, 지식재산권 인수·사업화를 위한 3,338억 원의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 등 보증을 연계 지원했으며, 기술이전·후속 R&D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90개사와 364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해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7.6억 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현황(테크브릿지 플랫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거래계약(건)	166	262	534	528	553	619	721	841	4,224
이전기술(건)	254	456	715	725	737	856	900	1,030	5,673
보증지원(억 원)	222	247	414	608	593	641	613	712	4,050

### 중기부(기보)-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전략개발원) 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략)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1.04.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의 지속적 확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총 지원규모는 2017년 71조 8천억 원에서 2021년 87조 4천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지원규모와 수혜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91조 3,229억 원,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149만 2,193개사에 달한다.

#### 연도별 정책금융기관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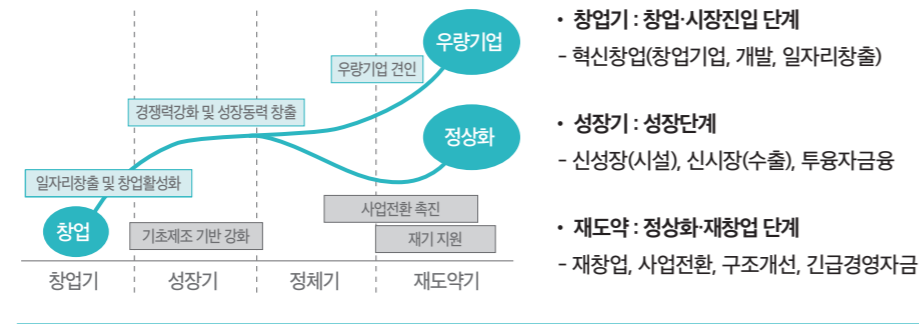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개사)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총 금액	46,350	44,150	43,580	62,900	60,100	257,080
	(수혜기업 수)	22,836	17,475	15,865	24,407	22,592	103,175
	코로나 대응	-	-	-	13,000	8,000	21,000
신용보증기금	총 금액	451,776	450,841	470,395	553,933	560,506	2,487,451
	(수혜기업 수)	194,426	194,158	196,476	210,857	206,487	1,002,404
	코로나 대응	-	-	-	80,157	22,000	105,157
기술보증기금	총 금액	219,946	223,236	218,461	253,334	253,721	1,168,698
	(수혜기업 수)	73,465	75,664	76,367	79,780	81,338	386,614
	코로나 대응	-	-	-	29,698	10,543	40,241
합계		718,072	718,227	732,436	870,167	874,327	3,913,229
(수혜기업 수)		290,727	287,297	288,708	315,044	310,417	1,492,19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정과제인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의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썼다. 창업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을 확대하고, 2019년에는 창업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했다.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예산은 2017년 20,500억 원에서 2019년 22,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2021년에는 25,500억 원으로 더욱 늘렸다.

성장기에는 생산현장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보급 등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신성장기반 자금 예산은 2017년 12,300억 원에서 2019년 12,100억 원, 2021년 17,700억 원으로 늘었다. 재도약기 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 개편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등 총 100만 2,404개사에 248조 7,451억 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2017년부터 창업기-성장기-성숙기로 나눠 개편한 성장단계별 보증공급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위기업종에 대한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한시적 만기연장을 시행하는 등 유동성 위기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0조 5천억 원의 코로나19 특례보증 등을 공급하는 한편, 2021년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고 경영도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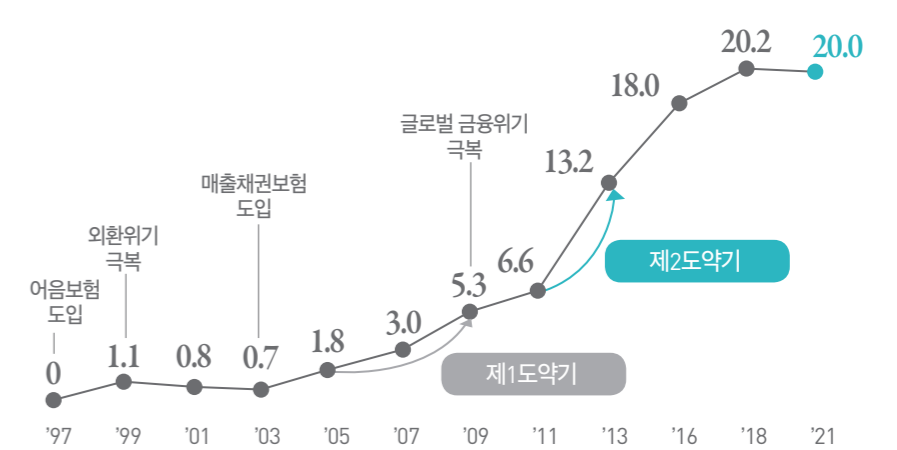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은 외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판매기업(계약자)에 보험금을 지급해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2018년에 최초로 연간 인수실적 20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히 20조 원 이상 인수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말에 제도 출범 이후 누적 인수금액 200조 원을 돌파했다.

2019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밀착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영업 기반을 확대했다. 지역밀착형 보험상품은 신용보증기금과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상품으로, 2021년까지 대전, 경남 등 총 14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말까지 3,525개 기업이 9조 8,458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제고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시중 은행과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의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은행 영업망을 활용해 보험 저변을 확대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대·특례보험 등 총 4차례에 걸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해 1조 4,546억 원을 지원했다.

매출채권보험 연간 인수금액 추이

(단위: 조 원)



기술보증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야 등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해 연간 20조 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벤처기업에 총 116.9조 원의 보증을 지원해 경제의 성장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5년간 보증수혜기업은 38만 6,614개사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기술창업,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2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특히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TECH 밸리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보증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에 지원했다. 2018년에는 혁신성장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R&D를 혁신성장 분야로 설정해 전체 보증 공급인 20조 2천억 원의 절반 이상인 13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소셜 벤처 전용 임팩트 보증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창업기업 및 금융취약 계층 지원, 혁신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1조 8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성장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등 25.3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해 'DNA+BIG' 등 혁신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지원체도를 신설했다. 2021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총 25.4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보증지원체계를 정비해 2025년까지 뉴딜 중장기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사전한도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해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특례조치를 유지해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했다.



###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디지털·비대면 전환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전반의 디지털·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보증은 기존 대면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상담, 신청·접수 등 전 지원 프로세스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추진했다.

#### 상담부터 대출약정까지 정책자금 디지털·비대면 전환

Flow	① 정책자금 상담	② 신청·접수	③ 기업평가	④ 대출약정
현재	방문, 유선 상담	홈페이지(PC전용)	기업 현장평가	기관방문
↓	전담 콜센터 (2021년 1월) AI기반 챗봇 (2021년 3월)	서류 간소화 (2021년 5월) 모바일 브랜치 (2022년)	비대면 평가모형 (2021년 4월)	전자약정 (2022년)

코로나19 이전에는 정책자금 상담을 위해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를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유선상담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21년부터 중소기업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유선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AI 기반의 챗봇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여건을 개선했다.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PC 기반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기반의 신청 플랫폼인 모바일 브랜치를 구축해 정책자금 신청, 처리상태 조회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금융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나, 2021년 4월부터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사업성·인공지능 평가 등을 결합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는 전용 모형(Zero-Tact)을 개발했다.

자금지원 결정 이후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자필 서명 등을 통해 대출약정을 진행했으나, 2022년부터는 전자서명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웹 기반의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해 간편하게 약정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비대면 전자약정 비율은 2021년 말 64.5%로, 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연초 31%에서 연말 기준 82%로 빠르게 증가했고, 2021년 10,298개 기업에 약 3조 2천억 원의 신규 보증 지원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며 보증업무 전반의 비대면 전환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고객편의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스마트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했다.

### 정책금융 혁신에 따른 추진성과

정부는 정책금융의 혁신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코로나19로 단기 유동성이 악화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비대면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조 7,080억 원을 지원해 국정과제(“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이행과 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위기 및 재도약 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며,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구조개편·재도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창업 초기 제품 개발, 인터넷 판매망 구축 및 물류망 확보 등에 필요한 창업기반 지원자금을 지원받은 밀키트 제조업체 (주)프레시지는 매출액이 78.5%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20% 가까이 늘었다. VR, AR 서비스업체인 (주)프론티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주물량 급감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 진출에 따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2020년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지원 후 원격 시스템, 가상회의 플랫폼 등 신산업 진출에 성공하며 고용인원도 4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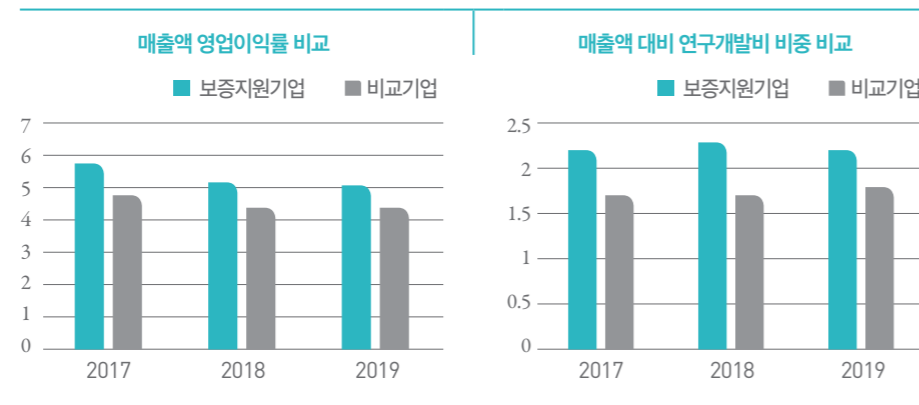
####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 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46,350	44,150	43,580	62,900	60,100
창업기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20,500	20,460	22,000	27,500	25,500
	신성장 기반자금	12,300	10,800	12,100	14,300	17,700
성장기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5,750	5,900	2,800	3,000	5,000
	투·융자복합금융	1,500	1,700	2,000	2,000	1,400
재도약기	재도약 지원자금	2,550	2,790	2,600	3,100	2,500
	긴급경영 안정자금	3,750	2,500	2,080	13,000	8,000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시스템(KTRS)을 이용해 2021년 말 역대 최대 규모인 누적 80만 건 이상의 기업·기술평가 정보를 축적했으며, 태국(2017년 6월), 페루(2018년 4월), 유럽(2018년 9월) 등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 기술평가 시스템(KTRS) 노하우를 전수해 기술평가 모형개발 및 구축을 지원했다. 2021년 1월에 전면 도입한 新기술평가 시스템 AIRATE는 기존 평가모형 대비 기술사업 성장성, 위험가능성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으로써 평가모형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성장 및 부실위험 구별능력 향상으로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기술평가 시 특허의 가치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KPAS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IP 가치평가 보증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기술금융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이처럼 기술평가 기반 보증지원체계 정착을 통해 보증 미지원기업 대비 보증 지원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연구개발 집중도가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보증지원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연구개발 역량도 높아졌다.



출처: 2020 기관종합 성과분석(2021년, 기술보증기금)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내수·수출 등 관로 확대



지난 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출 역대 최고, 무역규모 1조 2천 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1.4.

##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물류애로 완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박 부족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물류난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상하이해운 운임지수가 2020년 6월 대비 2배로 상승했고, 이는 2021년 1월 3배, 2021년 7월 4배, 그리고 2022년 1월 5배까지 지속 상승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됐다.

이러한 글로벌 물류난이 발생한 2020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양수산부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가 중소기업에 선적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설득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선사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운송 계약에 나서는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 업무협약은 물류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자 국적선사와 중소화주 간 상생협력의 시작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 SNS(10.29)



내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품을 싣고, HMM 두 척이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매우 신속하게 전방위로 된 결과입니다.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8036](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8036)



이에 2020년 항공 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항공편 축소, 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온라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항공-해상운임을 50%까지 지원하는 운임보전사업을 신설했다. 11월부터는 해상수출 관계기관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중소기업 전용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에 일부 완화 기미를 보였던 물류난은 수에즈 운하 사건(2021년 3월)으로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다. '중소기업은 운송선박 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2021년 3월 2일)에 따라 정부는 다시 힘을 모았다. 2020년부터 시행하던 물류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물류지원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2021년 7월)



HMM-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기념행사(2021년 10월)



2021년에는 추경(109억 원, 2021년 7월)으로 물류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류전용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서안항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지원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서안 롱비치항 해상운송 지원물량의 일부를 뉴욕까지 트럭을 활용해 내륙운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물류지원 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물류전용 바우처	-	-	109
온라인 수출기업 운임보전	-	63	40

이상과 같이 물류대란 긴급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선적공간 우선 배정(1.7만 컨테이너 수송), 물류비 지원 등으로 물류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물류 애로 중 1위 (44%, 수출입물류 종합지원센터)인 선박공급 확대를 위해 국적선사(HMM, SM상선 등)와 협업체 미주, 유럽, 동남아항 입시선박 총 95척을 투입했고, 21.1만 TEU를 수송(2020년 8월~2021년 12월)했다.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은 2020년 11월 주당 350TEU를 시작으로 총 17,203TEU(2020년 11월 21일~2021년 11월 5일, 135회)를 지원했다. 2021년 8월부터는 미국 동·서안, 유럽항로에 주당 1,300TEU를 지원하고 있다.

국적선사(HMM) 회차당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추이

시기		2020년 11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8월 말~
미주	서안	350TEU	350TEU	350TEU	950TEU
	동안	-	-	50TEU	50TEU
유럽		-	50TEU	50TEU	50TEU
총 지원량		350TEU	400TEU	450TEU	1,050TEU

주: 2021년 8월부터 미주 서안항 선적공간 중 20% 내외는 장기운송 계약 물량으로 배정

또한 항공·해상운임을 보조하고(149억 원), 물류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1,000억 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5년간 연 2.65%로 최대 3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국가대표 증기제품 ‘브랜드K’ 육성

2017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는 해외 마케팅 능력과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체 전시회·상담회,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온라인 수출, 규격인증 획득 등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를 지원했다.

브랜드K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브랜드K	-	5.0	3.8	3.8	62.2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사업을 신설한 2018년에는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브랜드 개발 전략 및 콘셉트를 수립하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개발을 완료 (8월)해 우수제품 39개를 브랜드K로 선정하고,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태극 순방에 맞춰 론칭했다.



- 대한민국에서 생산 (Made in Korea)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명품군
- 대한민국의 ‘K’와 명품 마케팅을 위한 전략 ‘Brand’를 상징
- ※ 국내 및 해외 총 55개국 상표출원 완료

2020년 3월에는 시장성 있는 제품군 선정, 프리미엄화 지원, 판로 확대, 민간·부처 협력기반 마련 등 브랜드K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94개의 2기 제품을 추가 선정했으며 민관합동 협의회를 발족했다. 2021년에는 브랜드K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0년 3.8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3기 제품 70개를 추가 선정했다. 11월에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를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광고 영상 및 브랜드 콘텐트를 제작해 인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했다. 더불어 서포터즈 운영, e-카탈로그도 배포했다.

2021년 11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 개소식에 참석한 권칠승 장관은 “20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라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브랜드K 홍보 영상



e-홍보 카탈로그





브랜드K 1~2기 기업의 2020년의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관세청 수출통관 기준), 매출액은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 고용자 수는 4,479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기준)했다. 3기 기업의 2021년 수출액은 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 증가(관세청 수출통관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 진출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중소 동반진출	61.25	78.75	155.75	125.35	190.29
수출 BI	105	109	130	120	167

한편,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주도 해외 진출도 추진했다. 2018~2020년 최근 3년간 중소기업 4,241개가 3,349.6억 원을 수출했고, 내수 중소기업 1,437개 중 471개가 지원에 힘입어 수출기업으로 도약했다.

**참여기업의 수출 실적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현황**

(단위: 개사,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지원기업의 수출 실적	지원기업 수	1,189	1,916	1,136	4,241
	수출 실적	768.0	1,323.6	1,258.0	3,349.6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내수기업 수	428	672	337	1,437
	수출기업 수	178	209	84	471

또한 세계 주요 시장에 거점(수출 BI)을 확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신남방 지역 중소기업 진출거점 확대를 위해 방콕(태국), 양곤(미얀마)에 수출 BI를 신규 조성하고, 2018년에는 싱가포르 등 4개 지역에 창업특화 BI제도를 신설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온라인 상담회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 BI 입주기업에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및 회계·법률자문 등을 지원하여 26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온라인 국내·외 판로 강화**

소비 패턴과 결제방식의 변화 등으로 기존 오프라인보다 모바일 쇼핑 중심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다. 2021년 3월 권칠승 장관은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안착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0년 중소기업, 전통시장, 대형 유통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처음 개최했다. 이는 홈쇼핑, 온라인 기획전, 민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다. 2021년에는 대·중소기업과 16개 지역 온라인몰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전국적 소비행사로 확대(2021년 6월 24일 ~ 7월 11일)했다. 권칠승 장관은 2021년 6월 대한민국동행세일 행사를 맞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되,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활력을 되찾는 판로 개척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권 장관은 동행세일 기간 중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출연해 미세먼류 칫솔 등 잇몸케어 제품을 홍보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실적**

(단위: 백만 원)

유통 채널	2020년 매출액	2021년 매출액
온라인 기획전	8,100	26,759
TV 홈쇼핑 등	16,740	89,100
라이브커머스	1,100	2,142
합계	25,940	118,001

한편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해외향 자사 쇼핑몰 육성, 온라인 전시회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판로도 지원했다. 특히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저비용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아마존·이베이(미국), 타오바오·위챗(중국), 쿠팡·라자다(동남아) 등 7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고객응대, 배송, AS 등 판매 전 과정을 유통 전문기업을 통해 지원했다. 2018년에는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자사몰 구축 및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2019년에는 오프라인 전시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3D·AR 등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회 사업도 추진했다.

2020년에는 신남방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쇼피, 큐텐) 내 한국관을 개설해 브랜드K 등 우수 제품의 입점, 판매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2021년에는 온라인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터키 등 신흥시장 내 신규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한국관을 개설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사업 참여기업 수출 증가율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 대비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출 실적이 없던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된 비율도 2018년 41.8%, 2019년 23.9%, 2020년 31.9%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단위: %, %p)

구분	수출 증가율		차이(B-A)
	전체 수출 중소기업(A)	사업 참여기업(B)	
2018년	1.9	12.1	10.2
2019년	-4.1	8.3	12.4
2020년	-0.2	19.9	20.1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시스템

**지원기업 수 및 수출기업 전환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전체 지원기업 수	내수기업 수(A)	내수 → 수출 전환기업 수(B)	비율((B/A)×100)
2018년	2,050	1,251	523	41.8
2019년	6,810	4,826	1,155	23.9
2020년	3,536	1,987	634	31.9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구매목표 비율제도,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를 확대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추천 기준을 제품 기준 10개사, 공공수요 10억 원 이상에서 제품 기준 20개사, 공공수요 20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2018년에는 창업·조달 초기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부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제도인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재·부품기업 등의 판로지원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개척 및 R&D를 촉진했다. 2021년에는 창업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신설해 공공기관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고, 구매 목표는 전체 목표(2021년 145.3조 원)의 8.1%인 11.7조 원으로 확정했다.

**5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목표)
총 구매액(조 원, A)	123.4	123.4	135.0	145.8	145.3
중소기업제품(조 원, B)	92.2	94.0	105.0	116.3	113.4
B/A(%)	74.8	76.2	77.8	79.8	78.0
대상기관(개)	788	836	837	838	849

2020년 기술개발 제품 구매는 2017년 대비 1.11조 원이 증가해 공공기관 물품구매액(38.2조 원)의 14.7%를 차지(2017년 4.52조 원에서 2020년 5.63조 원)했다.

**5년간 우선구매지정 제품**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정(종)	제품	지정(종)	제품	지정(종)	제품	지정(종)	제품	지정(종)	제품
우선구매	16	8,182	17	9,169	18	9,935	18	10,980	18	11,342

창업기업, 조달초기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2021년 3,127억 원의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했다.

**시범구매제도 기술개발 제품 선정수 및 구매액**

(단위: 개,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선정제품	126	194	252	347	919
구매금액	268	1,775	2,647	3,127	7,817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했는데, 2020년부터 8차례 공고를 통해 총 223개 제품(155개 개발 완료, 68개 준비)을 선정해 상생협력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했다. 2021년 기준, 제도에 참여한 79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통해 총 1,107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소기업 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한 신기술 제품 및 융합 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2021년 7월 산업별 다양한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산업 제품의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추천요건 완화 등 관련 요건을 개편했다.



## 고용친화적 인력유입 여건 조성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1.08.03.

###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공급 및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인력 양성, 채용 및 취업 연계,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2021년 215개(2017년 181개)로 확대했고,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21년 인공지능(AI) 분야 등 5개 학과를 신설해 총 70개 학과(2017년 73개)로 운영하고 있다. 재직자 직무역량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 충청연수원(충남 천안시 소재)을 신규로 개소하고, 스마트공장 배움터 6개소(2017년 1개소), 스마트공장 랩 2개소(2019년 신설)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 디지털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말까지 스마트공장 제조인력 10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계고(국립공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중소기업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연수원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및 학위취득(전문학사~석·박사) 지원 등 지난 5년간 신규자, 재직자, 초·중·고급 등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약 30만 명(연간 6만 명) 양성했다.

취업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전국에 기업인력애로센터 16개를 개소했고, 이를 통해 2021년까지 누적 14천 명(연간 약 3천 명)의 채용 및 취업을 직접 지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 출신의 석·박사급의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6.5천 명(연간 1.3천 명)을 채용, 파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 핵심 인력, 중소기업, 정부 등 각 주체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일정 기간(5년 만기) 경과 시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중소기업에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2021년도에 종료 예정이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연장해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하는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2021년 10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2021년 말 기준 일반 내일채움공제(2014년~) 70천 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36천 명 등 누적 가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 일반 내일채움공제(2014년~, 핵심 인력, 5년 2천만 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18년~, 만 34세 이하, 5년 3천만 원)

최근 5년간 지원규모

(단위: 백명,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2022년 예산
인력양성*	597 / 787	619 / 972	630 / 1,112	572 / 1,179	637 / 1,048	999
기업인력애로센터	-	27 / 83	35 / 87	36 / 87	31 / 100	90
연구인력	14 / 289	14 / 332	14 / 344	15 / 368	15 / 368	359
성과보상	96 / 10	479 / 912	462 / 2,042	430 / 2,928	420 / 3,149	2,855

\* (고교) 국립공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대학) 기술사관, 중소기업 계약학과, (연수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연평균 -4.7%p)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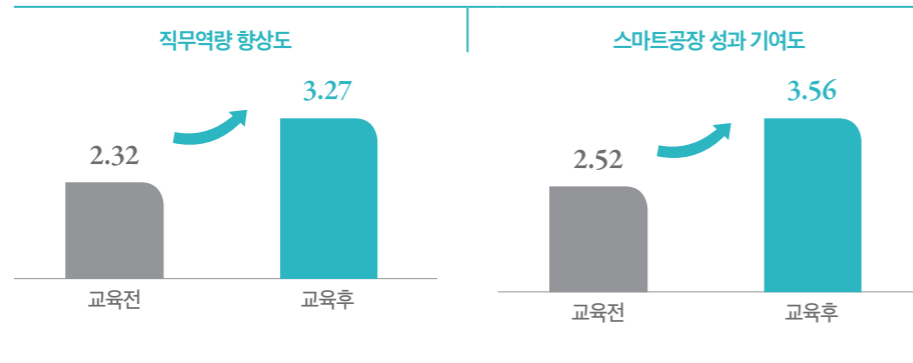
중소기업(300인 미만) 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미충원율	14.3	13.2	12.9	12.7	11.8	-4.7

출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용노동부)  
 주: 미충원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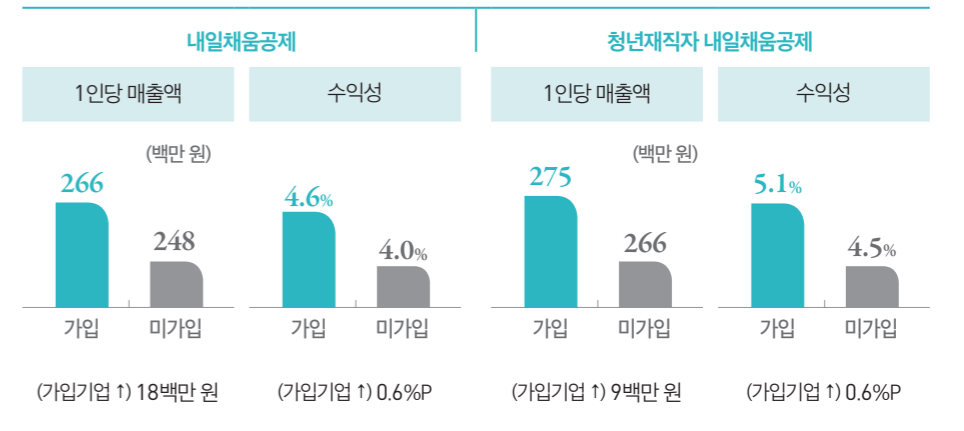
또한 스마트 공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이수자 및 상급자를 대상으로 현업 적용도에 대한 설문조사(2021년 1월) 결과 직무역량 향상도와 스마트공장 성과 기여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채움공제가입 기업은 청년 및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 등의 근속을 통해 매출 및 수익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청년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2년 경과시점)은 21.8개월로, 미가입자 17.6개월에 비해 23.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5년차 고용유지율도 일반 근로자 대비 2.3배 높았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청년·핵심인력의 근속을 통해 미가입 기업 대비 1인당 매출액과 수익성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보였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아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성과보상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 전반적 만족도 91.0%, 장기 재직에 도움 85.8%, 근무 만족도 증진 87.3% 등 긍정적 평가로 기업은 인사제도로 활용(70.5%)



출처: 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2020년 12월,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중소기업 소득·복지 향상

청년층 등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단기간 내에 시장 시스템을 통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대기업 100, 고용노동부, 2020년): 정액급여 75.8%, 특별급여 25.4%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2018년부터 본격 도입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2018년 6월)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미래성과 공유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우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했다.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로 법인세 10%, 근로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에 72,222개(누적)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공유기업은 임금 상승, 고용 창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임금 상승은 2020년 대비 2021년 종업원 1인당



연평균 161만 원 임금 상승(4.3%)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용 창출도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1~3.2%p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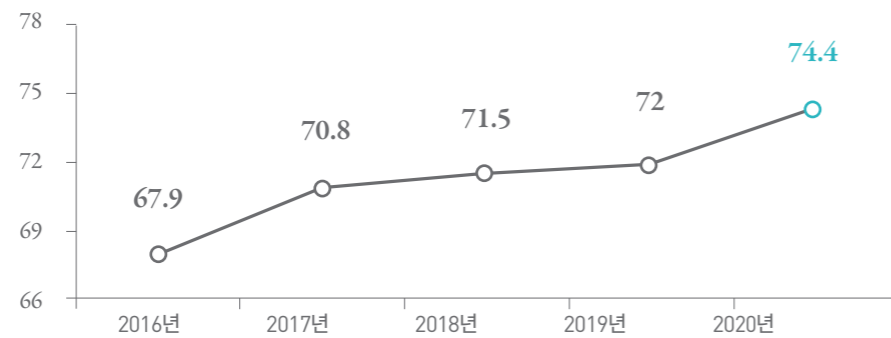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운영,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해 2021년 12월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21만 명, 중소기업 1.7만 개사가 복지 플랫폼에 가입했으며, 복지 서비스 주문 건수는 8만 건, 주문 금액은 69억 원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복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3천 호) 신설, 행복주택, 창업공간 지원 등 총 6만 호를 2025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2020년 74.4% 수준으로 2016년 67.9%보다 6.5%p 상승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중사업자 규모별, 월 평균 노동비용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기업(A)	3,273	3,379	3,517	3,628	3,717
대기업(B)	4,818	4,775	4,916	5,040	4,993
A/B비중(%)	67.9	70.8	71.5	72.0	74.4



\*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 월 평균 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 정액 및 초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취업자와 일반 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우수 중소기업(3만 개) 정보를 제공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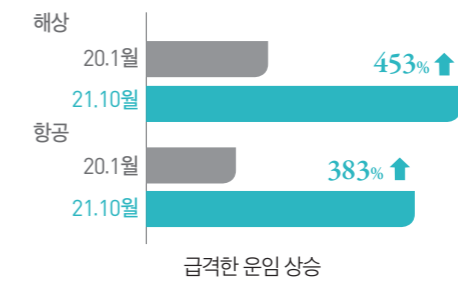
글로벌 물류대란에도  
중소기업 수출은 이상 무



미국에 타이어휠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한진해운 파산, 코로나19 등으로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하는 물류대란 사태에 부딪혔다. 수출 계약은 체결했지만 물건 인도가 지연되니 바이어의 신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러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량이 적고 거래내역이 없는 중소기업도 국적선사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으로 타이어휠 20만 개를 무사히 미국 바이어에게 인도하여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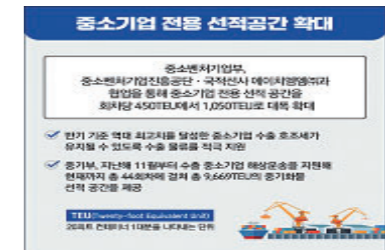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류대란이 시작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소기업 화물 1.4만 컨테이너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2년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급격한 운임 상승



선적공간 부족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지원



# 제5절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1. AI-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기술·신사업 창출 촉진
3. 지역 중소기업 성장·혁신 기반 구축



# AI·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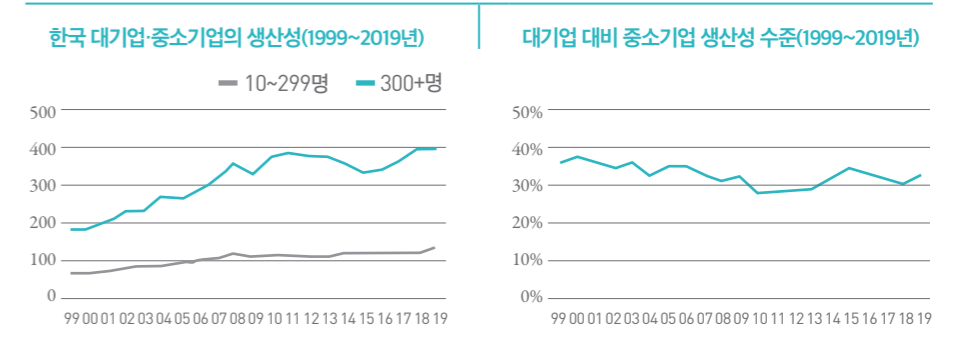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천 개를 육성할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열정으로 제조혁신과 스마트 산단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 2018.12.13.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주요 경제 대국들은 제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목표로 수준별·업종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했다.



\*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생산성=부가가치의 합/종사자수의 합)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을 선정했다.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지원체계를 통합했다.

2018년에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전략 및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공장과 중소기업"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주요 내용은 민간·지역 중심의 확산 시스템 구축,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을 위한 전용사업·R&D 신설, 현장·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은 스마트공장 조기 확산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제조 중소기업 스마트화, 산업단지의 스마트 제조혁신 거점 육성,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 조성, 상시 혁신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에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원기반을 정비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수준확인제도 운영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3월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9개소를 구축해 지역거점 센터를 마련하고 5월에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설립해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11월에는 'AI·제조 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 또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고, 민간 스마트공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8개 확인기관을 통해 수준확인서를 발급했다. 더불어 공공구매 가점 및 R&D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는 수준확인제도도 운영했다.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전략을 저변 확대에서 고도화 추진으로 확장하고, 2021년에는 스마트공장의 확장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 모델사업을 신설했다. 'K-스마트 등대공장'을 신규로 선정(10개)해 선도모델 육성을 추진했다. 또한 산단 등 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신설해 가치사슬 기업 등의 협력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정부는 2021년까지 25,03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스마트공장 연도별 보급 목표 및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구축 수(개, 누적)	12,200	12,660	17,800	19,799	23,800	25,039
투입예산(억 원, 누적)	6,029	6,029	10,259	10,259	14,261	14,261

또한 1,600여 개의 스마트제조 솔루션 공급기업이 육성되었고, 이 중 일부는 외부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되는 등 공정혁신을 비롯해 일자리(2.6명 증가)와 매출(7.4% 증가) 등 경영개선 성과를 창출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후 성과**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준수	고용	매출액	산업재해
28.5% ↑	42.5% ↑	15.5% ↓	16.4% ↑	2.6명 ↑	7.4% ↑	6.2% ↓

출처: 공정개선은 사업 완료 보고서, 고용, 산재는 고용노동부, 매출은 한국기업데이터  
주: 2014~2018년 도입기업 7,903개사 기준

2019~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4,243건 중 2,010건(47%)이 스마트공장 구축과 연계(고용노동부 협업)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또한 K-방역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기업·정부의 자발적·유기적 협력으로 K-방역 제품의 신속한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금비중
① 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	2,230	6개월(기초) 12개월(고도화)	0.5(기초) 4(고도화)	50%
	대중소 상생형 (기초, 고도화)	300	6개월(기초) 12개월(고도화)	0.42(기초) 2.4(고도화)	30%
② 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 등대공장	100	3년	12	50%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	181	8개월	3	50%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230	9개월	2	50%
③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40	9개월	2	50%
	선도형	92	3년	64	50%
	일반형	200	12개월	4	50%
④ 제조 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20	2개월	0.2	90%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50	4개월	0.5	80%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20	3년	60	50%
⑤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	10	8개월	0.1	100%
	테스트베드 구축	15	2년	48	60%
⑥ 수준확인·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15	-	0.01	100%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90	6개월	0.1	90%
	스마트공장 AS지원	70	12개월	0.2	50%

\* 지원 규모는 해당 사업의 당해년도 사업예산을 말하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제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제조 인프라 구축**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제조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추진했다. 2020년에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AI 스마트공장 구현 인프라를 구축했다. 2020년 7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수립했는데, 중소벤처 AI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례 확산, 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거버넌스 확립이 주요 내용이다.

2020년 12월에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AI 제조 플랫폼인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를 구축했다. 이는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용 제조 데이터 인프라로, 대학(KAIST·UNIST·서울대 등), 연구기관(ETRI·생기연 등), 민간 클라우드업체, 수요·공급기업,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 모델,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솔루션), 전문가 컨설팅·교육 등을 제공한다. 2020년 9월 AI 제조플랫폼 로드맵 브리핑 자리에서 박영선 전 장관은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을 중심으로 아직 해외 거대 플랫폼이 진입하지 못한 제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제조 데이터의 주권을 지켜내게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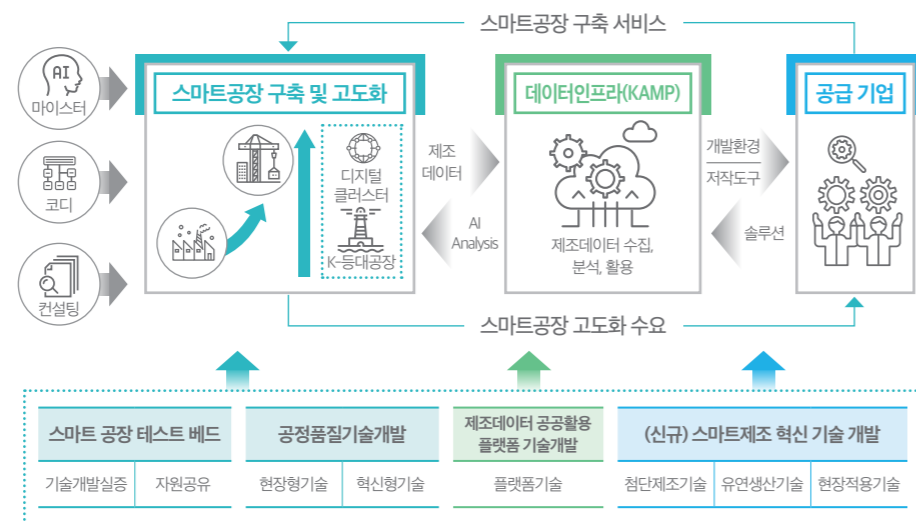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서비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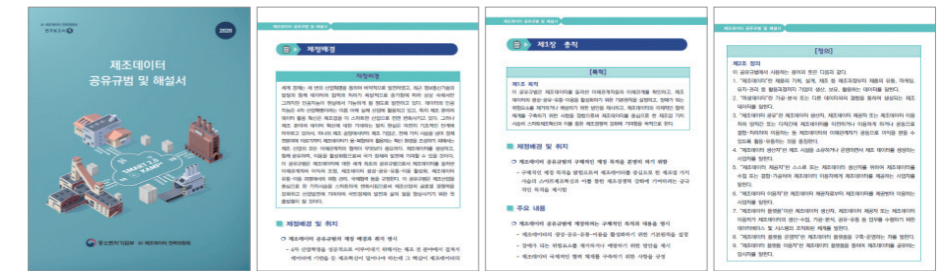
2021년에는 제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KAMP를 통해 AI 데이터셋 12종을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AI 제조 솔루션의 개발·유통·활용을 위한 앱 스토어 운영을 추진했다. 이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해 공급기업의 AI 제조 솔루션 개발·유통, 도입기업의 활용을 지원했다.

KAMP 활용 스마트 제조혁신 개념도



이렇게 세계 최초 민간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플랫폼인 KAMP를 구축한 결과, 수집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제조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 KAMP 실증사업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77% 이상이 '만족' 및 '매우 만족'으로 답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는 가치사슬 기업 간 스마트공장의 제조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 데이터의 정의,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인 '제조 데이터 공유규범(MDSR) 및 해설서'를 제정해 발행했다.

제조 데이터 공유규범 및 해설서




스마트 제조혁신 우수사례

1. 대중소 상생형

1  
서울 엔지니어링  
(공정개선, 포스코)

포스코와 협력한 스마트공장으로  
매출액 11% 증가

- 서울엔지니어링은 1974년 설립, 독자적인 기술력으로제철소 관련 제품을 세계 30여개 주요 제철소에 공급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매출액 약 11% 증가, 2018년 포스코 우수 공급사 선정
- 2020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가



---

2  
오성전자  
(공정개선, LG)

수작업·단순 반복 공정을 스마트공장으로 혁신 →  
생산량 15%↑

- 1965년 설립된 오성전자는 1984년 국내 최초로 리모컨제품 양산, 독자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5위 점유율 기록
- 수작업·단순 반복 공정을 관절로봇이 대체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후 원가 연 1억 원 절감, 생산량 15% 증가
- 2018년 제품 공정 개선 기술개발 사업 참가



2. 질 좋은 일자리 창출	
<p>3 삼천산업 (일터혁신)</p>	<p><b>스마트공장으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탈바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천산업은 가전부품기업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후 단순 업무를 줄이고 직무 교육 등을 늘리면서 '일·생활균형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2019년 고용노동부)</li> <li>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직원 수 10% 증가, 생산 계획 대비 실제 실적 정확도 9.7% 증가 등 성과 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가 및 2018년 12월 청와대 초청 방문</li> </ul> </li> </ul> 
<p>4 (주)화신정공 (근로환경 개선)</p>	<p><b>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똑똑한 근로환경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 및 자동화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일일 생산량 100% 증가, 공정 불량률 1.5% 감소, 산업재해율 0% 달성</li> <li>6축 다관절 로봇을 주력 상품 라인에 도입해 직원들의 하루 이동거리를 5.6km → 1.6km로 대폭 감속, 총 34개 공정에 MES를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일하기 쉬운 환경 조성</li> </ul> 
<p>5 솔젠트 (일자리 창출)</p>	<p><b>제조혁신으로 K-바이오 세계화에 도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고용 18% 증가(2019년 57명, 2020년 67명), 진단키트 생산성 1,233% 증가, 재고관리 정확도 25% 증가, 물류 동선 34% 감소</li> <li>스마트공장으로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 관리, 획기적인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자리 창출</li> </ul> 
<p>6 리가스 (일자리 창출)</p>	<p><b>표준가스 전문기업 스마트공장으로 일자리 창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공장으로 직원 수 24% 증가(2016년 37명, 2019년 46명), 판매량 133% 증가, 매출액 51% 증가</li> <li>용기 처리 공정 자동화를 통한 오류 최소화, 매출액 및 판매량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li> </ul> 
<p>7 연우 (산재감소)</p>	<p><b>생산공장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통해 무재해 공장 구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우는 1983년 설립 이래 화장품용 디스펜스 펌프를 한국 최초로 개발한 기업, 현재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40여 개사에 제품 공급</li> <li>자동 적재기 25대 도입 및 감지 센서 설치로 산업재해율이 2.8% → 0%로 감소</li> </ul>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기술·신사업 창출 촉진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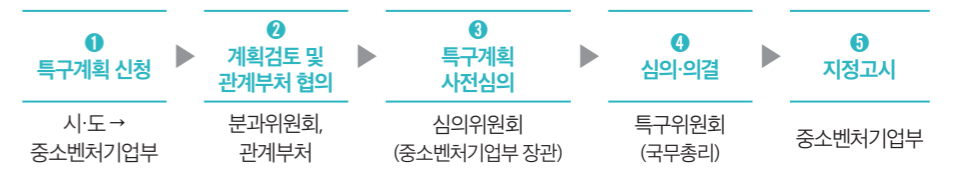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 2019.7.2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으나, 포지티브 규제, 칸막이 규제, 법령 미비 등으로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해 규제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2018년 관계부처 합동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2018년 10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라며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2019년 4월 비수도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자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지원방안 등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한다. 실증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전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해 사업화를 허용한다. 2021년 9월 권칠승 장관은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개최하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라며 “규제자유특구에서 창출된 다양한 신산업을 제2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와 같은 정책 수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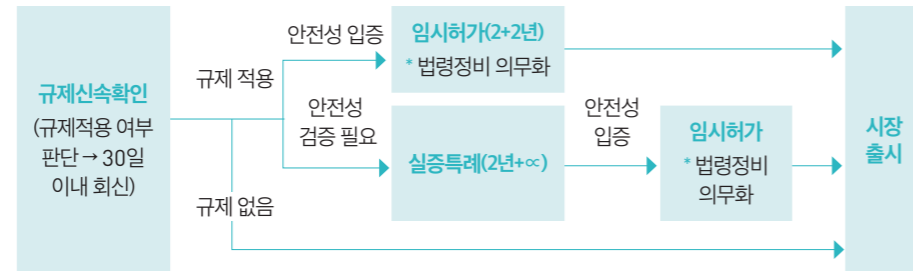
-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성·기술성 검토 및 관계부처 규제특례 부여 협의
- 검토된 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비교

구분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샌드박스	미적용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절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적용을 받는다. 기존 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지역 내 특구사업자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 영역의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도 받는다. 실증 R&D, 사업화, 인프라 등에 2년간 재정지원을 하되, 중앙정부, 지자체, 특구사업자가 7:3:2 비율(일부 5:5)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정부지원 예산은 2019년 328억 원에서 2020년 1,167억 원, 2021년 1,701억 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2019년 7월부터 6차에 걸쳐 미래교통, 에너지·자원, 바이오헬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총 29개 특구가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29개)

미래교통 분야(8개 특구)	에너지·자원 분야(10개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주행(2개) : 자율주행차·로봇(세종), 무인택시(광주)</li> <li>전기·수소차(4개) : e-모빌리티(전남), 초소형 전기특장차(전북),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 수소모빌리티(울산)</li> <li>선박(2개) : 무인선박(경남), LPG선박(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3개) : 이차전지 리사이클링(경북), 차세대 전력송배전(전남), 태양광 ESS발전(광주)</li> <li>에너지(4개) : 수소연료전지(충남), 액화수소(강원), 그린수소(충북), 암모니아(부산)</li> <li>자원(3개) : CO2자원화(울산), 탄소복합소재 활용(전북), 탄소저감 건설소재(충남)</li> </ul>
바이오헬스 분야(6개 특구)	ICT 분야(5개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3개) : 바이오메디컬(대전), 게놈 서비스 산업(울산), 산업용 헬프(경북)</li> <li>헬스케어(3개) : 비대면·정밀의료(강원), 스마트 웰니스(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밀착형(3개) : 스마트 안전제어(충북), 스마트 그린물류(경북), 블록체인(부산)</li> <li>산업고도화형(2개) : 5G 활용 스마트공장(경남), 이동식 협동로봇(대구)</li> </ul>

2019년 7월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에 지정됨에 따라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에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2021년 9월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권철승 장관은 "전남과 광주에서 전기동력원 이동수단과 재생에너지 관련 실증을 특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실증 결과물이 전국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규제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규제자유특구

<b>강원</b>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예) 방문 간호사 활용 당뇨고혈압 환자 원격진단·처방 허용
<b>대구</b>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예)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b>경북</b>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예)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b>부산</b>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없는 신뢰도시 조성 예) 사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사제의무 상충문제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b>세종</b>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b>전남</b>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예)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인 다리 위 통행 허용
<b>충북</b>	가스산업 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 가스 안전제어 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2019년 11월 2차 지정 때는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지역에 특구를 지정했고, 친환경 미래차, 무인선박, 에너지, 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에 특례를 부여했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

<b>광주</b>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예)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b>대전</b>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 예)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b>울산</b>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예)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 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b>전북</b>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예)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b>전남</b>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예) 직류송전 용량 확대 및 직류선로 설치 높이 완화
<b>경남</b>	선박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예)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 허용
<b>제주</b>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2020년 7월에는 충남, 울산, 대구 등 7개 지역에 3차 특구를 지정해 유전체정보 활용, 산업용 헬프 재배, 액화수소 활용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제3차 규제자유특구

<b>울산</b>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 예) 연구자가 분석·재생산한 유전정보의 기증자 추가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특례 허용
<b>대구</b>	이동 중에도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 예) 제조·생산공정, 방역·살균 서비스와 연동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가능도록 실증 허용
<b>강원</b>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등 예) 액화수소 제조시설용 배관/밸브/저장용기 제작 및 충전소 구축, 모빌리티 운행 등 실증 허용
<b>충남</b>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드론 장거리비행 등 예)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복합배기 허용, 수소전기차 비상충전, 액체수소 드론 파워팩 제작 실증 허용 등
<b>부산</b>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 예)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선박엔진 개조(디젤 → LPG), LPG공급(육상 → 선박) 실증 허용
<b>전북</b>	탄소섬유 활용한 소형선박 등 제작 예) 탄소복합재 적용 신제품(소형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에 대한 제작·시험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b>경북</b>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헬프 재배 허용 등 예) CBD(칸나비디올) 추출 목적의 산업용 헬프 재배 및 관리 실증, CBD 활용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특례 허용

같은 해 11월 4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주, 울산, 경남 3개 지역에 그린 분야 및 디지털 분야 등을 지정해 지역균형 뉴딜 거점 역할을 부여했다.

제4차 규제자유특구

<b>광주</b>	그린에너지 ESS 발전 실증 예) 개별 태양광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발전사업자 지위를 통합 ESS를 구축한 자에게도 부여하고, 전기충전 사업자-전기사용자 등과의 직거래 허용
<b>울산</b>	폐기물 소각·하수처리 시설 배출 이산화탄소 자원화 실증 예) 폐기물 재활용업자 외에 활용이 제한된 폐기물(탄산칼슘)의 일반사업자 활용 허용
<b>경남</b>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구축 운영 실증 예) 비면허 주파수대역(6GHz)에서 제한된 전파출력, 전력밀도 사용을 허용해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상향(250mW → 1W, 2dBm/MHz → 8dBm/MHz) * 통신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송·수신기 구축 개수 감소(1/2 수준)

2021년 7월에는 강원, 경북, 충북, 충남 4개 지역에 5차 특구를 지정했는데 한국판 뉴딜 분야,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했다.

제5차 규제자유특구

<b>강원</b>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 의료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 예)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 허용
<b>충북</b>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 예) 바이오가스 → 수소 제조업자 도시가스 직접 공급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허용
<b>충남</b>	정유사 배출 폐기물(탈황석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물 건설소재화 예) 이산화탄소전환물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없이 활용, 건설소재로 재활용
<b>경북</b>	도심형 근거리 배송 서비스 기반의 도심 생활물류 특화 서비스 활성화 예) 도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대, 3륜형 전기자전거 배송 허용

2021년 11월 제6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에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지정했다.

제6차 규제자유특구

<b>부산</b>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표준용기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 예) 암모니아 연료전기 선박 건조 운항 실증 허용 등
-----------	--

특구사업자 494개사의 73개 실증사업에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해 신산업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동시에 타 지역 소재 특구사업자의 지역 내 이전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차수별 규제자유특구 사업 현황**

구분	1차 특구	2차 특구	3차 특구	4차 특구	5차 특구	6차 특구
특구 수(29)	7	7	7	3	4	1
실증사업(73)	24	15	21	4	6	3
규제특례(144)	57	25	39	7	11	5
특구사업자 수(494)	130	103	148	48	48	17
이전 의무 특구사업자 수(213)	65	45	65	12	20	6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도 개선했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실증사업이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 법령정비 요청제를 신설해 실증을 조기에 완료한 사업자가 관계부처에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를 검토하는 기간에는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법령정비 착수 절차를 구체화해 관계부처가 실증결과를 토대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특구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증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후관리, 안착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특구에 실증 R&D, 사업화,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연평균 1,065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했다. 실증 R&D는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 ICT 등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 입증에 위한 실증사업에 R&D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화 지원은 안전한 실증사업 환경을 위해 책임보험료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국·내외 판로 기반 확보 마케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증 인프라 지원은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강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세종) 등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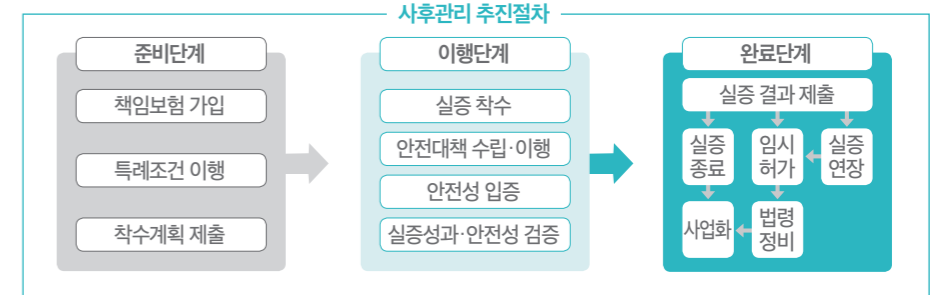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억 원)	328	1,167	1,701

주: \*는 제도 운영, 혁신사업 육성(R&D, 사업화), 실증기반 조성(정보화, R&D)

특구 지정 이후 2년이라는 짧은 실증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려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진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2021년 12월 말까지 현장점검 80회 등 총 177회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실증사업의 특례 적용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관리했다. 매년 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특구 운영 개선에 환류해 성과 창출 기반의 체계를 마련했다.

**사후관리 추진절차**



실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가 필요하다. 2021년 6월 권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 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구의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법령 정비, 특례 부여(임시허가 전환)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임시허가 부여사업 등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주력사업 및 규제자유특구대상 정책자금, 지역 뉴딜벤처펀드, 수출·혁신 바우처,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사업화 멘토링, 지자체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실증 종료된 1차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안착화 방안으로 5개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7개 사업은 실증기간을 연장했으며, 2개 사업은 실증종료됐다.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시작한 5개 사업은 총 21억 원의 매출 (4개월간)을 창출했다. 실증 종료된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에 대해서도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0개 사업은 실증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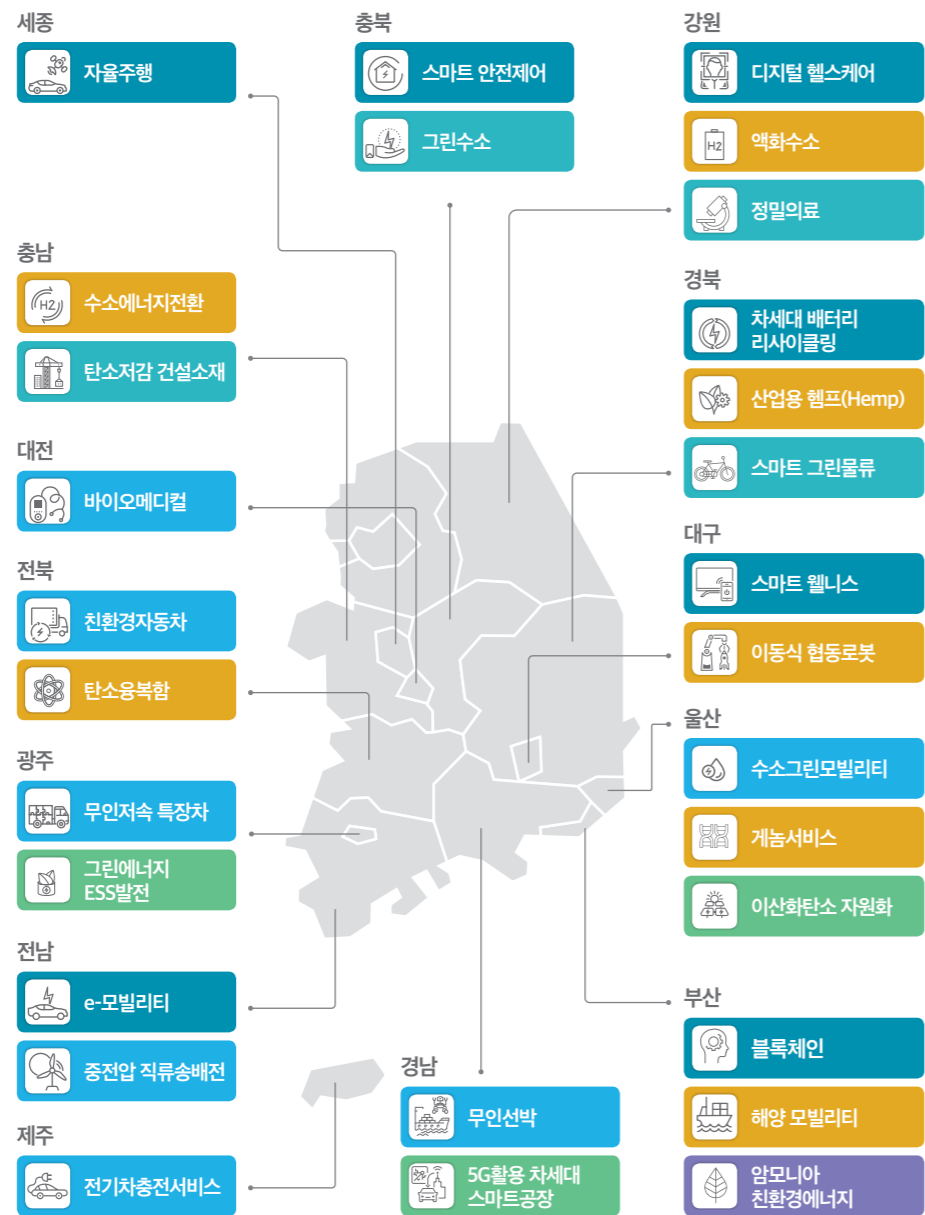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내 기술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는 한편, 지역 전통산업이 신산업으로 구조 전환되도록 선도했다. 2019년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지방의 성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18개 산업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되어 산업을 확장시켰다. 또한 실증사업의 기술개발, 제조, 유통 등을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지역발전 모델의 구축 성과도 거뒀다.



예를 들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18개 기업이 입주해 중소기업(소재 추출) → 중견기업(전구체 생산) → 대기업(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구축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1차(2019. 7) ● 2차(2019. 11) ● 3차(2020. 7) ● 4차(2020. 11) ● 5차(2021. 7) ● 6차(2021. 11)



이렇게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지원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 방식의 특구 발굴로 비수도권 지역을 탄소중립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기지로 육성했다.

항목별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1~4차 지정 특구에서 총 205개사가 특구 내 지역에 신규 유치됐고, 19개사가 생산공장을 준공 또는 착공했다. 또한 경북(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 등의 기업이 공장 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1조 9,24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등의 특구 내 혁신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4,32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는데 대전 바이오 메디컬특구(+439명), 전북 친환경차 특구(+238명) 등 특구 내 혁신기업에서 2,409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한편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기업 부품으로 대체하는 성과도 거뒀다. 예를 들어 전북 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에서 70% 국산화율(목표 80%)을, 전남 특구에서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배터리 및 모터 구동부에 대해 67%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도 확보하게 됐는데 블록체인, 자율주행, 원격의료,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소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서비스 분야에서 특허 출원(275건), 특허 등록(30건), 소프트웨어 등록(3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 밖에 실증사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증 등으로 조기에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 지역 중소기업 성장·혁신 기반 구축



이번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공포가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1.07.2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거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법률로써 1994년부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이 운영되었다. 2015년 지역 개발에 관한 조문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2016년 지방 중소기업 관련 조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로 이관되어 기존의 ‘지역균형개발법’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사항은 ‘중소기업진흥법’ 내에 하나의 절에 포함되어 운영하게 됐다.

이후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기업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간 부재했던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커졌다.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법’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내용은 1990년대 중반의 지역 정책 방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그간 변화된 지역 산업·기업의 정책환경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지역 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급변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7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을 공포했고,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기존 ‘중소기업진흥법’ 내 지역중소기업 관련 절(10절)의 조문을 수정·보완해 이관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제도,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조항을 마련해 구성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의 목적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 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지역중소기업을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되, 동 법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기관 간 상호협조와 협력의 의무를 명시했다. 지역혁신 관련 주체는 공공기관·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해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협력 주체로서의 연계를 도모했다. 그간 부재하였던 정부-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의 법제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역주도 혁신 기조에 따른 상향식 거버넌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 및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중소기업의 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2022년은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 간 견고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조문 체계(6장 33조)**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정부·지자체 등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조정·추진지원 및 성과분석,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비수도권 우대, 지역선도기업 및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혁신주체 연계 및 협력, 지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및 지원 등
제5장 보칙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및 전담 관리기관 지정 등
제6장 부칙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중소기업진흥법 조문 이관에 따른 타법 개정, 경과 규정 등

**지역별 대표 특화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광역시도의 ‘지역주력산업’과 시·군·구의 ‘지역연고산업’으로 구분해 지원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개요(2021년 기준)**

정책	사업내용	지원사항
시·도 주력산업	비수도권 시·도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비 2억 원당 1명 신규 채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당 연차별 2억 원 내외, 2년 이내 지원</li> <li>지역기업 단독 주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li> </ul>
	시·도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당 5억 원 이내, 기업당 3천만 원 이내</li> <li>테크노파크,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기관 활용</li> </ul>
시·군·구 연고산업	시·군·구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당 연차별 5억 원 내외, 3년 이내 지원</li> <li>대학 등 지원기관과 지역기업 간 컨소시엄</li> </ul>

먼저 지역주력산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48개 주력산업을 선정해 매년 2천억 원 내외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북돋웠다.

추진 과정을 보자면, 2017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하여 63개 지역주력산업을 48개로 조정하고, 융·복합 산업의 비중을 22%에서 69%로 확대했다. 2018년에는 지역주력 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천 개 지역스타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지역특화산업 R&D 사업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플러스(R&D)’ 사업기획 및 추진을 결정했다.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전략에 맞추어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총사업비 1조 3,154억 원(국비 6,577억 원, 지방비 2,631억 원, 민간 3,946억 원)의 신규 R&D(2020~2025년,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지역주력산업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100’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성장성 중심의 기업 육성정책에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 대표기업인 선도기업 육성정책(2021~2022, 100개사)으로 전환했다.

**지역별 주력산업 현황(2021년 기준)**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 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 서비스, 스마트 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약, 디지털영상 콘텐츠	경북	디지털 기기부품, 모바일 융합, 에너지 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 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 콘텐츠, 지능형 기계부품, 초정밀 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 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 생산가공 시스템,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 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지식 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 디지털 콘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전기차 서비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역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연도별 지역주력산업육성 예산 및 지원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예산(억 원)	2,431	1,904	2,036	2,241	2,130
지원과제(건)	973	739	659	813	1,005
R&D	660	472	448	613	786
비R&D	313	267	211	200	219
지원기업 수(개사)	5,456	4,780	5,007	4,274	4,269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특징: 최대 지원기간 확대, 정부 및 지자체 인센티브 연계 강화	
기존 지역사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년도 위주 사업(최대 3년)</li> <li>•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균특회계) 내 R&amp;D, 비R&amp;D 사업 위주로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평가를 포함해 최대 6(3+3)년간 지원</li> <li>•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자금지원·기술보증·판로개척·인재육성 방안과 지자체 지원 연계 강화</li> </ul>

지역주력산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 원을 창출했다. 또한 R&D 지원 국비 10억 원당 순 고용인원 12.7명, 사업화 매출액 39.3억 원, 특허출원 5.5건, 특허등록 3.5건의 성과를 이뤘다.

2017년~2020년 지역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 지원 성과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
수혜기업 순 신규 고용(명)	2,700	2,490	2,405	2,634	10,229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억 원)	3,890	4,230	3,194	2,180	13,494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R&D) 순 신규 고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
신규 일자리 (10억 원당)	1,434.8 (9.0)	1,278.0 (11.6)	912.9 (19.3)	445.8 (107.7)	4,071.5 (1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사업화 매출액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
사업화 매출액 (10억 원당)	3,087.9 (19.4)	3,440.7 (31.1)	3,665.9 (77.5)	2,434.3 (588.0)	12,628.8 (39.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특허창출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
출원 (10억 원당)	594 (5.2)	447 (5.6)	177 (5.9)	20 (-)	1,238 (5.5)
등록 (10억 원당)	257 (2.3)	110 (1.4)	251 (8.4)	172 (-)	790 (3.5)

특히 지역스타기업은 3년 평균 고용 11.7%, 5년 평균 매출액 20.6%, R&D 투자비중 5.3%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 대비 지역고용 증가율은 3배, 매출액 증가율은 7배, R&D 투자 비중은 6배 정도 높은 것이다(600개사, 2018~2020년 지역스타기업 분석).

지역스타기업과 중소기업(제조업) 비교

구분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지역스타기업	11.7%	20.6%	5.3%
중소기업	3.4%	2.8%	0.8%

한편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연고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사업화를 위해 마케팅, 제품 고급화, 디자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기초지자체의 특산자원·기술 및 산업 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정밀기기, 기계제조, 금속가공, 자동차·선박, 화학·섬유의 5개 제조업 분야에 한정해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도왔다. 그 결과 14개 지역의 37개 분야, 688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예를 들면 대구 스마트안경 산업, 전북 순창 미래 발효식품 산업, 충북 천연물 산업의 제조 지능화 육성, 경남 한방약초 산업 등이다.

2020년에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대해 전통성, 산업 여건, 지역·산업별 기업 분포 등을 고려해 지역 연고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2021년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지자체 역점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10개 과제(기계·소재 1개, 바이오·의료 7개, 화학 1개, 세라믹 1개)를 선정했다. 지역연고산업은 매출(내수) 645억 원, 수출 194억 원, 고용 444명 창출(2019~2020년, 688개 기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 지역연고산업 육성 예산 및 지원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예산(억 원)	120	119.82	169.82	169.1
지원과제(건)	23	23	33	33
지원기업 수(개사)	193	495	632	-

지역연고산업 경쟁력 평가 기준

구분	전통성	산업 여건	중소기업 중심
관점	기술 및 제품 특화도	성장 가능성	파급 효과
지표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전국 평균 대비 매출액	클러스터(중사자, 기업) 지표 유관·지원 기관 존재 지자체 육성 의지	중소기업·벤처 비중 매출·고용 목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제도 운영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219개의 지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24개 지역특구가 해제·통합되어 2021년 12월 기준 195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역특구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	13	8	5	3	3	1	2	19	14	16	18	14	34	27	15	3	195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7~2021년
신규 지정	13	2	2	3	5	25
계획 변경	8	1	7	5	6	27
지정 해제	3	-	1	4	5	13
지정 현황	194	196	197	195	195	-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 허가 의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등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의 규제특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메뉴판식으로 선택해 지역특구 내에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다.

### 지역특구 주요 규제 특례 현황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한편 매년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우수 특구를 선별하고,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는 시상식 및 성과 교류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확산·홍보하고 있다.

###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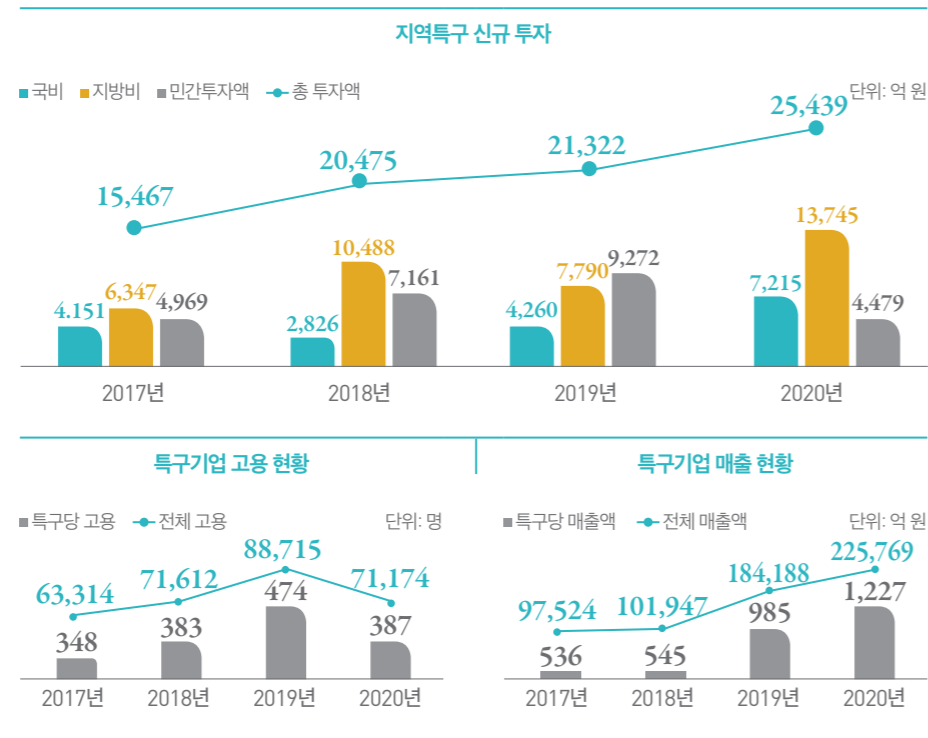
### 지역특구 성과교류 토크쇼



### 연도별 우수특구 선정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우수상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전북 김제 중자생명특구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전남 나주배산업특구
우수상	경북 경산 종묘산업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서울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충북 태양광특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전남 보성 녹차산업특구	전남고흥 웰빙 유자·석류 특구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장려상	10개	7개	9개	9개	6개
포상금	7억 원	7억 원	10억 원	9.5억 원	8억 원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없이 지역특구에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화 산업·기업발굴 및 육성, 민간투자 유치 등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공동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기준 총 2조 5,439억 원을 지역특화발전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총 8,504개 지역특구 소재 기업이 71,174명의 고용창출과 22조 5,769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고, 최근 신규투자자와 기업매출이 증가 추세라는 점은 특기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출처: 지역특구 관할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성과 보고서(187개 특구, 2020년)

###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 구축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제도와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을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위기지역·업종을 중점 지원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 창업 집적지구, 지식산업센터, 상점가,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 낙후 산업단지만 지원하던 기존 제도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는데(중소기업진흥법 개정, 2020.6), 2021년 기준으로 14개 특별지원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지정기간	지정 산업단지(14개)
2018.3.21. ~ 2023.3.20.	전남 2(담양일반, 영광대마전자자동차일반)
2020.2.27. ~ 2025.2.26.	강원 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 6(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021.9.9. ~ 2023.9.8.	전남 1(목포대양일반)
2021.12.30. ~ 2023.12.29.	충남 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지정 기준은 산업 침체, 기업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평가하여, 직접 생산물품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50%, 5년간) 등 세액 감면을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업 등 지역경제 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위기대응 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컨설팅·애로사항을 진단한 후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해 기술·판로 개척 등 사업 다각화를 도모한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4개 지역의 총 96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마케팅 등 9개 프로그램의 143건을 제공했다.

또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수요형 R&D를 제공해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 등 Scale-up R&D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위기지역 소재 시도(4개)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 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를 지원한다. 지원실적은 위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형 R&D 85개 과제, Scale-up R&D 51개 과제(2021년)를 지원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중앙 협력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기업에 적시에 지원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역 경제상황 및 기업 경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기징후를 포착한 후 실태조사로 위기를 진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기진단 지표에 따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진단결과를 분석해 위기단계를 설정한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8년 전북(2018년 4월~2020년 4월), 울산·경남·전남(2018년 5월~2019년 5월)의 산업 위기지역과 전남, 전북, 울산, 경남(2018년 5월~2020년 4월)의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이 중 전남, 울산, 전북 3개 지역에 위기 대응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4개 산업 위기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Scale-up R&D’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2019년에는 경남지역 위기대응 지역 내 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Scale-up R&D 계속사업을 확정하고, 2022년에는 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Scale-up R&D 대상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확대하여,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위기대응 체계 관련 주요 사업의 연도별 예산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위기대응 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억 원)	48	104	64	64	54.4
Scale-up R&D(억 원)	40	140	138	54.4	54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억 원)	-	-	-	-	33



2018년에는 2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0년에는 10개 산업단지를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했다.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제도를 확대·개편(2020년 3월 6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했다.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정 요건도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시·도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의 낙후·쇠퇴,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이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일조했다. 2021년에는 1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하고 1개 농공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위와 같이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등을 지정(14개, 2021년 12월 기준)하고, 세제·자금·R&D 등을 지원한 결과, 평균 분양률·고용·수출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성과**

구분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분양률(%)	54.6	59.8	70.5
고용(명)	552	664	702
수출액(천 달러)	27,825	33,100	32,573

또한 위기대응 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한 결과, 353개 기업에 216억 원을 지원해 사업화 매출액 314억 원(10억 원당 14.5억 원)을 달성했고, 333명의 고용을 창출(2018~2020년)했다.

**위기대응 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성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화 매출액(억 원)	59	169	86
신규 고용(명)	70	159.5	103.8

Scale-up R&D 수혜기업 168개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화 매출액 약 350억 원과 26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Scale-up R&D 운영 성과**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화 매출액(억 원)	2	98	250
신규 고용(명)	6	103	160

**지역중소기업 육성 입지정책**

지역의 창업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복합 창업거점, 민간협력 스마트 혁신지구,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다.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와 교통·주거 등 정주여건이 결합된 지역의 복합 창업거점인 그린스타트업타운은 낙후된 도심 기능을 창업·벤처를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과 연계한 친환경 스타트업타운이다. 2020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충남 천안에 1호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선정됨에 따라 2개 건물 중 어울림타워가 2022년 3월 개소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광주에 2호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 중이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앵커시설인 복합허브센터 건립을 지원받는데, 복합허브센터는 민간연구소,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을 집적하여 창업기업과의 공동 R&D 등 지원 및 타운 운영을 총괄한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내용**

**[천안] 충남 천안역 인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 (육성 분야) 친환경 미래차 및 정밀의료



**[광주] 광주역(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  
· (육성 분야) 친환경에너지·스마트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민관협력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물류 등 스마트화 공동시설, 친환경(그린) 인프라 등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한다. 2021년 대전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 도남농공단지·공업단지 2곳을 선정해 앵커 기업과 스마트 플랫폼 및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앵커기업의 기술지원 및 공정 컨설팅 시스템 구축, 공동 플랫폼 구축 시 스마트그리드, 태양광 등 친환경 시스템 적용 등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43개의 센터 건립을 지원(완료 10개, 진행 중 26개, 신규 7개)하고 있다.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추진 현황

구분	1차 (2012~2016년)	2차 (2015~2018년)	3차 (2016~2019년)	4차 (2017~2020년)	5차 (2018~2021년)	6차 (2019~2022년)	7차 (2020~2023년)	8차 (2021~2025년)
지역 (36개소)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3)	대구(수성구) 대전(동구) 경남(진주) (3)	대구(달서구) 청주(오창읍) 전주(덕진구) (3)	포항(북구) 울산(남구) 전주(완산) (3)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4)	전남(나주) 전남(영광) 울산(중구) 경남(창원) 전북(남원) 강원(춘천) (6)	충북(제천) 전북(전주) 부산(강서) 충남(홍성) 전남(광양) 대구(북구) 광주(북구) (7)	세종 충북(충주) 충북(영동) 충남(아산) 충남(서천) 전남(화순) 경북(경산) (7)
진행 사항	운영 중 3	운영 중 3	운영 중 2, 건립 중 1	운영 중 2, 건립 중 1	건립 중 4	건립 중 6	건립 중 7	건립 중 7

\* 2022년 신규 지역(7개): 광주, 강릉, 금산, 김제, 순창, 영천, 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

차수	지역	관리기관	입주업종	입주기업 (창업기업)	고용인원
1차	부산(북구)	부산경제진흥원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	35개(17)	291명
	대구(북구)	대구제3산업단지 관리공단	정밀가공, 전지전자 등 제조업종	23개	85명
	광주(동구)	(재)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광주특화산업) ICT기기제조, 산업디자인 등	50개	434명
2차	대구(수성)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ICT/SW 등 융합 산업	36개	582명
	대전(동구)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광역시 전략산업 및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집중 유치	23개	168명
	경남(진주)	진주시(직영)	문화콘텐츠, 항공우주관련 제조업 및 예비창업기업	29개(1)	13명
3차	충북(청주)	(사)한국산업진흥협회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16개	116명
	전북(전주)	(사)캠텍종합기술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52개	194명
4차	울산(남구)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3D 프린팅 등	23개	163명
합계				287개(18)	2,0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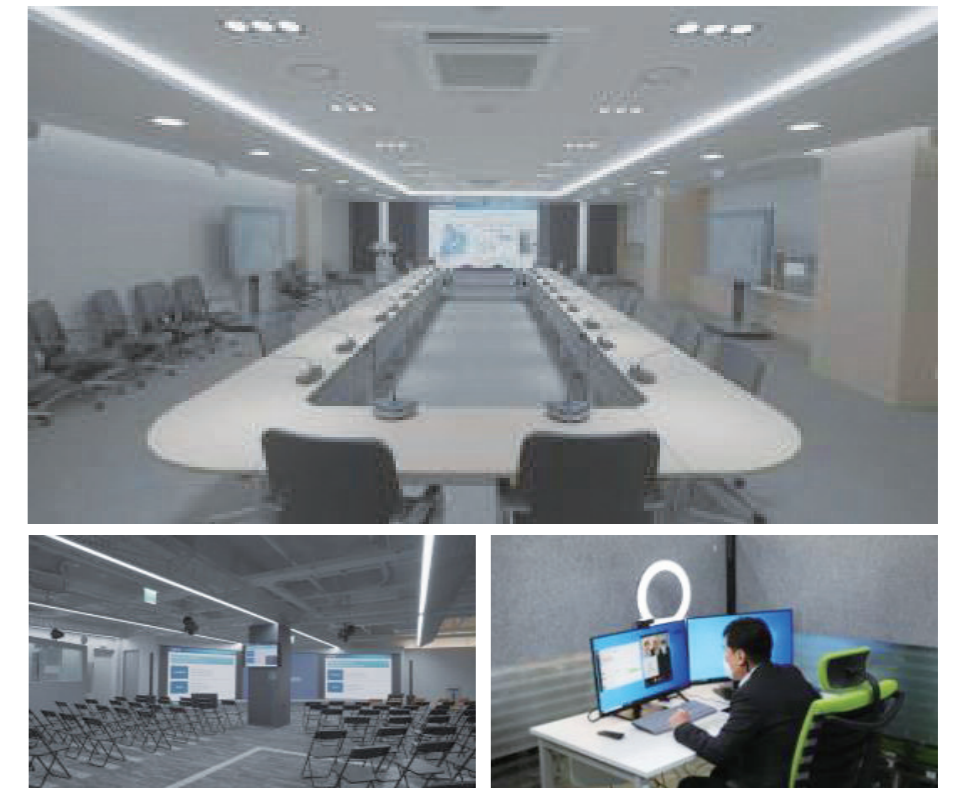
주: 2021년 12월 기준

더불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2020년 234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화상회의실 1,567개소(일반형 1,562개, 확장형 5개)를 구축했다. 일반형은 10인 내외가 사용 가능한 공용 회의실에 카메라, 스피커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구성되며, 일반형 중 54개소에는 중소기업 출장자, 원격근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1~2인용 소규모 '스마트워크 부스'를 추가 설치했다. 한편 확장형은 대규모 화상회의와 수출상담회까지 가능하도록 고화질·고음질 시스템을 지원한다.

2021년 6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된 확장형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개소식에 참여한 권칠승 장관은 “전북 확장형 화상회의실 개소를 통해 지역기업들에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시공간 제약을 넘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받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신규 발굴 및 기존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실을 활용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총 32개의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비대면 수출 상담이 이루어져 322만 달러(약 36억 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화상회의실 구축 사례



화상회의실 구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구축 현황 (개소)	297	84	51	60	66	70	44	11	297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53	77	66	90	107	82	87	25	1,567

한편 2021년에는 구축된 화상회의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위치, 현황 확인, 예약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예약관리 포털(www.smes.go.kr/boms)을 개설했다.



## 신속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K-방역 강화



A사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루어락과 안전보호 기능이 장착된 LDS 주사기'를 개발했다. 그러나 제품 디자인 설계만 완성한 채 생산체계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LDS 주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A사의 대량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B사가 나서 A사의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4일 만에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1개월 만에 월 1천만 개 이상의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LDS 주사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A사의 성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 빛을 발한 결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도 1천여 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LDS주사기



미 FDA 승인



주요설비



대통령 현장 방문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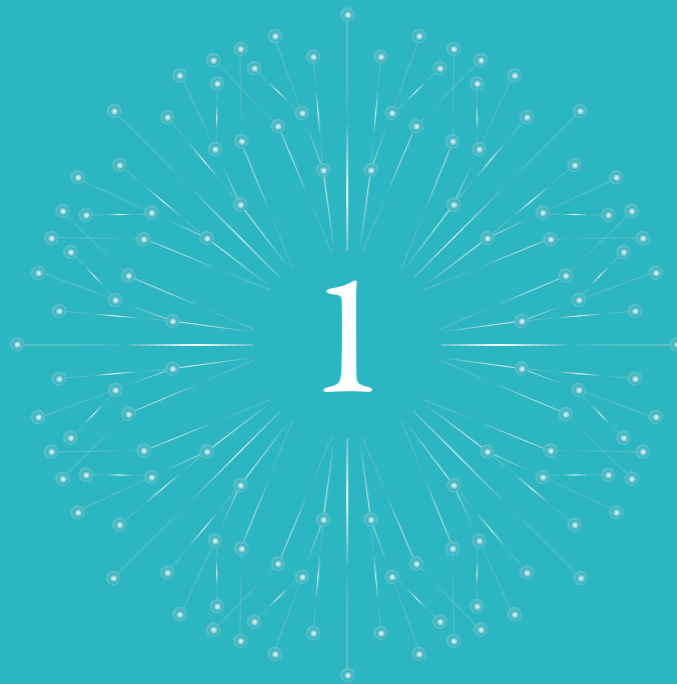
# 제6절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1.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2.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3. 기업 친화적 규제 혁신



#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합니다.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도 지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사, 2017.12.05.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상한기업, 소재·부품·장비 상생 모델 등과 같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의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자상한기업’ 활동

그동안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은 협력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됐고, 제품·공정혁신의 80%를 내부에서 개발하는 폐쇄형 혁신을 추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투자, 공동 R&D 등 개방형 혁신을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본·기술·노하우 등 역량 부족으로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력사뿐만 아니라 비협력사·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하는 ‘자상한기업’을 발굴해 자본·기술·노하우 등의 공유를 도모했다.

‘자상한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 및 유니콘기업이 자사의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기업별 특색에 맞게 스마트공장 구축, 온라인 진출, ESG 경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등 자상한기업 35개 기업을 발굴해 협약기간 중 123조 원 규모의 민간협력(투·융자, 판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자상한기업 개념과 선정방식을 수립한 이래, ‘네이버’를 시작으로 운영 첫째 총 10개 기업과 자상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에는 제조·금융 분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예비유니콘까지 포함해 총 15개 기업과 자상한기업 협약을 맺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자상한기업과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권 자상한기업 협약 주요 내용

- (국민) 소호 금융컨설팅센터 금융컨설팅 확대(연간 3,000건 → 7,200건)
- (우리) 소상공인 창업 및 금융상담 종합지원센터 4개 추가(5개 → 9개)
- (하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한도 확대(4천억 원 → 1조 원)

2021년에는 사전에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해 관련 대기업·혁신기업과 협약하는 ‘자상한기업 2.0’으로 개편했다. 이후 총 9개 기업과 자상한기업 2.0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과 ESG 경영 확산에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1년 7월 권칠승 장관은 LG화학, 신한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자상한기업 2.0의 여섯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ESG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도별 자상한기업 협약 체결 내용**

2019년				
① 네이버 (2019. 05.)	② 포스코 (2019. 05.)	③ 신한금융그룹 (2019. 06.)	④ 국민은행 (2019. 08.)	⑤ 우리은행 (2019. 08.)
⑥ 소프트뱅크벤처스 (2019. 09.)	⑦ 삼성전자 (2019. 10.)	⑧ 하나은행 (2019. 11.)	⑨ 국가철도공단 (2019. 11.)	⑩ 현대기아차 (2019. 12.)
2020년				
⑪ KAI (2020. 02.)	⑫ ARM (2020. 04.)	⑬ 스타벅스 (2020. 05.)	⑭ SKC (2020. 05.)	⑮ LX (2020. 07.)
⑯ 기업은행 (2020. 08.)	⑰ KT (2020. 09.)	⑱ SGI서울보증 (2020. 09.)	⑲ 프레시지 (2020. 10.)	⑳ 한국수자원공사 (2020. 11.)
㉑ 비자-쇼퍼파이 (2020. 11.)	㉒ LH (2020. 11.)	㉓ CJ ENM (2020. 12.)	㉔ 컬리 (2020. 12.)	㉕ 이마트 (2020. 12.)
2021년				
㉖ 우아한형제들 (2021. 01.)	㉗ SK E&S (2021. 04.)	㉘ 바디프랜드 (2021. 04.)	㉙ 한화시스템 (2021. 05.)	㉚ SK에코플랜트 (2021. 06.)
㉛ NHN커머스 (2021. 06.)	㉜ LG화학 (2021. 07.)	㉝ 한국전력공사 (2021. 09.)	㉞ 포스코인터내셔널 (2021. 10.)	㉟ 호반그룹 (2021. 11.)

이와 같이 자상한기업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비협력사인 방역용품(마스크, 주사기) 생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생산량 확대에 기여했고, 프레시지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온라인·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가정간편식(밀키트)을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수출 지원 등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줬다. 또한 스타벅스는 중·장년 재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실시해 카페 재창업 및 취업을 지원했다.

이렇게 자상한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즉 대기업뿐만 아니라 프레시지, 컬리, 우아한형제들 등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도 자발적인 상생협력에 참여해 '상생이 상생을 낳는 문화'를 확산시킨 것이다. 실패의 경험을 딛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후배 재도전기업을 위한 재도약을 지원하는 등 선·후배 기업 간 상생협력도 활성화시켰다.



권칠승 장관은 2021년 4월 바디프랜드와 '재도전 성공기업과 함께하는 재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도전 성공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상한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1월 다보스포럼, OECD에서 자상한기업 사례를 알려 AMP이사회(다보스포럼 내 제조 및 생산 분야의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세계경제지도자회의 등 해외기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사회 공동의장인 타만 산무가랏남 싱가포르 장관은 "자상한기업을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해 많은 나라들이 우수한 정책사례를 배우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언론 등을 통해 우호적으로 보도되어 보여주기식 행사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비자본 투자까지 겸하며 서로가 윈윈했다는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시켰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상생모델 발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3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5일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0월에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수요·공급기업 간 유기적 상생모델 발굴에 나섰다.

특히 장·차관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7회)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3회)에 직접 참석해 상생모델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년 5월 권칠승 장관은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지속, 미·중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목표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화 등 '기술 독립'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가 세계를 주름잡는 '소부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은 필수적이다"라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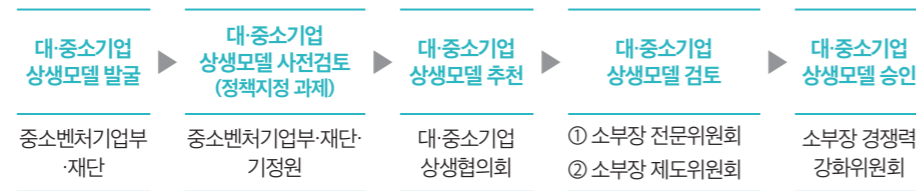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지원방안 논의 내역**

구분	일자	주요 내용
1차 회의	2019.10.16.	협의회 기능 및 운영방안, 운영규정 제정안 등 논의
2차 회의	2019.11.07.	상생모델 발굴 계획 및 상생모델 정부지원 건의 등 논의
3차 회의	2020.01.13.	기계·금속 분야 상생모델 발굴(3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제3차 경쟁위 승인, 2020.01.22.)
4차 회의	2020.05.06.	반도체 분야 상생모델 발굴(3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제4차 경쟁위 승인, 2020.05.13.)
5차 회의	2020.07.27.	전기전자 분야 상생모델 발굴(2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제5차 경쟁위 승인, 2020.10.14.)
6차 회의	2021.01.12.	전기전자 분야 상생모델 발굴(2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제6차 경쟁위 1건 승인, 2021.01.26.)
7차 회의	2021.05.03.	전기전자, 기계금속 분야 상생모델 발굴(4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제7차 경쟁위 승인, 2021.05.25.)
8차 회의	2021.09.13.	전기전자, 자동차 분야 상생모델 발굴(4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제8차 경쟁위 승인, 2021.11.17.)
9차 회의	2021.12.21.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 상생모델 발굴(2건) 및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예정

6개 업종별 대·중소기업 간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산·학·연,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면서 대기업이 판로를 보장해주는 상생모델을 발굴했다.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할 시 중소기업은 매출 증대를,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원가 절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상생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추진 방식은 상생모델을 발굴하면 상생협의회 및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R&D 지원사업, 정책자금 우대 가점, 규제사항 부처 협의를 통한 해소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생모델 추진 체계**



2020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2.0 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협력모델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을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소부장 산업의 자립을 위한 소부장 상생모델 발굴·지원을 위해 3.5억 원의 신규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 5월에는 권칠승 장관이 소부장 으뜸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을 현장 방문해 연구개발(R&D)센터 반도체 장비 제조·가공설비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소부장 상생모델 발굴·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부장 상생모델	-	-	350(신규)	350

이러한 활동을 통해 총 17건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이 승인(대기업 26개, 중소기업 21개 참여)되었으며, 수요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으로 '개발 → 테스트·양산 → 내수·수출판로'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에는 대기업이 외국기업 등을 선호했으나, 이제 국내 중소기업을 먼저 찾는 등 밸류체인 신규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도체 분야는 수입의존도가 60% 이상이며, 공급망 자립을 위해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했다. 이에 단기 상용화와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중소기업 3개사와 대기업 3개사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수입의존도가 90~100%로 높은 기계금속 4건은 국산화 및 기술자립이 시급하고 대기업의 국산화 의지가 컸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6개사와 대기업 4개사가 상호협력 MOU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단기 상용화를 추진했다. 이차전지, 5G, 그린뉴딜 등 다양한 품목의 국산화를 시도한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이며, 세계 최초(1), 국내 최초(4) 도전적인 과제를 상정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11개 중소기업과 18개 대기업이 구매계약, NDA(비밀유지계약)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1개 중소기업과 1개 대기업이 1:1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전량 수입 중인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총 17건의 상생모델을 통해 향후 5년간 매출 4,669억 원, 투자 856억 원, 고용 창출 482명이 기대된다.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피칭데이, 기술구매 상담회, 현장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2019년 10월부터 상생 피칭데이, 기술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주요 기술 및 사업화, 국산화 계획 등을 피칭하는 장을 마련하고, 수요 대기업과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와 1:1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회에 걸쳐 소재·부품·장비 기술구매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1차 상담회 41건, 2차 상담회 34건, 3차 상담회 122건, 4차 상담회 136건의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의 1:1 매칭 상담을 실시했다.

더불어 동반성장지수(165개사) 및 공공기관 평가(37개사) 대상기업, 수탁기업협의회 운영기업(287개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규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중소기업의 성과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2020년 10월 지원 현황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했다.



**상생협력기금 운용**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대기업 등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혜택**

- 출연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자본총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20% 추가 과세 시 출연금액의 3배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 출연금액 기부금 처리 가능(소득의 10% 한도 내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 우대

지원대상은 '상생협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기술개발 지원,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포상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스마트공장 구축, ESG 경영 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상생법 제20조의5를 신설해 상생협력기금 설치 및 사용용도 근거를 마련한 후 2021년 최초로 연간 3,000억 원 이상을 출연했으며 누적 1조 원을 돌파했다.

**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억 원, 개)

출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연간금액	1,571	2,013	2,006	2,572	3,678	11,840
출연기업	117	114	163	185	239	818	

\* 천만 원 단위 반올림으로 집계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019년에는 상생협력기금 세액 공제(10%)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로 3년 연장하고, 2024년까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365억 원을 지원했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2,572억 원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1년에는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사후에 기금 출연 및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또한 출연기금 사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 등이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출연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기금 출연 기업의 저변을 확대한 결과, 2018년부터 연간 기금출연액 2,000억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최근 5년간 300개사로부터 1조 1,840억 원을 조성해 생산성 향상, 성과 공유 등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협력, 생산성 향상, 자금, 판로,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 없이 민간기업의 출연만으로 24만여 개 중소기업에 9,92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했다.

**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개)

지원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원금액	1,515	1,839	1,704	2,295	2,569	9,922
지원기업	9,094	9,477	28,119	86,472	110,525	243,763	

**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별 출연·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개, %)

	사용용도	성과의 배분	기술협력	생산성 향상	판로지원	창업지원	투자지원	문화확산 등	합계
출연금액(a)	1,822	899	1,514	95	318	6,979	215	11,842	
출연비중(%)	15.4	7.6	12.8	0.8	2.7	58.9	1.8	100	
지원금액(b)	1,946	979	1,757	77	382	4,655	127	9,922	
지원비중(%)	19.6	9.9	17.7	0.8	3.8	46.9	1.3	100	
지원기업	8,783	708	8,120	1,541	1,749	187,155	35,707	243,763	

주 1: 2017~2021년 기준

주 2: 투자재원은 대기업 등 출연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상생협력 활동으로 협력사 및 가맹점 등의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임직원 복리후생 등 지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 민간분야에서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365억 원을 지원해 국가적 위기 극복 활동에 동참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력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배포, 사업장 방역 등 코로나19 예방 및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왔다. 특히 자동차, 항공,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업 8개사는 226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상생특별보증으로 부품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기업명	구분	상생협력 사례
LG생활건강	코로나19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음료, 해태htb 등 자회사와 공동으로 가맹점,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건비·임차료 등 지원(29.1억 원)</li> </ul>
현대자동차 그룹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볼보그룹코리아에서 226억 원의 기금 출연</li> <li>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운용배수 10~15배)을 보증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제공(대출지원 3,390억 원 효과 발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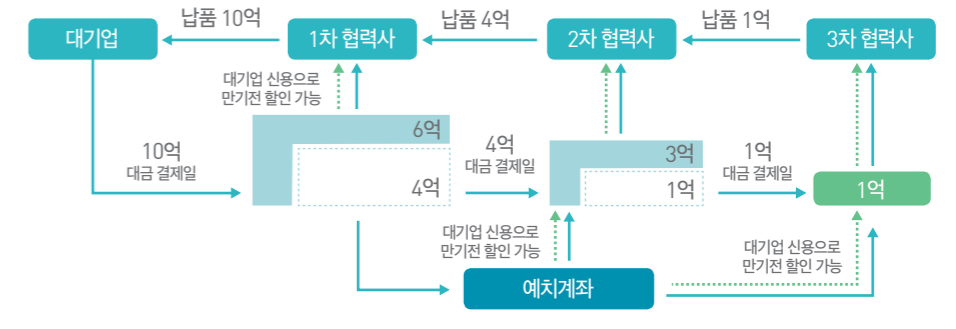
### 상생결제제도 확산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은 60일 내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하위 거래단계의 협력사들은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이에 중소 협력사의 납품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연쇄부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결제제도가 필요하다.

상생결제제도도 협력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지급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1차 협력사가 최상위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2차 이하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다.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고, 2·3차 거래기업도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할인과 차이가 있다. 본 제도의 장점으로 만기지급 현금보다 빠른 자금 유동화, 대기업 및 정부·지자체 신용도로 저금리 조기 현금화, 하위 협력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연쇄도산 방지, 일부 사용금액(0.1~0.2%) 법인세 감면, 건설 지급 보증료 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12월 권철승 장관은 ‘상생결제 확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 포상과 함께 상생결제 활용 우수사례,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상생결제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수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상생결제가 더 넓고,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의 자금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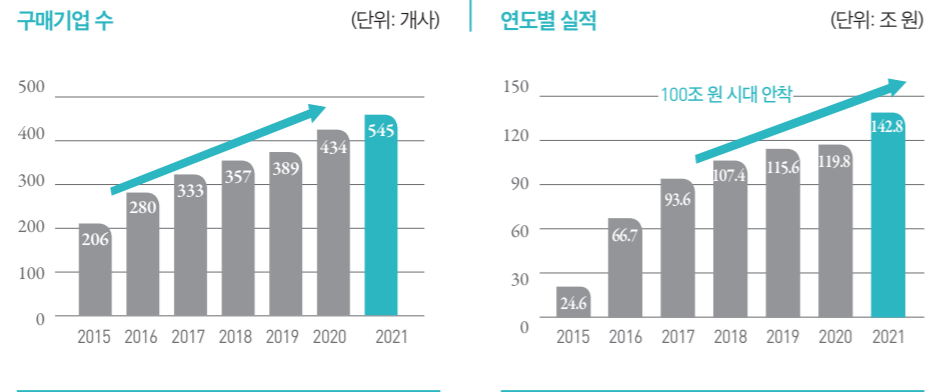
2017년 6월 건설공사 지급보증료 면제 근거를 마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한 이래, 2018년 상생결제 의무화의 법적 근거(상생법 제22조 제5항)를 마련했다.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생결제 비율 이상으로 하위협력사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2019년에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10일 만기 상생결제도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개선(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했다. 2020년에는 ‘은행’으로 제한된 상생결제 서비스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상생결제 운영요령 고시 개정)하고, 2021년에는 정부·지자체의 상생결제 활용 근거를 마련(상생법 제2조 8의3호, 제22조 제6항)했다. 이로써 민간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상생결제를 국가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545개 구매기업이 4년 연속 100조 원 이상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한 결과, 14만 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2020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결제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상생결제 연도별 실적

(단위: 조 원, 개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 실적(증가율)	24.6	66.7(171%)	93.6(40%)	107.4(15%)	115.6(8%)	119.8(4%)	142.8(19%)
구매 → 1차(증가율)	24.3	65.8(171%)	92.6(41%)	106.1(15%)	113.9(7%)	117.7(3%)	140.1(19%)
2차 이하(증가율)	0.3	0.9(168%)	1.0(18%)	1.3(28%)	1.7(29%)	2.1(27%)	2.7(24%)
누적 구매기업 수	206	280	333	357	389	434	545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 활용실적은 매년 25% 이상 증가해 현금 유동성이 개선됐다. 또한 상생결제 본연의 목적인 하위협력 중소기업의 안전한 대금 회수, 현금 유동성 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1차 이하 협력사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지표에 상생결제 실적을 대폭 강화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 활용 실적 및 증감 비율(조 원, %)  
2018년 1.3, 28.4 → 2019년 1.7, 29.3 → 2020년 2.1, 27.5 → 2021년 2.7, 25.3
- 1차 이하 협력사 만족도(%)  
2019년 49.3 → 2020년 57.1 → 2021년 69.2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 2018.11.09.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공정거래 확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법 집행 강화, 자율조정 활성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법률 상담 및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수·위탁기업 간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진 개선 유도 및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업이 재료비 등 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위탁기업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범부처 불공정·기술침해 사건 조정·중재 등을 위한 ‘상생조정위원회’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수·위탁 분야 불공정거래 개선 제도 정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2018년에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선 요구 및 미이행 공표 시 벌점을 상향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했고, 벌점 경감은 축소했다. 또한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일된 법 집행을 위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2019년에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관련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고,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위탁거래 약정서 미교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 규정을 신설했고,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3배 이내)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를 위해 ‘수·위탁거래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20년에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습적인 법 위반자(위반 유형에 관계 없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대해 벌점을 50% 가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시행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수·위탁거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위해 2013년 11월부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신고센터를 찾아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더 많은 곳에 설치했다. 2017년 10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분쟁조정기 많이 접수되는 단체를 중심으로 15개 신고센터를 개소했고, 2019년·2020년에도 41개 신고센터를 각 사업자단체 등에 추가로 설치해 현재 7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확대 현황

설치	센터명	신고센터(개)		비고
		신규	누적	
2013.11	본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	14	중소벤처기업부+재단
2017.10	중소기업중앙회 등	15	29	사업자단체
2019.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	69	사업자단체
2020.3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70	지방청 개소

이러한 양적 확대에 힘입어 신고센터에서 처리한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2017~2021년 연평균 1,171건으로, 기존 2014~2016년 연평균 473건에 비해 2.5배로 대폭 증가했다. 매년 신고센터 상담 건수 또한 2019년 979건, 2020년 1,229건, 2021년 1,771건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각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지원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권역별 신고센터에 법률 상담·자문을 수행하는 전문 변호사를 지정하고, 신고센터 운영 매뉴얼 및 관련 법령집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각 신고센터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2018년 80.4점에서 2019년 82.7점, 2020년 85.5점, 2021년 87.8점으로 꾸준히 향상되었다.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강화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을 대기업 위주로 대폭 확대했다. 2017년 6,500개사만 조사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5,000개사로 조사대상을 2.3배 가까이 늘렸다. 또한 조사결과가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한 결과, 2017년 이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기업의 98% 이상이 자진 개선을 통해 미지급한 대금 등의 지급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지급받게 된 금액은 2020년에만 약 193억 원에 이른다.

### 2017~2020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단위: 개사,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 수	570	6	576	644	2	646	581	6	587	740	4	744
	금액	3,953	2,928	6,881	4,281	173	4,454	4,883	370	5,253	19,279	1,202	20,481
준수사항 미이행	기업 수	-	24(2)*	24(2)	-	12(1)	12(1)	-	9	9	-	-	-
조사 대상	위탁/수탁	1,500/5,000			2,000/10,000			2,000/10,000			3,000/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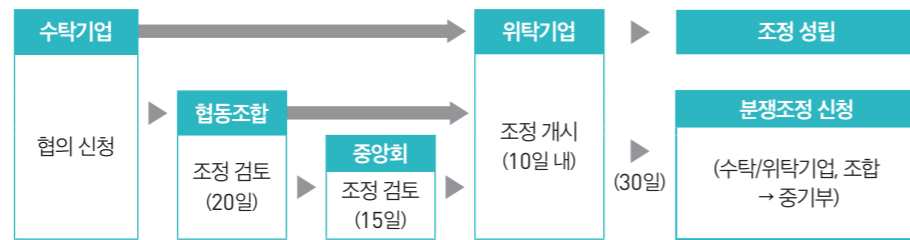
\* 괄호 안은 납품대금 미지급·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복 적발된 기업 수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2009년부터 하도급 영역에서는 공급원가 변동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도급 이외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도록 2019년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절차**



\* 신청 후 10일 이내 위탁기업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 가능

수탁기업은 공급원가 변동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조정협약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생협력법」에 규정하는 등 실효성도 담보했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협의 주체에 포함시키고, 협동조합이 신청할 때 필요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요건을 삭제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 및 활용실적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51.3%에서 2020년 55.9%(4.6%p 증가)로 나타났고, 납품대금 조정 합의 성공비율은 2019년 85.7%에서 2020년 96.6%(10.9%p 증가)로 조사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미고발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부 등이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요청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당초 검찰청에만 부여됐으나, 2014년부터 중소기업부, 조달청, 감사원까지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까지 총 436건을 검토해 그 중 46건을 고발 요청(고발률 10.5%)했다. 2016년 이전에는 149건 중 11건을 고발 요청(고발률 7.4%)했고, 2017년 이후는 287건 중 35건을 고발 요청(고발률 12.2%)해 고발 요청 건수 및 고발률이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행위와 더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의 사건에서도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 고발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무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의무고발 요청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의무고발 요청	3건	3건	8건	13건	8건

**상생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처는 부처별로 조정·조사·수사가 각각 이루어졌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침해, 불공정 거래를 조정·중재로 연계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범부처와 민간이 협업해 공정정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2019년 6월 26일).

상생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5개 유관 부처와 관련 업계 단체·전문가를 포함해 민간 합동으로 구성됐는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연계 및 범부처·민간 협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각 부처에 접수된 중소기업 관련 불공정 거래 사건들에 대해서 조정·중재안을 도출해 기업들 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돕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회 개최됐다. 그간 개별사건은 총 67건이 상정돼 그 중 34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부처별 협업 방안은 총 33건이 상정돼 논의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검찰 수사 사건의 중소기업부 연계, ②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③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공기관 도입 등이 있다.

**외식업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 상생협약**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창업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맹희망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2021년 3월 가맹점주 간담회(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에서도 가맹점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인테리어 공사 관련 거래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받아 인테리어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가맹희망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고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및 비비큐, 공차, 명륜진사갈비 등 8개 가맹본부와 상생협의를 추진했고, 2021년 11월에는 각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에서는 최초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 받기로 개선을 약속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 공사비와 공사관리비를 낮추어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기술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술 개발 동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2020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보완과 스마트공장, 기술거래 활성화 등 기술보호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확대하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 완화제도 등이 도입됐다(2022년 2월 시행).

2018년 12월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했고, 2019년부터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을 신설하고 기술보호과 내에 기술침해조사팀을 구성해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사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9월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분쟁을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2년 만에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첫 해결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행정조사 통한 기술분쟁해결 첫 사례 (현대중공업-삼영기계 분쟁)**

- 피스톤 제조기술 및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 도면을 현대중공업이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2019년 6월)
- 행정조사 후 4차례 상생조정위원회 안전 상정, 2021년 4월 조정 권고, 8차례 양자 미팅 주선 → 합의 도출(2021년 9월)
- 거래재개, 12건 분쟁종결 등의 내용으로 합의문 작성 → 조정절차 통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2021년 9월 15일)

이 밖에도 2018년도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 중기청에 기술보호지원반을 설치해 사전 예방 및 피해 상담 395건을 지원했으며, 국내 변호사, 변리사 200여 명으로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2021년 12월까지 380건의 법률자문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핵심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해 기술탈취·도용 등으로 인한 분쟁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의 증빙자료를 기록해 분쟁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을 신규로 도입했고,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만 운영해온 기술임치를 기술보증 기금까지 확대했다. 2019년 9월에는 스마트공장 사업 성과물에 대한 임치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도에는 표준화도급계약서 46개 업종 중 총 43개 업종에 임치제도를 반영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 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공모전이나 거래관계 중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기술자료 임치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계약건수	9,216	9,522	10,415	11,226	13,457	53,836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장으로 해결을 위해 보안·법률 분야 기술보호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보호 수준 진단 및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현장자문 수혜기업의 보안



역량점수는 지원 전 41.5점에서 지원 후 69.4점으로 67.2% 향상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2021년 현장자문 지원 결과 (단위: 건)

구분	수준 진단 서비스	보안 전략	보안 시스템	스마트 공장	법률 자문	해외진출 기술보호	해외	기타	합계
2017년	-	564	147	-	74	-	5	11	801
2018년	-	462	151	-	192	-	16	-	821
2019년	-	321	182	-	97	-	20	-	620
2020년	-	353	290	150	131	42	-	-	966
2021년	136	350	274	132	160	33	-	-	1,085
계	136	2,050	1,044	282	654	75	41	11	4,293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기술보호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기술보호 기반을 조성했다. 참여기업 규모를 보면 2018년 52개사에서 2020년도 171개사로 328% 이상 증가했고, 기술보호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도 256,939명에 이르는 등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도에는 국가 핵심기술, 소부장·그린뉴딜·BIG3 유망기업 등 기술보호가 시급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도기업으로 시범 선정했으며, 1차 진단결과 보안점수가 평균 10점 이상, 최대 21점까지 상승하는 등 보안역량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

2018~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48.6점을 기록했고, 대기업 대비 기술보호 역량을 나타내는 상대지수도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70.1%로 조사되는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 및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8~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 및 상대지수 현황 (단위: 점, %, %p)

구분	중소기업 역량점수	중견기업 역량점수	대기업 역량점수	중소기업 상대지수(%)	전년 대비 상대 지수 증감률(%p)
2020년	48.6	64.3	69.4	70.1	3.9▲
2019년	45.9	66.8	69.3	66.2	3.2▲
2018년	44.3	60.9	70.3	63.0	12.5▼

\* 중소기업 상대지수(%)= (중소기업 역량점수/대기업 역량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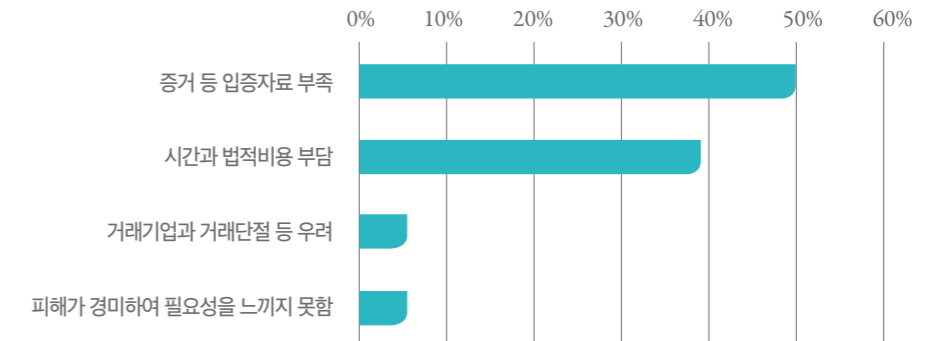
###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2022년부터는 피해구제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인증제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관리 요소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기술보호 역량과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인증평가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침해당하고도 대응할 여력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으로 향후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유출, 탈취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 출처 :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한편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한 분쟁해결과 함께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침해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도입해 R&D, 경영안정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 사업연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기술침해 사건을 겪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침해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으로 기술보호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불공정 관행이나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 친화적 규제 혁신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입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발언, 2017.11.28.

###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건의, 권고)하고,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를 통해 정부 규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상시·체계적으로 기업의 각종 규제 및 애로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592회 규제 발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진행한 결과 4,920명의 중소기업인과 소통하며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 규제 애로 2만 2,383건을 발굴하고 2만 2,417건을 처리(월평균 약 400건 발굴·처리)해 그 중 총 6,367건의 제도를 개선(월평균 114건)했다.

### 연도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실적

구분	2017년 5~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통(회)	58	146	76	157	155
참여(명)	424	684	1,306	1,224	1,282
발굴(건)	3,956	4,486	3,225	5,848	4,868
처리(건)	2,651	3,982	5,328	5,469	4,987
개선(건)	532	430	775	2,103	2,527

↓  
지난 정부 대비 기업 소통 52%↑, 규제 처리 107%↑, 제도 개선 189%↑

2017년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조사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혁신성장 촉진 등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핵심 규제 애로를 정비했다. 국무조정실과 협업으로 핵심부담 행정조사의 전면 정비를 통해 제출 서류를 완화했고,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정부담 규제 28건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기술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물론 판로 등 기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2018년에는 성장산업 저해규제, 시험·검사기관 및 지자체 숨은 규제 등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 애로 개선 대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4차에 걸쳐 현장밀착 규제혁신 방안을 강구했는데, 관광·레저·게임산업 성장촉진, 신산업·신기술 활성화와 관련된 64건의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시험·검사기관 등 정부 업무 대행기관의 규제 선진화, 지자체 조례·규칙 합리화 등 숨어있는 규제 애로 69건을 정비했다.



2019년에는 작은기업·공공기관 규제 애로 개선 및 현장밀착 고질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경영 규제 부담을 낮추고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작은기업의 사업기반 걸림돌을 완화하고, 생존·성장 저해 규제 합리화, 준조세·행정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규제 40건을 개선했다.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정부인 공공기관의 임대료·사용료, 조달·공정거래, 기관고유 사업 등 자체 규제 49건을 정비했다.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규제 및 과도한 기업 부담을 야기하는 핵심 규제를 일괄 정비해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을 대상으로 형평성 제고, 조달 진입 촉진, 행정부담 감축, 성장지원 강화 등 사회적경제 관련 59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9월에는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 부담 정비방안을 수립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투자·연구 촉진, 기업자율·경쟁력 강화, 행정부담 경감 등 27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2021년에는 127개의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소관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과급력이 높은 현장의 고질 규제를 혁신했다. 센터에서는 혁신성장 저해 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 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제도 등 기업 민원을 전달 발굴해 옴부즈만과 협업해 처리했다.

또한, 제3·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별 각종 준조세 개선 등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기술 개발 촉진, 조달진입 지원, 행정부담 감축 등 67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6월에는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미래 대비 지원 등 13건의 고질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업활동 관련 6천여 개 위원회에 대해 심의대상 현실화, 기준·절차 합리화, 행태·제도 개선 등 46개의 중점과제를 일괄 정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담 규제를 집중 발굴, 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현장 중심의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협업으로 8차례에 걸쳐 ‘현장밀착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등 합동보고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

대책명	주요 내용	옴부즈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I) (2018.02.07.)	①경제 분야 현장 규제 개선, ② 신서비스 시장 활성화, ③ 행정 규제·그림자 규제 개선 등 50건 - 산림 레포츠 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 전문판매업 시설 기준 명확화 등	17건 (34.0%)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II) (2018.05.17.)	① 신시장 창출 촉진, ② 기업환경 개선, ③ 세계-예산지원 등 48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 규제 개선,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확대 등	4건 (8.3%)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 (2018.09.27.)	① 기업 애로 해소, ② 소상공인 지원, ③ 진입·입지 규제 개선 등 31건 -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댄스포츠츠 학원 등록 허용 등	25건 (80.6%)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V) (2018.12.19.)	① 신산업·창업 촉진, ② 여가레저 활성화, ③ 기존 산업 애로 해소, ④ 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 비금융회사 간편 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새로운 수중 레저기구 기준 마련 등	23건 (62.2%)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2019.04.17.)	① 시장 진출입 활성화, ② 신제품 개발 활성화, ③ 기능성 표시제 개선, ④ 마케팅 경쟁력 제고, ⑤ 신산업 분야 등 31건 - 건강기능식품 원료 범위를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등	29건 (93.5%)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2019.10.14.)	①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② 기업 규제·애로 해소, ③ 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④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3건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 절차 명확화, 화학물질 관리 규제 개선 등	19건 (57.6%)
현장밀착형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VII) (2020.06.11.)	① 노동·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②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 ③ 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11건 - 특별연장 근로제도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등	7건 (63.6%)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 (2021.06.09.)	① 기업 부담 완화, ② 미래 대비 지원 등 29건 - 한·베트남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입지 규제 합리화 등	13건 (44.8%)
소계	총 개선 과제 270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과제 137건(50.7%)	

또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나 작은기업 등 규제혁신 사각 지대에 있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일반 영리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을 가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비자생협동조합 등)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자생력 제고 및 지속 성장을 촉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충남사회경제연대 등 현장에서도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는 조치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생현장 토론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 생존에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작은기업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243개 전 지자체와 지방기업 규제애로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해 연평균 약 2천여 건의 규제 애로를 처리하고, 지자체별 현황·규정을 전수 분석 후 우수 사례 확산 및 규제 일괄 정비를 통해 지역별 규제 편차를 개선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조성했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징계 요구 시 옴부즈만 징계 감경·면제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징계 감경을 실시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기반을 확대했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규제의 기본적인 특성인 역진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조정실에 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경우에는 기업 규모별 규제 차등화, 규제 완화, 대안 제시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2018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규제 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 차등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 비용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므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

###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020년부터는 대학, 연구기관, 관련 협·단체 등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점검 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154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했다. 규제개선·완화로 인한 수혜기업은 40만 9,313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비용 절감액은 9,376억 원으로 추산된다.

###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및 비용절감 추정액

연도	평가 규제 (건)	의견 제출 (건)	반영 (건)	의견 반영률 (%)	수혜기업 (개)	비용 절감액 (억 원)
2017년	359	32	14	43.8	1,986	152
2018년	649	50	31	62.0	32,408	1,342
2019년	1,161	34	20	58.8	60,191	2,544
2020년	1,625	86	66	76.7	233,562	2,433
2021년	1,254	32	23	71.9	81,166	2,905
누계	5,048	234	154	65.8	409,313	9,376



2021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 사례

연번	규제 사무명 (소관부처 및 법령)	주요 내용
1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요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p><b>규제 내용</b> 기안전 위탁업체 중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의 등록기준 마련 (자본금 2억 원, 기술인력 20명, 장비 15종 확보 의무)</p> <p><b>문제점</b> 관리대상 시설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 야기</p> <p><b>개선-반영</b>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 기준 완화(20명 → 10명)</p>
2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p><b>규제 내용</b>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 주류광고 금지 규정</p> <p><b>문제점</b> 주류광고가 포함된 소형간판까지 철거대상에 포함될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 가중 우려</p> <p><b>개선-반영</b> 옥외광고물 제한 범위 축소(자영업자 사용 소형간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p>
3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	<p><b>규제 내용</b>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일반요건 신설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2억 원 이상)</p> <p><b>문제점</b> 중소 택배운송사업자들에게 8억 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과도</p> <p><b>개선-반영</b> 자본금 기준 삭제</p>
4	수리 조선소 경비, 검색인력기준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b>규제 내용</b> 수리조선소에서 보안사고가 2년간 3회 이상 발생하거나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조선소의 경비·검색인력 1명 추가 의무 배치</p> <p><b>문제점</b> 코로나19로 수리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 및 추상적 요건에 따른 법적불안 야기</p> <p><b>개선-반영</b>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시기 1년 유예(2022년 2월 19일 시행)</p>
5	수출입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규제 내용</b> 폐기물 수출입자 등에 대해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정보 사항(컨테이너별 사진 포함) 추가</p> <p><b>문제점</b>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컨테이너별로 전송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 중복</p> <p><b>개선-반영</b> 컨테이너별 사진 제출 의무 삭제</p>
6	분리배출 표시 및 도안추가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p><b>규제 내용</b>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되어 있거나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된 것에 대해 새로운 표시(♻)를 하여 분리배출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p> <p><b>문제점</b> 멸균팩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은 '종이팩 배출함'과 같은 재활용인프라가 구축되는 추세에 역행, 새로운 표시는 구매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특히 외국 수출 시 악영향</p> <p><b>개선-반영</b> 멸균팩을 도포·첩합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X자 표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는 도안(별금)으로 변경</p>

백년가게 인기 메뉴 '자상한기업' 만나 미국 진출



국내 밀키트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A사는 2020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협약을 맺고, 백년가게 메뉴의 상품화와 판로지원 등을 약속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공식 인증점을 말한다.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상품화는 간편식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메뉴 위주로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적합한 백년가게 점포를 추천받거나 A사가 직접 점포를 찾아 요청한다. 매장이 선정되면 A사의 상품기획자가 점포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품화 진행 과정은 해당 메뉴의 고유한 특징과 맛을 살리기 위해 3~4개월간 진행된다.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백년가게에서 원하는 맛이 구현돼야 비로소 제품으로 출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백년가게 1호 상품인 B사의 낙지볶음과 낙지전골을 비롯해 4~5개의 백년가게 상품을 출시했는데 밀키트 출시 후 B사의 매출은 코로나19 와중에도 3배나 향상했다. 2021년 2월에는 수출도 시작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마트에 테스트 상품으로 수출 길에 오른 B사의 밀키트 제품은 출시 한 달도 안 돼 품절 기록을 세우며 인기몰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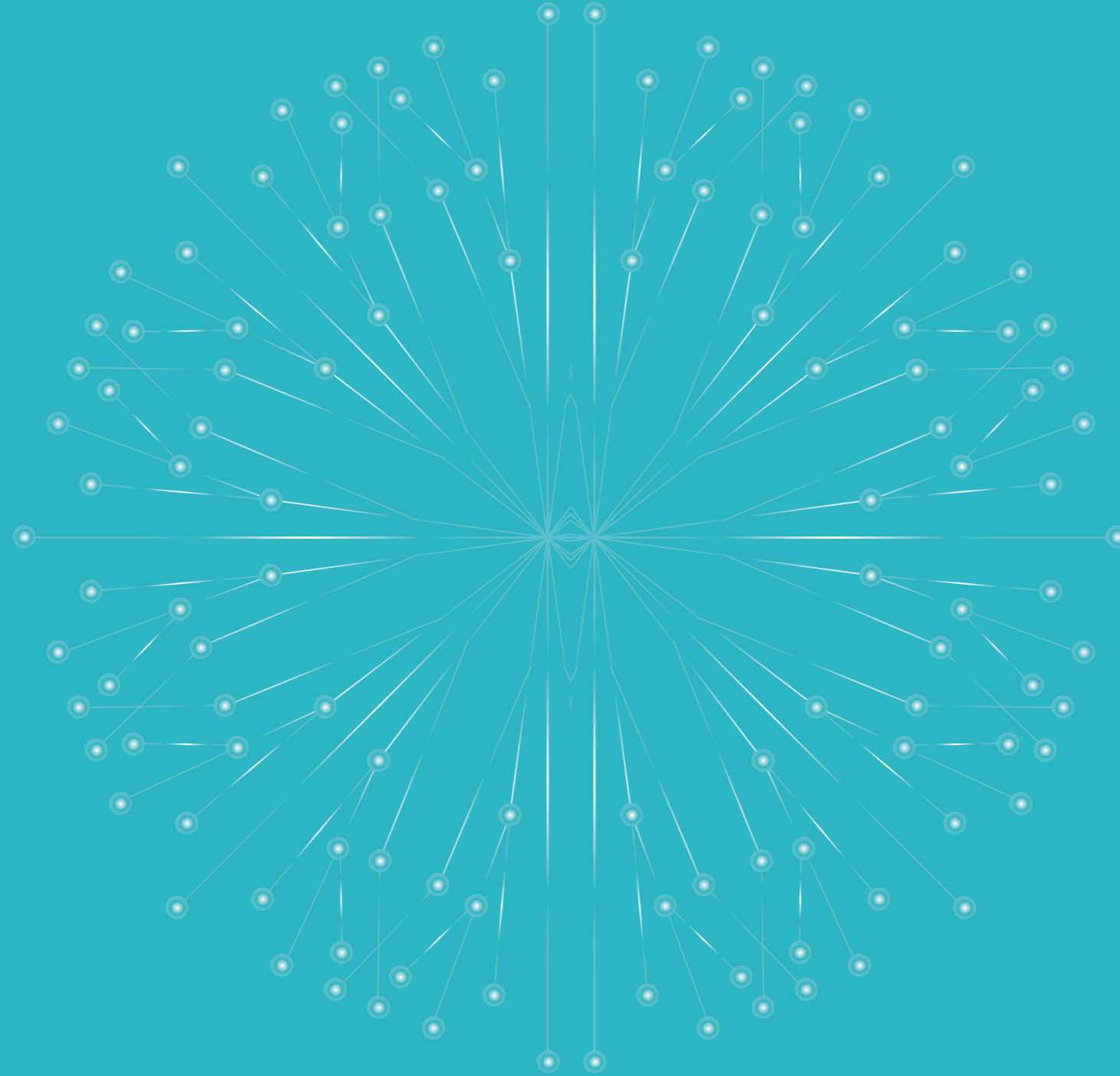


---

PART  
3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



01  
소상공인  
회복

02  
벤처·스타트업  
육성

03  
중소기업  
성장

04  
상생협력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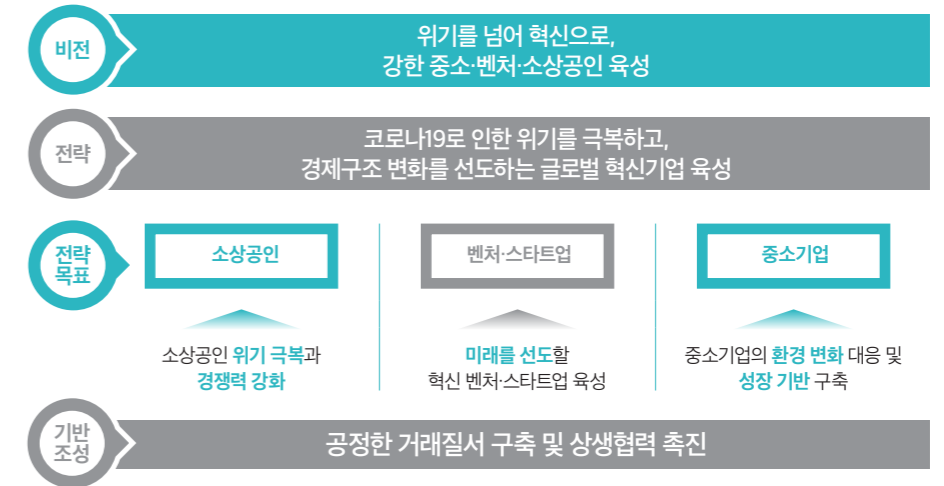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가 열어갈 내일

국민과 함께한 중소기업부가 2022년에도 더욱 세심하고, 역동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끝없는 터널을 지나면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더욱 체계화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와 성장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부가 열어갈 내일이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며 다짐입니다.



## 2022년 중소기업부 핵심 정책 방향



### 1.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2022년에도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제도 및 맞춤형 금융·재기지원 등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온라인·비대면이라는 소비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1)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 및 재기지원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용자' 2조 원 등 총 35.8조 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위기(경영 개선)- 폐업(사업 정리 및 대출금 부담 완화)- 재도전(재취업 및 창업) 등 전 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 전 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지원 예산(2022년)

- 위기: 경영개선 패키지 신설(238억 원)
- 폐업: 점포 철거·채무 조정 등 지원(420억 원) + 브릿지 보증(5천억 원)
- 재도전: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 원)

## 2)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 개를 육성하고,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을 34개로 확산하고자 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 보유 카드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또한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지원(2022년 52억 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2022년 60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2021년	→	2022년
0.35조 원		1.5조 원

## 3)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2022년 4월, 「지역상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 수를 400개에서 100개로 축소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누적)

2021년	→	2022년
28개		30개

## 2.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2021년에 이어 혁신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모험자본과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집중 육성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 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6곳을 '창업 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과 청년 특화 팀스(TIPS) 운영사 육성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액

2022년 1천억 원

## 2)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모태펀드가 약 1조 원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 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SW 개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법」을 개정하여 따라 복수의결권과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합병(M&A)펀드 및 중간 회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 벤처투자 관련 펀드 조성

• 모태펀드가 약 1조 원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

## 3)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

2022년에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5개 내외의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종료되는 실증사업의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1년	→	2022년
29개 (누계)		34개 내외 (누계)



### 3.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ESG 등 경제 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과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수출·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2022년 상반기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지원 범위를 업종 전환에서 신산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 모델 혁신까지 넓히고,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 확대

2021년	→	2022년
1,000억 원		2,500억 원

#### 2) 탄소중립, ESG 등에 선제적 대응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개선, 고탄소 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

2021년	→	2022년
2,397억 원		4,744억 원
		(약 2배) ↑

#### 3) 제조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K 지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 바우처(119억 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브랜드K 지정 확대

2021년	→	2022년
190개		300개
		(목표)

### 4.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 간,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사업영역 보호를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보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2)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 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중소기업 관련 단계까지 협의 주체를 확대하고 협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 3)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2019년부터 시작된 자상한기업은 2021년 총 35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에는 추가로 10개사를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 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자상한기업 협약 체결

2021년	→	2022년
35개사		45개사
		(누적, 목표)

# 다시, 국민과 함께 뛰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회복, 도약, 상생의 꽃을 활짝 피우며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는 회복의 온기가,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창업의 활기가, 중소기업에게는  
성장의 열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회복의  
온기

창업의  
활기

성장의  
열기

소상공인 회복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상생협력 기반 조성



# 소상공인 회복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아랫목까지  
퍼지도록 민생회복에 주력합니다.

1.

## 피해 회복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위기 극복·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자금 35.8조 원 공급

2.

##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통 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지원

3.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전통시장이  
매력적인 창업·쇼핑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역상권법 시행, 상권  
르네상스 28개 지원



# 벤처·스타트업 육성

코로나19에도 창업하는 활기찬 나라,  
2022년에도 이어갑니다.

## 1. 창업붐 확산

청년들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시범 도입 등

## 2. 벤처 생태계 강화

모험자본·우수 인재가  
모여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이  
강화됩니다.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확산

## 3. 지역혁신기업 지원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업들이  
성장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  
지역 선도기업 육성(100개)





# 중소기업 성장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합니다.

1.

## 사업전환 촉진

중소기업의 신사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전환자금 2,500억 원 공급,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소 신설

2.

## 환경변화 대응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ESG 자거진단 체계 구축

3.

## 성장기반 구축

공정 스마트화,  
수출·판로지원도  
강화합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브랜드K 300개까지 확대



# 상생협력 기반 조성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됩니다.

1.

## 온라인 플랫폼 상생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갈등도  
상생을 통해 해결합니다.

—  
상생협의회 운영,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

2.

## 납품대금 조정

원자재 가격 인상, 대금지연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상생결제 확대

3.

## 자발적 상생 협력

대기업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확산됩니다.

—  
자상한 기업 확대,  
상생결제 확산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 출범 5주년 백서

---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처 중소기업부

기획·집필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편집디자인·인쇄 제작 ㈜현대아트컴

---

\* 본 5주년 백서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Since  
2017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16-01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